

2009

제28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통일논문집

목 차

■ 최우수

- ※ 북한의 관료부패와 체제안정성3
정 태 은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 우수

- ※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철학적 정초(定礎) 연구37
- 배려윤리와 타자윤리를 중심으로 -
이 성 원 (인천대학교 윤리사회복지학부)
- ※ 북한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 연구105
- 2009. 4. 5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심으로 -
조 석 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장 려

- ※ 북한의 위기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147
- 2009년 위기 상황과 「전국선동원대회」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김 미 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 ※ 사회자본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1
- 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 미 경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장 안 지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투표참여225
양 효 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 ※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275
지 성 림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최우수>

북한의 관료부패와 체제안정성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정태은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북한 관료부패의 유형
- IV. 북한의 관료부패가 체제안정에 주는 함의
- V.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북한의 관료부패와 체제안정성

1990년을 전후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잇따른 자연재해와 식량난,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도 곧 붕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현재까지도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내구력 혹은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관료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관료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미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국가공급체계가 전면적인 파탄에 이르자 최상층의 일부를 제외한 주민들과 중하층 관료들은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았다. 중하층 관료들은 부패라는 일탈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의 관료부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사회에 만연한 관료부패가 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정권의 정당성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체제이행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료부패는 체제를 침식시키는 역기능과 체제의 모순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북한의 붕괴가 필연적이라는 전제하에 관료부패의 역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부패가 야기하는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연구의 편향을 가지고 오고, 북한 사회를 왜곡하여 잘못된 예측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의 전반적인 공급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관료부패가 체제의 위기로만 작용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료부패의 순기능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토대로 관료부패가 오히려 체제의 위기를 완화하는 기능을 해왔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관료부패 현실이 체제이행을 주도하거나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관료부패가 체제 안정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부패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부패행위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구조화된 관료부패는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관을 무력하게 만들며, 정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어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역기능을 한다.

그러나 북한의 관료부패는 식량을 비롯한 상품유통을 돕는 등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경직된 국가시스템을 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체제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관료부패는 사회통합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관료부패는 국가, 관료, 주민 간의 괴리현상을 완화하고 주민이나 관료들이 불만을 구체화하여 취할 수 있는 집단적 정치행동의 가능성을 낮춰준다. 셋째, 북한 관료들의 일탈행위가 비공식 경제활동을 촉진하지만, 뇌물이라는 보호세 징수는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수입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관료들은 관직을 통한 명예와 안정적인 수입을 선호하며, 체제를 위협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들은 국가의 영역을 극단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국가가 정해주거나 묵인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생계를 목적으로 이익을 전취하는데 머무를 것이다. 다섯째, 관료들의 비법적인 경제활동 또는 재산 축적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받고 있으며 적발되면 철직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료들은 더욱 국가에 의존한다.

북한은 국가기구의 권한이 방대하고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과 분배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과정이 관료제의 위계에 따라 결정·실행되는 체제이다. 그만큼 관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정도가 광범

위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체제와 국가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정치지도자 1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다. 이는 곧 국가의 영역 밖에서 관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관료들은 행정적 명령 대신 시장 기제를 도입하는 것을 권한 축소 및 이익의 침해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관료부패는 비공식적인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접적인 연관성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료들은 지위에 따른 권한 행사로 인해 뇌물수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국가의 통제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국가의 엄격한 통제는 이러한 인식을 고착시키고 관료들로 하여금 체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며 체제 유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I. 서론

1. 연구목적

1990년을 전후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북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잇따른 자연재해와 식량난,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북한도 체제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현재까지도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붕괴론’ 보다는 북한의 체제내구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내구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체제의 내구력 혹은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1당 독재의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관료제 및 관료의 행태에 대한 연구는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내구력에 있어서 관료변수가 중시되는 것은 국가의 모든 권한이 관료집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시장이나 자율적 이익단체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유·무형의 가치를 분배하는 권한이 관료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경제와 사회는 정치영역에 포섭되고 그 구분은 불분명해지며, 관료라는 일련의 특권적 엘리트에 의해서 국가 전반이 운영된다. 관료는 생산수단을 비롯하여, 경제정책, 간부인사, 의사소통 등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한다.¹⁾ 따라서 관료집단의 안정성은 곧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사회주의체제의 관료기구는 사회조직의 유일한 신경조직으로 체제

1)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p.79.

내에서 관료집단의 권한은 포괄적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관료제의 특징에 기인하여 관료조직의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관료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마르크시즘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부패는 자본주의국가의 구조적 모순에서 유발된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부패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국가가 부르주아들의 자본축적을 위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병폐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들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혹은 대실패는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파괴력과 확산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²⁾ 관료부패는 궁극적으로 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정권의 정당성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³⁾을 이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북한의 관료부패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각도 이와 동일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국가공급체계가 전면적인 파탄에 이르자 최상층의 일부를 제외한 주민들과 중하층 간부⁴⁾들은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았다. 1990년대 급격히 증가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부패실상이 국내에 알려졌고, 이는 북한붕괴론과 결부되어서 북한 체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관료부패가 국가전반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하여 체제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 관료부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도

2) 홈즈(Holmes)는 공산권 국가 23개국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부패와 체제 정당성간의 관계를 연구한바 있다. 그는 소련의 해체 원인을 체제의 부패현상과 그에 대한 반부패캠페인 진행과정에서 소련이 정당성위기에 내몰린 결과라고 밝혔다. 우준모,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부패현상: 현황과 전망,” 『슬라브연구』, 제20권 1호(2004), p.120.

3) 체제이행(regime transition)은 시간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서 하나의 정치체제가 다른 정치체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반면 체제전환(regime transformation)은 어떤 특정 체제가 다른 체제로 완전히 변화된, 완성된 형태를 의미한다. 최완규, “북한 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9권 2호(2006), p.8.

4) 북한에서는 ‘관료’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부와 관료의 구분을 크게 두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북한이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관료부패가 체제안정을 훼손하는 당위적인 측면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관료부패의 순기능, 즉 관료부패가 체제의 모순과 경직성을 완충할 수 있다는 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이 마비된 상황에서 북한의 관료부패가 체제의 위기로만 작용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관료부패 현실이 체제이행을 주도하거나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관료부패가 야기하는 사회적 파장과 일탈행위를 일삼는 관료들의 인식 및 태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관료부패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기존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탈북자 인터뷰 내용과 좋은벗들에서 발간하는 『오늘의 북한소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2. 기존 연구 검토

북한의 관료부패 실태를 전달하는 가십(gossip) 수준의 논의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 심도 있는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북한 행정연구의 일환으로 관료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관료들의 행태나 인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로서의 관료체계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관료들의 행태, 일탈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료부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료라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성철의 연구는 북한 관료부패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높여주고 관료부패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⁵⁾ 그는 관료부패의 형성요인, 유형, 변화양상, 사회적인 영향과 지도부의 대응을 분

5)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석함으로써 북한 관료부패가 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전개양상을 전망하고자 했다. 김성철은 북한의 관료부패를 개인과 조직의 영역, 경제적·비경제적 영역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그는 관료부패로 제2경제, 암시장은 발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대하며, 관료기구의 기능을 상실케하고 국가권위의 잠식을 가지고 온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도 북한 관료부패에 관한 가장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가 발표되고 1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대체할 만한 분석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채원호·손호중·김옥일의 연구는 탈북자 10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패에 대한 태도적 정의, 즉 여론중심적 개념정의 도출을 시도하였다.⁷⁾ 이 연구는 생계형 부패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당세포 조직의 부패가 확산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 관료제의 경직성, 공급부족, 폐쇄사회의 필연적 부산물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연구가 여론조사를 통해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북한사회 전반 및 북한 관료부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종육은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를 바탕으로 관료부패가 지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그는 관료부패의 확대와 일상화가 국가운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원인이며, 관료들은 시장정향적으로 변화하고, 이는 북한 지배구조의 변동과 체제이행을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한다.⁸⁾

위의 세 연구는 공통적으로 북한의 관료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관료부패는 체제이행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성철과 김종육은 부분적으로 관료부패가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할 가

6) 이를 3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7) 채원호 외,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1호(2006).

8) 김종육,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2008).

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세 연구는 관료부패가 야기할 수 있는 어느 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여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북한 관료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고찰 또한 부족하다.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에 있어서도 북한의 관료부패는 내구력을 훼손하는 준거로 활용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와 급격한 변화, 붕괴 현상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위기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왔다. 민족통일연구원은 브레진스키의 지표⁹⁾를 토대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측정하는 15개의 지표를 제시했다.¹⁰⁾ 사회주의국가의 위기는 곧 체제전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위기 측정 지표는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간주할 수 있다.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의 내구력 평가에서 연구자들은 ‘엘리트의 사기’를 북한의 체제위기 측정 지표 중 하나의 항목으로 선정하고, 북한의 관료부패를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과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으로 연관시켜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엘리트들의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낮아 ‘엘리트의 사기’ 항목에 있어 위기지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거로는 탈북자 면접을 통해 권력이 큰 기관의 간부일수록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가 많고, 직위가 높을수록 부패의 정도가 크며, 간부부패가 주민들의 보편적인 원성의 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¹⁾

9) 브레진스키(Z. Brezezinski)는 공산국가의 위기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①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의 매력상실, ② 미래에 대한 사회적 비판, ③ 생활수준의 하락, ④ 공산당의 사기 저하, ⑤ 종교 활동 증가, ⑥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충돌, ⑦ 경제부문의 사유화 증가, ⑧ 정치적 활성화 여부, ⑨ 아래로부터의 공개적인 다원화 요구, ⑩ 인권문제에 수세를 취하는 정권 등의 열 가지를 제시했다. 최완규, “북한 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pp.8-9.

10) 15가지의 지표는 공식이념의 기능, 미래에 대한 비전,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엘리트의 사기, 엘리트의 갈등, 관료기구의 기능, 사적 경제영역, 생활수준, 대외경제관계, 사회통제, 정치적 반대, 반문화형성, 외부정보의 유입, 안보자원의 확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으로 구성된다.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10-18.

2006년 통일연구원의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에서도 북한 간부의 부패정도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사회주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가는 북한사회주의체제 존속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패정도에 대한 시각이 중앙당 일부 핵심간부들을 제외한 모든 간부들이 부패했다는 주장과 대부분의 간부들은 묵묵히 체제유지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부패가 단순한 이익수수관계라면 반체제로 확산되지 않겠지만, 인민에 대한 착취의 성격이 누적된다면 체제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구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이용해, 북한 사회에 만연한 관료부패가 북한체제의 견고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¹²⁾

1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두 내구력 평가는 동일하게 북한에 만연한 관료부패가 체제의 내구력을 손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료부패는 체제를 침식시키는 역기능과 체제의 모순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북한의 붕괴가 필연적이라는 인식으로 관료부패의 역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부패가 야기하는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연구의 편향을 가지고 오고, 북한 사회를 왜곡되게 인식하여 잘못된 예측을 낳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료부패의 순기능을 바탕으로 북한사회 내 관료부패가 오히려 체제의 위기를 완화하는 기능을 해왔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11) 위의 책, pp.64-67.

12)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86-91.

II. 이론적 논의

1. 관료부패의 정의

관료부패현상은 특정 국가 혹은 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도덕성,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¹³⁾ 따라서 관료부패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도 다양하다. 학자들의 다양한 관료부패의 정의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서 파악할 수 있다.¹⁴⁾

첫째는 관료부패를 공직중심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 관점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부패로 이해한다. 베일리(D. H. Bayley)는 부패를 뇌물수수행위와 같은 부당한 배려에 의해 공직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유인한 경우라고 정의했다. 그는 관료부패를 뇌물수수행위와 관련해서 사익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파악했다.¹⁵⁾ 미르달(G. Myrdal)은 공공생활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 또는 공직과 관계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이기적으로 행사하는 행태와 수뢰행위의 모든 형태를 부패라고 규정했고,¹⁶⁾ 헌팅턴(S. p.Huntington)은 공직에 있는 관료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된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관료들의 행위를 관료부패로 보았다.¹⁷⁾ 맥물란(M. McMullan)은 공무원이 부당한 이유로 합법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금품을 받는 행위를 관료부패로 이해했다. 이상적 관계는 공적 목적을 진척시켜 나가면서 개인의 목적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관료부패를 유도하는 사민(간부가 아닌 일반 주민)의 태도와 목적, 그

13) James C. Scott,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 N.T.: Prentice-Hall), p.3. 김택, 『관료부패론』 (서울: 학문사, 1999), p.19에서 재인용.

14) A. J. Hidenheimer 역음, 김중위 옮김, 『권력과 부패』 (서울: 한빛, 1982)를 참고.

15) 김택, 『관료부패론』, p.20.

16) 위의 책, p.21.

17) 이종수, "포스트모던 사회의 관료부패 비판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1호(1999), p.191.

리고 사회전체로서의 태도와 목적 사이에도 간격이 있는데, 맥물란은 이러한 간격과 갈등으로 인해 부패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장중심적으로 부패를 정의한 부류가 있다. 관료가 광범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티만(R. O. Tilman)은 현대관료제를 시장경제의 강제적 가격설정모형에 비유하면서, 강제적 가격설정 모형을 지속하려는 관료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파악했다. 중앙집권적 분배기구가 수요와 공급간 심각한 불균형 앞에 파괴되고, 강제적 가격설정모형에서 자유시장모형으로 바뀌는 데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공익중심으로 관료부패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공익중심의 관점은 공직자가 금품을 비롯한 기타 보상을 제공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패로 파악하고 있다. 로고우(A. A. Rogow)와 라스웰(H. D. Lasswell)은 부패행위가 공공질서 체제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특수 이익을 공동 이익에 우선함으로써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앞서 논의한 다양한 부패의 개념 정의에서 두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부패가 사적 이익의 추구라는 점과 공직의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패 연구는 사적 영역이 방대한 자본주의체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물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에 이를 적용할 때 공직의 규범에서 이탈한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북한의 관료들은 사적 이익이 아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직을 이용하거나 공직의 규범에서 이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¹⁸⁾

18) 김성철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북한의 관료부패를 연구할 때 관료들이 부패에 관여하는 동기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조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pp.10-12.

2. 관료부패의 효과

가. 관료부패의 역기능

부패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도덕적 시각은 부패를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 반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공직자의 도덕성·윤리성을 강조한다. 부패의 유해한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개괄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부패는 정부가 세운 정책결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부패의 만연으로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증가하여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계획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패는 행정업무의 부진과 행정비의 인상을 가져온다. 관료부패로 인해 국민들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여러 차례 금품을 지불해야하며 자원배분은 왜곡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패가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지배엘리트와 국가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에 악영향을 준다는 견해이다. 네 번째는 부패가 사회범죄로 확대되면서 도덕적 기준이 쇠퇴하여 국민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부패는 중국에 정권의 정당성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나. 관료부패의 순기능

반면, 관료부패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부패의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부패문제가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부패행태를 연구한 기능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다.²⁰⁾

베일리(D. H. Bayley)는 부패의 효과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았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부패는 현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체제발전에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회발전에 유익한 기능

19) 김영중, 『부패학』, p.9 참조.

20) 김택, 『관료부패론』, p.26.

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패는 관료로 하여금 부족한 급여 수준을 보충해주어 관직에 머물러 있게 한다. 더불어 부패는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권력으로부터 제외되어 체제에 불만을 품은 개인이나 집단을 체제에 동화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권력을 가진 집단과 재력을 가진 집단 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²¹⁾ 결국 부패가 사회통합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나이(J. S. Nye)는 관료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용과 편익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부패의 비용이 편익을 능가하지만, 부패가 발전을 촉진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보았다. 부패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를 해결해 주어 경제발전, 국가 통합,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나이는 부패가 자원소비와 정치구조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사민과 지배엘리트들과의 괴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²²⁾

레프(N. H. Leff)는 부패를 관료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관료가 경제의 커다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익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가 기업가의 창업 의지에 무관심한 경우, 국가가 경제발전보다 다른 우선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 투자와 관련해서 정부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경쟁력의 부재로 생산능률을 향상시켜야 할 압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장애로 작용하는 경제정책을 가진 경우에 관료부패는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체제유지에 유익하며 사회통합적 기능을 한다고 파악했다.²³⁾

21)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6), pp.70-72.

22) Joseph S. Nye,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1967), pp.417-427.

23) 전수일, 『관료부패론』, p.33.

Ⅲ. 북한 관료부패의 유형

북한의 관료부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큰 도둑은 간부들 속에 있다,” “뇌물은 죽을 사람도 살린다” 라는 말들이 북한의 관료부패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공급체계의 붕괴는 최상층 간부를 제외하고는 중하층 간부들의 생존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일반 주민들만이 아니라 관료들도 고난의 행군 속에서 자력갱생식의 생존방식을 모색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영역을 벗어난 관료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의 관료부패를 연구한 김성철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자본주의체제와 달리 사적영역이 방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북한에서 관료부패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의 영역’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위한 관료부패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²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패와 더불어 비경제적인 부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는 북한의 관료부패를 ① 조직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② 조직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 ③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④ 개인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로 분류하고 있다.²⁵⁾

조직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의 경우는 공장·기업소의 관리자들이 운영의 재량권은 가지지 못한 반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기업소의 생존을 위해서 발생하게 된다. 자재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특히 우선순위가 낮은 기업소에서 자재 조달을 목적으로 뇌물공여와 같은 관료들의 일탈행위가 흔히 발생한다.²⁶⁾ 유사한 경우는 기업소들 간의 물물교환이다. 북한의 각 기관·기업소는 ‘후방공급문제’를

24) 그러나 자본주의국가라고해서 조직을 위한 부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도 ‘기관본위주의’라는 이름으로 관료들의 일탈이 존재한다. 단지 사회주의국가는 사적이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협소하고, 특히 북한은 총체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25)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pp.11-13; 35-55.

26) 서남일, “북한의 공장관리 현실: 계획은 없다 흥정을 잘해야 공장이 산다,” 『통일한국』, 1996년 6호, pp.86-87.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복지를 위해 기업소들 간에 비법적인 물물교환이 행해진다. 이 외에도 기업소 간 수주경쟁을 둘러싸고 관료부패가 행해지기도 하고, 생산능력을 축소보고 하거나 생산량을 과대보고 하는 경우가 있다. 간부들의 관심은 생계별이가 일차적이고 기관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어떻게 생계를 벌 것인가 궁리한다고 한다. 혼자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색하며 아래 단위들과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궁리한다는 것이다.²⁷⁾

조직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는 주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김일성·김정일 가계에 속한 인물을 경쟁적으로 영입해 조직의 후원자를 내세우거나, 동향인으로 결원을 채우는 등의 후원-수혜관계를 형성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관료부패 유형은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이다. 소비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과 유통과정에 관여되어 있는 간부들의 일탈과 부패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관료가 쌀과 같은 주곡을 횡령하거나²⁸⁾ 배급품을 유통과정에서 빼돌리는 경우²⁹⁾, 공장에서 제품화가 용이한 자재를 횡령하여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의 공공자원을 횡령하는 일탈행위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관료가 직접 횡령하지는 않지만 횡령을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조업 중단으로 노동자들 대부분이 선철을 훔쳐 팔아 생활하고 있는데, 보위대나 순찰대에게 뇌물을 주면 자전거로 실어 나를 수 있어 더 많은 선철을 빼올 수 있다고 한다.³⁰⁾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뇌물을 공여해야

27)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184.

28) 예를들어 2008년 함경북도 부령군의 한 간부는 사사로이 식량을 빼돌린 것이 드러나 해임되었다. 그러나 부령군 주민들은 “다른 비서들은 6-7년 넘게 빼돌려 먹어도 일 없었는데 올려처럼 제일 어려운 때 욕심 부려서 아예 망하는 길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는 간부들이 식량을 횡령하는 행위가 비밀비재하다는 것과 관료부패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53호(2008.11.18).

29) 관료들은 유통과정에서 안면이나 권위, 직권을 이용하여 국정가격으로 많은 양을 매점매석하거나, 제품의 일부만을 공식적인 유통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빼돌려 암시장에 유통시키기도 한다.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서울: 한울, 2000), p.173.

3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8호(2006.11.8).

하는 경우도 개인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유형에 속한다. 통행증 발급과 관련한 뇌물수수행위가 대표적이며, 근무처를 옮기거나 좋은 배치를 받기위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이혼을 위해서도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³¹⁾ 인사문제와 관련한 부패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면 관료와 주민간의 신뢰가 쌓이고, 관료가 주민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개인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는 사민의 비경제적 만족을 취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민과 관료가 연계된 경우이다. 후원의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와 생산목표와 관련해서 책임 회피하는 경우가 해당 분류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석들이 북한의 관료부패를 유형화하는데 용이하나,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의 경계, 경제적과 비경제적 부패가 중첩되는 등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내가 어느 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생존하자면 그 국을 위해서 그 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소집단이죠. 소집단적인 행동으로 나눠먹어요. 예를 들어서 현지지도 나가면서 시멘트, 목재를 얻으면 그것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지요. 이런 일은 혼자 못 하거든요. 그거 국에서 공동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또는 기업소의 경우 철근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목재가 있을 경우 목재를 팔아서 철근을 구입하지요. 그러면 목재를 수송하는 과정에 일부를 유출하여 돈을 만든다고요. 부, 위원회끼리 서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부, 위원회에서 거래를 해서 돈을 벌면 그 기관의 국장에서부터 부원까지 다 이득을 봅니다. 각 부, 위원회에 다 그런 특수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특수한 조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부원들이 사는 것이지요.³²⁾(강조는 필자)

31) 이혼 승인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40-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바친다고 한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14호(2008.9.19).

32)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184의 사례33 재인용.

소개한 사례는 순수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부패로 분류하기 적합하지 않다. 조직이익을 위한 부패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부패를 행한 경우에 속한다. 이처럼 위의 분석들에 이중적으로 속하게 되는 부패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³³⁾

IV. 북한의 관료부패가 체제안정에 주는 함의

관료부패가 체제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부패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부패행위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관료부패와 상품유통

북한 사회에 만연한 관료부패가 궁극적으로 사적영역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사회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겪었던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을 비롯한 총체적인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관료부패가 오히려 체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적교류와 상품유통이 극히 통제된 북한사회에서 관료부패를 매개로 상품유통, 특히 식량의 유통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33) 김종욱은 관료들이 정치자본을 통해 경제자본을 획득하는 것을 부패행위로 판단한다. 그는 정치자본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정치자본을 활용해 국가물품을 착복하고 암시장에 판매해 이익을 점취하는 행위, 정치자본을 활용하여 기관의 명의 및 사업권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 연줄문화를 통해 비공식적 사업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하도록 하는 부패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욱의 분류는 북한의 관료부패의 모든 유형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 관료부패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 변동 :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pp.383-385.

평안남도 성천군에 위치한 신성천은 고구마 도매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전국 각 지역의 고구마 장사꾼들이 기차로, 서비차로 고구마를 수백 kg 내지 수십 톤씩 사서 **고구마가 귀한 북쪽 지역**으로 가져간다. 고구마의 전국 유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객 열차이다. 열차원과 승무화물원들이 장사꾼들과 손잡고, 이른바 ‘합영장사’를 하고 있다. 장사꾼은 돈을 내고, 열차원과 화물원들은 수송을 맡는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다.

약 10여 분이라는 짧은 정차 시간에 수백 kg의 고구마를 열차에 싣느라 각 열차 칸과 역 구내는 소란스러운 진풍경이 벌어진다. 국가의 규정에는 여객열차의 수화물 취급은 차표 소지자 한 사람당 20kg 이하의 짐을 소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고구마 장사꾼들이 이 규정을 곧이곧대로 지킬 수는 없다. 이 때 열차원과 화물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백 kg 이상 되는 고구마를 신속히 열차에 싣는 것이 관건인데, 아무래도 일반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고, 명백한 규정위반이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열차승무원, 역전 보안원, 역전 검열대, 보위대, 열차 승무안전원, 여객 전무 등 열차 관계자들은 이미 뇌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고, 신성천 주민들은 고구마를 날라주고 실어주면서 돈을 받기 때문이다. 어느덧 신성천의 고구마는 여객 열차를 매개로 많은 이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고마운 명물이 되고 있다.³⁴⁾ (강조는 필자)

소개된 사례는 국가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부정부패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뇌물을 매개로 식량유통이 가능하게 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식량이 부족한 사회에서 뇌물을 통해 사정이 보다 어려운 곳으로 식량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부패가 국가체제 존속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 차원에서 보더라도 북한은 경제 전반이 부족 상태이다. 특히 계획 실행 과정에서 계획에 따른 물자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3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7호(2007.2.12).

관료부패를 매개로 한 비공식적 교환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 계획경제를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대신 비공식적 대안을 통해 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이다.³⁵⁾

2. 사회통합과 관료부패

베일리, 나이, 레프는 관료부패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국가와 관료의 관계, 관료와 주민간의 관계, 국가와 주민간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국가와 관료의 관계 측면에서 관료부패의 기능이다. 관료부패는 대개 청탁하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비롯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베일리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는 관료들에게 부족한 급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중반 심화된 경제난으로 관료들도 국가의 법제도와 규칙에 따라 생활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생계 해결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 경제 사정으로 고위급을 제외하고는 배급량이 부족하여 생활도 어렵게 되었으나, 관료들이 관직을 이탈하거나 국가에 대한 불만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한 예로 국경수비대는 비법월경자로부터 몰수한 골동품이나 기계 부속품을 중국에 넘기고 대신 술, 담배, 기타 필수품을 얻으며, 밀수, 도강, 탈북과 관련하여 뇌물을 챙긴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면 챙길 것이 생기기 때문에 국경수비대로 배치받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연줄을 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³⁶⁾ 뇌물이 관료들로 하여금 관직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공급체계가 무너져 관료들에게도 제대로 배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패를 통해 관료들이 국가에 품을 수 있는 불만을 개별적으로 해소하여 불만을 조직화할 가능성이 사전에 미리 방지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료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관료부패의 역할이다. 관료부

35)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p.128.

3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5호(2006.11.7).

패는 관료와 주민간의 결탁,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의미한다. 홈즈(Holmes)는 거대 관료조직이자 단일조직의 성격을 지닌 사회주의체제에서 관료부패가 관료와 일반 주민과의 유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³⁷⁾ 부패로 인해 때로는 관료들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뇌물을 요구하면서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미리 귀뜸해 주기도 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³⁸⁾ 이러한 주민과 관료간의 비공식적 관계는 두 계층 간의 괴리현상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경성기계공장은 자재가 없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조업이 어려운 상태였다.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못 준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에 공장 지배인과 기사장은 너무 오래돼서 녹이 슬고 다시 조립해 사용할 수 없는, 거의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중소형 기계들을 고철로 내다팔아 그 돈으로 식량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 청진시의 한 무역회사에서 밀가루 2톤을 주고 처리해주어 노동자들의 배급이 순조롭게 풀리는가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비사그루빠 검열에 걸려 밀가루는 량정사업소에 회수됐고, 공장 간부들은 공장 기계를 제멋대로 팔아넘긴 죄로 보안서에 넘겨졌다. …(중략)… 결국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일부 노동자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일이 잘 풀려 지배인과 기사장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당적 처벌만 받는 것으로 해서 풀려날 수 있었다. 보안서에서 나온 지배인과 기사장은 일일이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관대하게 처분을 받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지배인과 기사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³⁹⁾

경성기계공장의 사례는 관료와 주민 사이의 비공식적인 인적 관계로 두 계층 간의 괴리감이 완화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강도 회

37) 김성철, 『북한의 관료부패 연구』, pp.75-76.

38)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와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26.

3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64호(2008.7.10).

천시 기계공장의 사례도 유사하다. 노동자들에게 오랫동안 배급을 주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출근율이 떨어지자, 공장 간부들이 노동자들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별도로 자동차나 트랙터 부속품을 생산하는 규율에서 이탈한 행위를 한 것이다.⁴⁰⁾

마지막으로는 국가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관료부패의 기능이다. 나이(Nye)는 부패를 통해 주민이 국가를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인간화된 실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가 기층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료부패로 인해 불만을 가진 주민들을 체제에 동화시키고, 불만을 갖더라도 이를 집단행동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해당 관료에게 접근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통제라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북한에서 주민들은 반체제 조직을 형성하여 집단행동을 통한 변화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조직을 이탈하는 채널을 개발해 냈다. 지도부는 주민과 관료 간의 상호작용인 부패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해주어 주민의 정치적 행동주의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둔다.⁴¹⁾

3. 비공식 경제활동과 관료부패

관료부패가 체제이행의 동력이라 간주되는 것은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재산권의 비공식적 이행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부패유형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양상이 ‘생계유지형’에서 ‘시장친화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⁴²⁾ 관료부패는 실제로 비공식적 경제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소극적으로는 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노동자들의 직장 결근을 눈감아주거나⁴³⁾, 비법적인 시장 활

4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08호(2008.9.10).

41)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내구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66.

42)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 변동: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pp.379-380. 그러나 시장친화형 부패가 생계형 부패를 대체하였다고 이해하기보다 두 가지 유형의 부패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8.3 수입금’은 노동자의 출근을 비공식적으로 용인해주는 대신 노동자와 간부가 사전에 약정하

동을 허용해주는 식으로 시민들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경제 부문을 침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관료들이 시장과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는 관료가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자산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 예는 국유상품을 절취하여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이다. 분배과정에 관련된 관료는 식량, 비료, 국가가 공급한 디젤유를 빼내어 암시장을 통해 되파는 일탈행동을 한다.⁴⁴⁾

관료들은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사적 소유가 가능하도록 돕거나, 재산권의 비공식적 이행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인들이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해당 공장, 기업소와 관료들에게 상납하는 방식으로 관료와 시민들이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외화벌이를 위한 조개잡이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이때 수산사업소는 개인에게 명의뿐만 아니라 선박, 어장, 어업도구를 임대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틈을 타서 국가재산을 유용하여 집장사를 하기도 하고, 국가의 자재로 집을 지어 매매하면서 차익을 챙기기도 한다.⁴⁵⁾ 관료들이 사업에 직접 연관되어 외화벌이나 주택건설공사의 지분 또는 수익금을 배당받는 경우도 있다.⁴⁶⁾ 이러한 유형의 관료부패는 불법적인 성격이면에 자본주의적 관계 발달을 촉진하고 사용권과 수익권 등의 재산권 변동을 불러와 비공식적인 사유화를 독려한다.⁴⁷⁾

여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8.3 수입금'이라는 경제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공식경제로 노동력이 대량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엮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파주: 한울, 2008), p.187.

44) 최근에는 전기를 파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당일군, 보위부원, 배전반원이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공업용 전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군수공업용 전력을 일반 공장·기업소에 보낸다. 또는 국가가 6만 7천원에 공급하라고 했던 적산전력계를 주민에게 13만 2천원에 받아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70호(2009.3.17).

45)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pp.60-61.

46)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한국방송공사 남북교류협력팀 편,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p.207.

47) 따라서 북한의 관료부패가 체제이행의 지표라고 단언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경제활동, 재산권의 비공식적 이행과 관련된 부패 유형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는 탈북

그러나 관료부패와 연결된 비공식적 ‘보호세’ 징수 문제가 시장화를 촉진시키면서도 억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들은 비법적인 행위를 통해 개인 재산 증식의 기회를 갖는다. 이들의 사업은 거의 대부분 법규 위반을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간부들과 뇌물을 매개로 공생한다. 의류나 신발 등을 생산하는 가내 자영업자는 생업 유지를 위해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고 원거리 되거리장사꾼들은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보안원, 철도승무원, 군대나 보위부 초소 경비대원에 이르기까지 보호세를 지불하게 된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지불하는 뇌물(보호세)은 의도적으로 기대하지 않은 효과, 즉 비공식경제를 통해 개인들이 무분별한 수입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한다. 개인 재산이 축적될수록 뇌물의 비용 대비 효용은 감소한다. 예컨대 외화벌이를 통해 개인수입이 많아질수록 뇌물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검찰소나 보안서, 보위부 등의 감찰·검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커진다. 역설적으로 뇌물이 시민들의 개인 재산 증식을 제약하는 것이다.⁴⁸⁾

4.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

관료들의 부패행위가 체제이행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가 체제와 상충하느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료들이 국가의 통제력을 극단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공간 확장에 나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관료들은 뇌물이라는 것이 공직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여전히 간부층은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라도 공직에 따른 지위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상부가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관료들이 상부에 의존하는 정도도 약화되었고, 국

자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통행증 발급, 직장배치, 대학진학 등 개인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패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이를 체제이행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48)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pp.170-174.

지적·비공식적으로 부상하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급격한 체제전환보다는 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동시에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를 흔드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관료적 이익을 보존하는 방법은 체제가 존속하는 가운데 시장화에 따른 이익을 전취하는 데 머무는 것이다.⁴⁹⁾

돈의 위력이 세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고,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간부보다는 차관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고, 권력적으로 돈벌어 먹기는 간부들이 좋다.⁵⁰⁾

지금 돈 벌겠다고 날뛰는 사람들 보면 그건 참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대신 지금은 돈벌기보다는 그 돈을 써가지고 ‘도장 가지고 있는’ 직업에 들어가라고들 말한다. 북한에서는 도장 쥐고 있는 사람이 잘 산다. 뭐 하나씩 수입을 하려고 해도 위생방역, 수출입상품검사소, 세관 검사, 가격검사, 가격도 술 같은 것 상품하나 생산하려고 해도 생산지도 부에다 검열부에다... 도장 찍는데가 많은지... 사람들은 차라리 도장만 하나 가지고 있는 직업만 하나 따 가지고 앉아서 도장 찍어도 잘산다고 한다.⁵¹⁾

이러한 인식은 관료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뿐 국가체제 이외의 대안을 상정하지는 않는다. 북한 관료들의 이러한 태도와 인식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러시아나 중국의 관료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구별된다.

구소련 체제에서 1970년대 중반 이래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더불어 경제관리 위계구조 내에서 관료들의 태만, 왜곡, 부패 등 일탈행위가

49) 김중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 변동 :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pp.390-395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pp.169-180.

50)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p.209.

51) 위의 글, p.208의 탈북자 인터뷰 D7 재인용.

만연했다.⁵²⁾ 1980년대 후반, 체제개혁의 과정에서 러시아의 경우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관료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결여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관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전유하면서 국가로부터 이탈하였다. 관료들이 국가의 일부를 포섭하고 국가의 통치 능력을 약화시키면서 국가자산을 사적으로 전유하고 국가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한 것이다.⁵³⁾

중국의 경우 사유화를 배제한 국유재산권의 개혁,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개혁으로 관료들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관료들은 국가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성장하는 시장에서 부를 추구했다. 중국에서 지방관료들은 자신들의 공식 지위를 유지함으로써만이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당 관료는 당을 벗어난 생존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적 부를 얻기 위해 당에 의존하는 태도를 취했다.⁵⁴⁾ 따라서 러시아에서와는 달리 관료들은 국가 재산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하였다.⁵⁵⁾

북한 관료들의 태도는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와 다르다.⁵⁶⁾ 북한은 고도로 발달한 국가기구와 극단적인 빈곤의 상황에서 관료들에게 기회주의적 지대 추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효용 또한 낮다. 북한에서는 체제와 국가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정치지도자 1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다. 북한의 관료들이 특권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은 과대하게 성장한 국가라는 지배 기구

52) 이인성, “공산주의체제에서 엘리트구조가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 모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2호(1992), p.225.

53)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2009), p.130.

54) 위의 글, pp.130-131.

55) 이인성, “공산주의체제에서 엘리트구조가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 모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p.228.

56) 한병진은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와 제도적 특권을 분배하는 행위를 ‘지대추구’로 정의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관료들의 지대추구 형태를 국가포섭형, 국가귀속형, 국가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한병진,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국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제15권 4호(2008), pp.1-29.

이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관료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북한 관료들의 이러한 태도는 체제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강력한 독재 권력 유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중앙-지방의 관계에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중앙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영토가 방대하여 지방이 비교적 자율권을 지니고 있으나, 북한은 중앙의 통제력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관료들의 자율성은 최소화되고 중앙에 의존하는 정도는 높은 것이다.

5. 관료부패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관료들이 비공식 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증대하고, 관료들 사이에서 부를 축적한 돈주⁵⁷⁾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관료들이 비공식 경제행위를 묵인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상품유통을 주도하는 등의 비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⁵⁸⁾ 그러나 관료들은 비공식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고 있다. “간부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장사하는 것도 부끄러운 짓”⁵⁹⁾으로 인식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것은 관료들로서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이다.⁶⁰⁾ 간부들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받고 있으며 적발되면 철직을 면하지 못한다.

관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 또한 엄격히 통제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은 물려줄 수 있어도 재산은 물려줄 수 없게 되어있고, 허

57) 현실적으로 개인재산의 소유규모에 대한 기준이 뒤섞여 정의하기 모호하지만, 주로 개인재산을 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개인재산이 많고,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을 ‘돈주’라고 부른다. 최봉대, “계층구조와 의식변화,” p.193.

58)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113-117.

5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58호(2008.12.23).

60) 북한에서는 ‘장사는 천한일’이라는 인식이 있어 남자들도 장마당에 나가기를 꺼린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26호(2008.5.16).

용된 액수를 넘어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화를 입는다⁶¹⁾는 증언은 스스로 과도한 개인재산 축적을 억제하도록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강원도 원산시에서 추방된 간부나 무역일꾼들이 총 80여명에 이른다.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검열에서 도검찰소 소장을 비롯해 돈이 많은 무역일꾼들이 주로 걸렸다. 누군가 새집을 마련하는 즉시 조사가 시작될 정도로 부유층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⁶²⁾

이날 당국은 살림집은 새로 짓거나 호화주택에서 살고 있는 54명의 간부들을 해임 철직시킨다고 발표했다. 또 독채로 살던 간부 집에 제대군관 3-4세대를 입주시키고, 공로자 및 전사자 가족을 우대해 먼저 입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중략) … 이번에 집을 빼앗긴 간부들은 노동자 신분으로 새로 개발한 회령 탄광에 보내거나 농민으로 진출시켰다.⁶³⁾

고도로 발달한 국가 통제기구는 북한 간부들로 하여금 국가에 더욱 종속하도록 한다. 북한에서 검열을 통해 비법적인 행위가 적발된 관료들은 기존에 누리고 있던 명예와 부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계급적으로 하위계층으로 강제 이동된다. 따라서 무단히 반복되는 검열과 처벌속에서 관료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의 영역을 잠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주거나 묵인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소극적으로 생계를 위한 일탈행위를 잠행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V. 결 론

장기적으로 관료부패는 국가의 사회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관

61)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한울, 2006), p.134 탈북자 E6의 인터뷰.

6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87호(2009.7.14).

6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2호(2009.1.20).

을 무력하게 만들며, 정권의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등의 역기능을 한다. 기존 연구들은 관료부패를 북한 내구력 평가의 잣대로 활용하였고, 관료부패의 역기능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편향된 연구는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잘못된 예측을 낳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료부패의 순기능에 근거하여 경제난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관료부패가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윤희유역의 역할을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관료부패의 역기능을 경시하고 순기능을 향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경시되어 왔던 북한의 관료부패가 체제안정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의 관료부패는 식량을 비롯한 상품유통을 돕는 등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경직된 국가시스템을 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체제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관료부패는 국가와 관료, 주민 간의 괴리현상을 완화하고 주민이나 관료들이 불만을 구체화하여 취할 수 있는 집단적 정치행동의 가능성을 낮춰주기도 한다. 또한 북한 관료들의 일탈행위가 비공식 경제활동을 촉진하나, 뇌물이라는 보호세 징수는 사민들의 개인 재산 증식을 억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관료들은 지위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과 명예를 선호하며,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관료들은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부패를 일삼는 관료들의 행위가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우와 같이 관료들이 체제이행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은 국가기구의 권한이 방대하고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과 분배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과정이 관료제의 위계에 따라 결정·실행된다. 그만큼 관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정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관료의 행정적 명령 대신 시장 기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체제하에서 많은 부와 특권을 누리던 지배관료층에게는 권한 축소 및 이익의 침해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의 실행자이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은 곧 관료들이다. 이들에 의해 변화는 거부되기

나 왜곡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핵심 엘리트가 체제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제에서 중하급 관료들이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개혁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북한의 관료부패는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사민들의 비법활동을 눈감아 주는 간접적인 연관성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직접적·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료들은 지위에 따른 권한 행사로 인해 뇌물수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국가의 통제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국가에서 비공식적 경제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한, 관료들은 직접 비법적인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고 이는 체제이행의 시간표를 더디게 할 뿐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영중, 『부패학』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6).
- 김택, 『관료부패론』 (서울: 학문사, 1999).
-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 서재진,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내구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6).
- 정세진, 『“계획” 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 2000).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A. J. Hidenheimer 역음, 김중위 옮김, 『권력과 부패』 (서울: 한빛, 1982).

[논문]

- 금희연, “중국에서의 관료부패: ‘관도(官倒)’ 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1권 4호 (1993).
- 김성철, “사회주의 대변혁의 구조적 동인: 체계과학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3호(1996).
- 김영희·김병욱, “사회적 신분제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0호(2008).
-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 변동: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2008).
- 우준모,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부패현상: 현황과 전망,” 『슬라브연구』, 제20권 1호 (2004).
- 윤미량, “북한체제의 내구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I』 (서울: 한울, 2005).
- 이서행, “북한의 부패실상과 개방정책의 한계,” 『한국부패학회보』, 제10권 1호(2005).
- 이인성, “공산주의체제에서 엘리트구조가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모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2호 (1992).
- _____, “러시아의 체제개혁과 정치부패: 근대화 가설의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1996).
- 이종수, “포스트모던 사회의 관료부패 비판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1호 (1999).
- 전병곤, “중국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안정: 체제전환기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통권 제98호(2003).
- 채원호 외,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1호(2006).

-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한국방송공사 남북교류협력팀 편,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 _____,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역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파주: 한울, 2008).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역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한울, 2006).
- 최완규, “북한 체제의 지탱 요인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9권 2호(2006).
-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_____, “엘리트의 시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국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제15권 4호(2008).
- David H. Bayley,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9(December, 1966).
- Joseph S. Nye,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 – Benefit Analysis,” American Science Review, 61(1967).

[기타]

데일리NK.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호 - 292호.

서남일, “북한의 공장관리 현실: 계획은 없다 흥정을 잘해야 공장이 산다,” 『통일한국』, 1996년 6호.

<우수>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철학적 정초(定礎) 연구

- 배려윤리와 타자윤리를 중심으로 -

인천대학교 윤리사회복지학부 이성원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序 論
- II. 다문화시대의 등장과 통일교육의 변화
- III. 다원주의의 한계와 비판
- IV. 통일교육의 배려윤리적 접근
- V. 통일교육의 타자윤리적 접근
- VI. 結 論

【참고문헌】

[요약문]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철학적 정초(定礎) 연구

- 배려윤리와 타자윤리를 중심으로 -

세계화가 진행되고 냉전체제의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특히 2000년 이후 남북한의 관계가 화해·협력의 모습을 갖추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과거의 정치 이념적 안보교육으로부터 벗어나,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화해·협력 중심의 통일교육론」과, N세대 및 현대의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통일교육 방법을 맞춰야 한다는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론」과,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다원주의적(배려와 존중의) 통일교육론」이 언급된다. 현재 논의되는 가장 핵심적인 통일교육 논의로는 세 번째 부류인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론」이 언급되는데, 이는 시대 순서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통일교육들이 내용적 측면에서 가진 한계점을 ‘가치 판단에 대한 교육’이라는 요소로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북한에 대한 ‘사실교육’을 넘어서서 북한에 대한 ‘가치교육’을 다른 어떤 통일교육 방법보다도 직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기존의 통일교육들을 보완·대체시켜 준다.

그러나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은 다원주의적 속성 때문에 통일교육의 논의로는 한계점을 지닌다거나, 다른 통일교육에 비해 대체되기에는 올바르지 않다는 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은 추구하는 논의가 함양하고 있는 ‘문화상대주의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의 범위를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맞는 올바른 도덕적 판단 기준이 존

재함을 논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서 배려의 이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절차적 규범’에 의한 판단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해관계의 수준이 강하지 않은 개개인들 간의 크고 작은 사회적 현상들과 가치판단은 서로가 존중과 배려를 통해 무난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증이다. 이러한 논증은 북한의 체제나 정치적 담론과 같은 큰 범주에는 다문화적(존중과 배려의) 통일 논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다만 그 반대의 경우로 북한 주민들과 개개인들의 삶의 영역인 ‘작은 범주’에서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적 통일교육은 특성상 통일에 대한 커다란 담론의 판단기준으로는 작용될 수 없으며, 개개인의 사회생활과 문화의 영역에서 공동체가 다투지 않고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좀 더 나아가 우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존중과 배려가 왜 하나의 판단 기준과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북한을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다문화적 통일교육이 단순한 시대적 분위기에 의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고 유지해나가기 위한 역량으로써 당위적으로 요구된다는 철학적 논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길리건을 통하여 가치판단의 기준으로는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리고 나딩스를 통해서 배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원리와 요소를 파악하고, 실제 배려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방법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레비나스를 통하여 기존의 자아중심적인 이해관을 벗어나 타자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인간을 배려해야 한다는 인류 공동의 당위적 요소를 철학적으로 논증한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다문화적(존중과 배려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왜 다문화적 통일교육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가능한지 등에 대한 철학적 근거와 토대를 제공해주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의 방향이 정책에 의해 존립되거나 좌지우

지되었던 것에 비해 통일과 통일교육의 당위성을 정책과 시대적 분위기에 상관없이 철학적 논증을 통해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종적으로 논문은 화해·협력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문화적 통일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올바른 공동체와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정책’과 상관없이 다문화적 통일교육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이렇게 철학적 정초를 토대로 선 통일교육은 정책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통일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통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덕성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한 국토의 결합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삶과 사회공동체의 윤택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도덕성이기 때문이다. 도덕성의 정서·인지·행동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적 통일교육이 가진 정의적 측면과 함께 기존의 안보 통일교육이 가진 인지적 측면을 종합할 때, 비로소 통일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과 이상적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적 측면의 가치판단 기준과 방법론으로서 다문화 통일교육과 배려 윤리적 접근은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I. 序 論

20세기에 들어서서 전 세계는 글로벌시대(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국가 간의 문화와 산업의 교류가 오가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루의 시간만으로도 소통되는 이른바 ‘지구촌(地球-村)’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어떤 한 국가의 문화나 산업 등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국가의 사회문화를 바꾸기도 하고, 주력 산업이나 연구 산업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등 전 세계를 극변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통일교육도 많은 변화가 요청되었고, 변화를 새롭게 시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60~80년대의 과거 통일교육들은 안보교육의 측면에서 상호 체제 대립이나 경쟁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벗어나 통일에 대비하는 문제로 관심이 옮겨져 왔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paradigm)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며, 이제는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화해·협력·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큰 가닥이 잡힌 듯하다. 이는 통일교육이 과거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안보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를 중심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에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¹⁾

그러나 통일교육의 변화는 이른바 통일정책의 변화라는 큰 흐름에 맞추어 진행되었고, 그동안 통일교육은 국가의 정책이나 국제정세의 분위기 등에 맞추어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본질적인 특징은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정세나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는 현실적(사실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통일은 단순한 민족적 과제로서

1) 정희태, 「남북 화해·협력시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4권 제2호, 2004. 12), p.253.

특수한 형태의 정책, 학문적 분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적 윤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²⁾ 과거의 남북한은 문화적 측면 등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한민족이라는 특성으로 서로의 공동체를 화합하여 통일사회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대의 남북한은 사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성은 설사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일 공동체를 운영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우리는 자칫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동안의 통일교육들의 논의들은 주로 ‘사실적 측면’의 교육들로서 ‘남북한의 통일정책’, ‘국제 정세의 흐름’, ‘남북한 현실에 대한 자료들’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국토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그러한 국토의 결합에 의한 이름뿐인 통일이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통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국토나 정치라는 눈으로 보이는 사실적인 측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의식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정신적인 측면(가치적 측면)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곧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 측면’들의 논의가 아니라(오히려 그것은 통일 정책의 논의에 가까우며) ‘가치적 측면’들에 대한 철학적이고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준다.³⁾

한편 현대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의 흐름 중에서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경향 중 하나는 「다문화시대(多文化時代)를 고

2) 정창우, 『윤리와 논술1』, (서울: 울력, 2007), p.423.

3) 이와 같은 논의를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1권 제2호, 2008.11), p.136에서는 제도적 측면을 통한 정치적 통일과, 문화의 측면을 통한 이념적 통일의 구분으로 논의하고 있다. 오기성은 기존의 학교의 통일교육은 주로 전자의 측면에 치중했으며, 이제는 후자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증을 펼친다.

려한 통일교육 논의」⁴⁾이다. 현재 다문화에 관련된 통일교육 논의는 ‘다문화가정(多文化家庭)을 주제로 다루는 논의’, ‘다문화현상을 주제로 다루는 논의’,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주제로 다루는 논의’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 논의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쉬운 점은, 통일교육을 논거하는 철학적 기반이 정초(定礎)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막연히 “현대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므로 필요하다.” 등의 언변으로 논거를 시대적 요청과 분위기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⁶⁾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통일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통일교육의 근본적인 논거 부족의 문제는 과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⁷⁾ 이를테면 종전의 통일교육이 화해·협력·평화·

4) 본문에서 「」로 구성된 논의에 대한 표현들은 문맥에 따라 조금씩 이름을 달리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이는 실제로 그러한 ‘직접적인 단어의 뜻’의 범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의 공통된 통일교육 논의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5) 물론 이와 같이 ‘다문화’ 자체를 주제로 삼고 다루는 논문이나 학술서는 아직 많이 편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통일교육 논의에서 ‘다문화’가 주요 쟁점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인식되었다고 생각되며, 현재 발표되는 대부분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문(논의)들은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통일교육 논문은 양승현,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춘천교육대 교육대학원, 2007, 2), 구복실, 「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 접근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6, 2), 윤영돈, 「다문화·공동체 윤리와 통일교육」,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제18집, 2008.12)에 잘 나와 있으므로 참조 바란다.

6) 관련된 인용문을 하나 소개하자면 “특히, 세계화·정보화가 진행된 글로벌 시대에 종래의 단일민족주의나 순혈주의는 국제적 고립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여 다양한 문화를 지닌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용신, 「한국 사회의 다문화교육 지향과 실행 전략」,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제48권 1호, 2009.3), p.14를 예로 들 수 있다.

7) 오기성, 앞의 논문, p.137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통일교육 논의들이 기본적인 당위적 논거도 없이 주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에 있어서 ‘다름의 인정’이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도출되고 추구된 것이 아니라 논문(오기성)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라는 사실적 측면을 토대로 논증되며, 이러한 다문화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철학적 고찰을 통해서 당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환경을 통해서 비로소 등장했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철학적 고찰을 통해서 당위를 증명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당위성을 도출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올바르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철학적 정초를 통해 통일교육의 당위성을 증거하는 것이 통일교육이 국가적 정책이나 사회분위기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고유한 토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방법이 올바르다고 주장해 본다.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화해·협력·평화·공존이 각각 ‘무엇이기에 이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변은 제기하지 않은 채, 방법론과 사실논거에 기초한 통일교육론(주로 정책)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논거들은 화해·협력·평화·공존이 그저 좋은 것이고 통일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막연한 논증만이 있을 뿐이었다.⁸⁾ 또한 교과서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그저 올바른 것으로 ‘추구해야 함’이라는 교육적 목표만 있을 뿐 직접적인 철학적 성찰은 없었다고 생각된다.⁹⁾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논증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논문과 학술서가 편찬됨으로써 철학적인 고찰을 의도했던, 아니든 비교적 해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현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 논의」들은 다문화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이들 논의가 다문화현상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¹⁰⁾ 그러나 다문화와 다문화교육은 다른 성질의 것이며, 특히 다문화교육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¹¹⁾ 이러한 특성은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논의

8) 이러한 점이 나타난 이유는 본문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보다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는 통일정책에 대한 배경, 방향, 목표, 원칙, 성과, 평가 등의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검증·분석 가능한 사실자료에 입각하여 논의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런 연구에서는 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교만으로도 논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충분했으며, 철학적인 탐구는 논증의 대상도 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9) 물론 직관적으로 이것이 올바르다고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다만 진정한 화해·진정한 협력·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 혹은 올바른 화해·올바른 협력·올바른 평화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철학적 논증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0) 다문화현상에 관련된 담론은 크게 ‘다문화란 무엇인가?’,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이다. 김두정·김홍운,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p.154~155에서는 다문화주의자들이 다양성을 지지하지만 무엇이 다문화주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다는 점을 들면서 다문화(multiculture)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강희원,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4), pp.78~79에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다양한 입장들을 소개하면서 학자들의 다문화주의와 국가차원의 다문화주의도 소개하고 있다.

11) 다문화가 ‘~이다’라는 사실현상에 대한 담론과 탐구라면 다문화교육은 ‘~해야 한다’라는 당위(가치)현상에 대한 담론과 탐구로 이어지며 이 둘의 속성은 원천적으로 같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 다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것이 많지만 ‘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

가 다양성의 존중(尊重)과 배려(配慮)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깨달음(철학적 고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다원주의적 세계화의 모습 속에서 ‘그저 흐름을 따라(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문들은 주로 다문화교육의 특성,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¹²⁾ 이러한 특징은 통일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논의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 논의와, 전체 학생 및 정책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다루고 있다.¹³⁾ 통일교육의 논의에서 이제 하나의 고려해야 할 흐름이 된 ‘다문화주의’는 분명 간과하기 힘든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정말로 통일교육의 한 방향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제기된 이

한 논증은 ‘현재 우리가 다문화사회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다소 약한 논증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은 ‘사실’(한국이 다문화사회이며, 갈등과 대립이 있다)에서 ‘당위’(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를 유추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논문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한국에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왜 다문화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를 증명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권순희,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한국어교육학회, 2008), p.94에서는 “다문화시대가 되면서 다문화적 요소가 많아지며 다문화간 상호보완적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 기술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시민 양성이 요구되는 것이 현재 사회적 분위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교육에서 문화 문식성(해당 분야의 기본능력)교육이 각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의 문화이해를 통한 이익증대와 적응도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다문화가정 학생들과의 인도주의적 유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등의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증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철학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문화교육에 대한 방법론도 각계의 논문에서 각양각색으로 주장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문화적 통일교육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배려 윤리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철학적으로 논증하려 한다.

12) 물론 이러한 구분은 아직은 공식적인 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홍원표, 「한국적 다문화 교육의 발전 방안 탐색: 미국 논의의 수용을 넘어서」, (한국교육원리학회, 2008), p.95에서는 3가지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13)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여 다루는 논문들이 많다. 통일의 논의가 어느 한 쪽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는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다문화적 모습으로 다가 오면서 그저 도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단 50년의 세월 중 갑작스레 등장한 다문화적 통일교육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만큼 실제로 통일교육의 중심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심스런 질문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통일교육의 논의에서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 논의」의 중요성을 논증하고, 다문화주의의 가장 큰 핵심적 요소인 ‘다양성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어 ‘배려 윤리’의 논거로 철학적 정초를 세우려고 한다. 순서적으로 본 논문은 현대의 통일교육 담론들 가운데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러한 다원주의적 통일교육 논의에는 한계가 없는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배려를 강조한 통일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방법적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왜 북한에 대해 배려(배려교육)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증으로 나아갈 것이다. 먼저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 논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흐름을 통해 ‘다문화 통일교육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볼 것이며, 다원주의 비판을 통하여 ‘다문화 통일교육의 한계’를 설명하고 적용범위를 한정지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려’에 대한 철학적 정초로서 길리건(Carol Gilligan)·나딩스(Nel Noddings)·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논의를 언급하고 통일교육에서 정의적(情意的) 측면의 중요성과 배려교육의 가능성(방법론), 북한에 대해 우리가 왜 배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적(當爲的) 질문의 답변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는 곧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적합성을 등장배경, 한계, 그리고 비판을 통해 논증하고 이러한 다문화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배려’에 대한 교육철학적 토대와 기반을 재정초하는 작업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초작업은 앞으로 ‘다문화 통일교육 논의’에서 배려 교육적 측면에서 통일교육으로서 적합하다는 주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그 실효성과 효과

적 측면에서 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주로 ‘저학년’에 해당하는 다문화 통일교육의 논의와 ‘예제’를 소개할 것이며, 때문에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도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통일교육이 철학적 정초를 토대로 기반을 얻을 때, 국제정세와 국가의 정책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을 비판하고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통일교육의 고유한 위치와 위상을 위하여 도덕학자나 철학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는 점이다.¹⁴⁾

II. 다문화시대의 등장과 통일교육의 변화

1. 통일교육의 흐름

통일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탈냉전의 시대를 통해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보편적 가치추구의 국제질서를 도모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국제사회의 정세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世界化)라는 이름으로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으며, 이러한 분위기와 추세는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¹⁵⁾ 이를 통해 정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탐색

14) 이는 본 논문이 통일교육이 통일정책에 의해 지나치게 흔들리고 뒤바뀐다는 점, 즉 ‘제도적 통일 논의’가 ‘공동체(사회)윤리적 통일논의’보다 더 중심이 된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음을 뜻한다. 통일에서 두 측면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후자의 영역에 대하여 본 논문은 ‘배려 윤리’를 통한 철학적 논증을 펼치려 한다. 물론 논증 방법은 본 논문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15)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북한 핵 문제 등의 다양한 변화와 정책진행 등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는 정희태, 앞의 논문, pp.255~258을 참조 바란다.

도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했고, 특히 학문계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동안의(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의 주안점(主眼點)들과 각각의 문제점들, 혹은 강점들을 대략적(혹은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⁶⁾ 지금까지 논의된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과 주안점을 파악하고 그 논의들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히 알아낼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 앞으로의 통일교육에 필요한 핵심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국제정세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설득력이 있다면,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교육철학, 교육방법과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각각의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논점들을 살펴보고 이 논점들의 강점들과 문제점들을 해석하여 논의하는 방식을 취급할 것을 밝힌다. 특히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논의하는 입장은 1990년대 이후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¹⁷⁾

먼저 그동안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나누어 본다면 크게 3가지 부류(部類)로 구분될 수 있다.¹⁸⁾ 첫 번째 부류는 과거의 안보체제 중심

16) 대략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논문 안에서 그동안의 통일교육 논의들을 모두 참조·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때문에 이를 큰 범주를 통해서 분할 분석하려고 한다.

17) 그동안의 통일교육의 변천을 대략적으로 보면 반공교육시기(1948~1988), 통일안보교육시기(1988~1991), 통일교육시기(1992~), 민족 화해·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시기(1997~)로 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최성화,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단원 수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대구 :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2004, 2), p.8~13참조. 본 논문에서는 민족 화해·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시기(1997~) 이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통일교육논의들을 다루려고 한다.

18)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크게 3가지로 묶어서 소개한다. 이는 ① '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류, ②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방법론을 강조하는 부류, ③ 다문화시대를 고려(혹은 대비)하는 부류이다. 이러한 구분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나, 특별히 구분을 나눈 이유는 논의의 전개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며 각각의 논거들을 의도적으로 하나의 부류로 취급할 의도는 없음을 밝힌다.

의 통일교육에서 「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류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주장하는 부류들은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시각)의 전환’을 요청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방법론」을 주창하는 부류들로서 주로 ‘N세대’와 현대 학생들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통일교육방법을 만드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이 부류의 주된 관심은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통일교육을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빠른 변화와 이전과는 다른 경향성을 주목하고 이를 통한 통일교육방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론」을 주장하는 부류로서 작게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고려한 통일교육과, 크게는 통일이라는 것을 한반도의 특수한 이념교육이 아닌, 민주시민의 상호존중성과 타자를 배려하는 전인간적 역량의 교육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부류의 통일교육에서의 핵심은 통일이란 어느 한쪽이 먹고 먹히는, 또한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결합이 아니라, 상호가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형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며, 남북한의 지리적 통일이 아닌 인간에 대한 배려, 다양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올바른 공동체의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3가지 부류의 통일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크게 통일교육의 ‘목표적 측면’,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 그리고 통일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각각의 논의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①을 주장하는 논거의 논문(학설)은 ②와 ③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본 논문은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정책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경제학적 접근 등을 통한 통일방법 및 당위성 논증의 논의들은 다루지 않는다. 통일교육의 논의에서 ‘정책적인 모든 부분’을 접목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나 본 논문은 통일교육논의의 ‘정의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려 하기 때문에 이를 과감하게 제외했음을 밝힌다.

1)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논의

먼저 첫 번째의 부류를 살펴보면 과거 안보체제의 통일교육에서 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로서, 이는 현재 정부, 민간, 그리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들이다. 이 통일교육 논의들의 핵심은 패러다임(시각)의 전환으로서 그 특징으로는 ‘소극적인 통일논의에서 적극적인 통일논의’로, ‘정치 이념적 접근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으로, ‘주입식(注入式)·강의 중심에서 참여와 학습자중심’으로 논의하는데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시대적·환경적으로 이제는 남북한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화해·협력적인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과거의 적대적 관계에 대한 반공교육이 아닌 협력적 관계에 대한 통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한 근거로서는 통일을 속히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이고, 또한 통일 이후 야기될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여 그 혼란을 극소화하는 준비로서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표는 과거의 체제와 이념중심의 안보교육을 지양하고 남북 간의 상호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 대북 인식의 전환을 교육하는 것으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북한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된다. 또한 교육방법적 논의로서는 ‘사회문화 중심의 학습내용을 가진 교육’, ‘정부·민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통한 교육’, ‘참여와 체험중심의 교육’,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등의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19) 이러한 구분은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역량에 대한 교육문제로서 구분되어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정희태, 앞의 논문, p.260 참조.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전·후를 모두 포괄하는 역량과 기반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는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전후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북한에 대한 괴리감을 줄 일수 있다는 것과, 과거 통일교육의 북한에 대한 암기와 무비판적 사고 등의 기존의 교육학적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으며, 전인적(全人的)·민주적으로 북한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북한주민에 대해 인도적(人道的)인 측면에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 통일의 절차와 방법적인 논의에서 민주주의가 기본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데 학습자가 스스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 능력을 양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교육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가장 큰 지적으로는 북한의 생활문화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사회문화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 및 이념의 종속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배제한 통일교육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북한에 대한 교육은 사회문화적 접근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체제와 이념에 대한 학습교육의 선행을 간과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교육의 논의들은 과거의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을 뛰어넘지만 결국은 추가적(追加的) 통일교육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핵심적인 논의들은 북한의 체제·이념교육과 동시에 북한의 사회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들의 추가로 귀결된다. 특히 첫 번째 통일교육의 논의가 올바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이유는 국제정세와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지나친 정책위주적 해석에 근거한 교육이론을 창출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들은 현재 학교 통일교육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비교적 이견(異見)이 적은 편이다.

2)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논의

두 번째의 부류는 첫 번째의 통일교육 논의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써 통일교육의 방법과 진행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통일

교육 논의들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논의의 핵심은 통일교육도 현재 학습자들의 성향과 특성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올바른 통일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N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 방법론들이 있으며, 통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첫째, 현대 학생들의 통일 의식은 통일을 당위가 아닌 필요성의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둘째, N세대의 문화는 극단적인 독립심, 감정적, 지적 개방성, 포용성, 자유로운 표현과 강한 주장, 혁신, 성숙에 대한 열정, 탐구심, 기업적 이익에 대한 민감성과 신뢰 등을 가진다는 점. 셋째, 청소년층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은 매우 적으며, 그들 스스로가 흥미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⁰⁾ 이 부류에서 지적하는 현대의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주로 통일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것으로서 현행 교과서의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숙고보다는 당위적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정립되기 어렵다는 점과, 또한 현대의 통일교육은 쌍방향식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하는데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방향식 통일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N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²¹⁾ 그리고 이러한 통일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내용과 방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일상적 생활에서의 통일교육’, ‘체험학습·협동학습’,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등을 첫 번째 부류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한다. 또한 몇몇 기관과 학자들은 실제로 적용과 실험을 하고 이에 나타나는 효과와 진정성을 분석·발표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연구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²²⁾ 이와 같

20) 이는 정희태, 앞의 논문 pp.264~265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21) 관련 자료로서 이범웅,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8), pp.198~199의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청소년들의 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한 도표를 참고 바란다.

22)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성태, 「인천지역 학교통일교육·N세대 눈높이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215호, 2001.11), pp.69~71의 내용이 있는데, N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의 교육 효과를 서술하고 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통일교육 논의들이 과거의 대립·안보 위주 통일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논의였다면 두 번째 부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적, 적용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통일교육 대상자(학습자)에 대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를 중심으로 삼는 통일교육의 논의들은 작게는 학교에서의 글짓기·포스터 등의 ‘N세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한 교육방법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크게는 통일교육단체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까지 많은 부분에서 의의를 던져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교육 논의에서도 문제점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N세대’의 문화에 맞춘 통일교육의 방법들이 문자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막연함이 지적되며(특히 교사들이 직접 실행하는 측면에서), 적용된 통일교육의 방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지는 원초적인 한계점으로서 개별적인 학습자들에게 맞는 통일교육을, 단일 교사와 기관이 일일이 진행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이 제도(규모)상으로 가지는 한계성과, 반대로 학습자보다 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교육의 성과적(成果的) 측면에서 볼 때 더 효과적이고, 쉽고, 파생되는 결과물이 많다는 점(실용적이다)에서 상대적으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두 번째 부류의 통일교육 논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성과와 피드백(feedback)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²³⁾ 다른 지적으로는 통일교육에서 ‘사실교육’과 ‘가

23)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과 학술서는 주로 학생들에게 적용시킨 후 학생들의 평가나 기관·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하고 재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 논문을 소개하자면 이윤중,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통일교육단체간 적극적인 교류 필요하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217호, 2002.1), pp.61~63, 정창현, 「민간 통일교육 혁신의 유일한 해법 상설 통일교육기관 설립」, (민족21, 『민족21』, 제95호, 2009.2), p.168, 정희태, 「제9장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업 방법 개발·초등 도덕과 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PBL)의 적용」,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7권 제2호, 2007.4), pp.137~148, 이혁규, 「수업비평으로 여는 수업 이야기·분단 혹은 통일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의 풍경」, (초등우리교육, 『초등우리교육』, 제221

치교육'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N세대'를 고려한(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주로 교육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만 있을 뿐 교육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고찰이 매우 적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²⁴⁾ 이를테면 사실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보다는 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더욱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 'N세대'를 고려한(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사실교육이든 가치교육이든 무조건 학습자 중심의 체험과 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²⁵⁾ 또한 근본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이 사실교육인지 가치교육인지에 대한 구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저 학습자들에게 '북한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데 문제점이 있다. 통일교육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란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에 입각하여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북한을 이해하는 사실교육에서, 점차적으로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창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는 가치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데 'N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방법 논의들에서는 그저 북한 관련 '역할놀이와 언어체험', '사진과 영상을 통한 느낌과 생각해보기' '편지쓰기·그림 그리기' 등의 이른바 '학생들의 눈높이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 논의들의 관심은 학습자의 눈높이를 충실히 맞추으로써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괴리감을 줄여준다는 것, 학습자에게 통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심어준다는 것에만 의의가 있을 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양성해야 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춘 학습자와

호, 2008.7), pp.131~137을 참조 해 볼 수 있겠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전개의 편리를 위해 본문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다수의 공통적 논의들에 대해서는 출처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으려 한다.

24) 이범웅, 앞의 논문, p.209.

25) 이를테면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교육하는 것은 교수자와 교재를 통한 문자 학습과 원리 이해가 효과적이며 북한의 문화와 생활을 교육하는 것은 영상매체와 체험학습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각각의 학습 내용에 따른 교육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르게 적용될 때 오히려 효과적인 것인데, 학습자와 N세대를 고려한 통일교육 방법들은 이를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 또한 그 이유로는 방법상의 문제보다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일교육이 스스로 이념과 체제분석에 대한 이론적 교육을 지양하게 된다는 점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러한 통일교육 자체가 가지는 한계(학습자 중심 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는 진정한 통일 주체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이러한 통일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결국 통일이 아닌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 즉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논의들로 귀결된다.²⁶⁾ 북한과 통일교육이 그저 학교교육에서 신기하고 독특한 하나의 특수교육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 논의

마지막 세 번째 통일교육에 대한 부류는 「다문화사회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논의」를 주장하는 부류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논의들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통일교육들의 논의에 대한 회의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그동안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선의 확충 등을 통해 새롭게 논의하는 통일교육들이다. 이 부류의 통일교육의 핵심은 다양성과 존중성의 추구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통일(통합)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데 있다. 이러한 통일의 측면은 단순한 남북한의 지리적 통일뿐만 아니라 문화자체들 간의 통합은 가능한가, 남북한은 물론 중국·동아시아 문화들의 통합과 각각의 다양성은 어떻게 존중이 가능한가, 한국 사회 자체의 세계 곳곳의 문화적 통합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등에 대한 논의들로서 실제로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통합내의 다양성’을 달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연구된 이유는 한반도가 과거와 달리 이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경험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문화적 충돌과 가치 충돌을 통해 사회적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기존의 민족주의(民族主義)적인 당위적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통일교

26) 통일교육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지나친 논쟁일 수도 있으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앞의 주석 20번 참조), 현재의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점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육의 핵심을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아닌 ‘올바른 공동체’라는 측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통일사회의 문제점은 지금 한국 자체 내에서도 보이는 문화적 충돌과 갈등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일한반도의 내부 자체의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막지 못한다면 스스로 붕괴되고 통일의 의미도 없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이 통일교육의 목표는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통합과 진정한 화합의 달성에 있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통일이라는 것을 어느 특수한 과정과 결과가 아닌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국가적 역량(力量)에서 발현되는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²⁷⁾ 이러한 통일교육 논의를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세계화의 시대에서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과 갈등은 민주시민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통일한반도’의 사회도 의미가 없으므로 사회의 갈등과 충돌(차별)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의 존중(다양성의 존중)과 배려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의 역량임과 동시에 통일사회 이후에도 가장 필요한 민주시민의 역량으로서 이를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상황에서 보듯이 민족주의적인 통일의 당위성 교육은 받아들여지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가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어 올바르게 통일하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른바 ‘가치철학’을 교육해야 한다는 특성이 그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에서 이와 같은 논의들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에게 올바르게 문화와 사상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사회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으로써 이는 세계화와 다문화가정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 문화충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국내적 문화의 갈등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은

27) 이와 같은 논점은 권수현, 「사회통일교육현장1·통일 ‘이후’ 바라보는 통일교육 실시해야」, (통일한국, 『통일한국』, 제254호, 2005. 2), p.87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아무런 의미와 정당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²⁸⁾,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 통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감내할 필요성도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들에게 통일이란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통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될 여지도 있고, 따라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통일에 반대하는 부류가 탄생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타인과 타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배려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과(정의적 측면) 올바르게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판단과 태도(인지적 측면과 방법·실행)를 양성시켜 주는 것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부류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남북한 체제이해와 문화적 관심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과는 달리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기초를 두고, 민주주의, 평등, 인간의 권리 및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이해·존중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을 목표로 두고, 특히 다양한 문화들이 우월과 열등이 아닌 평등한 것으로서 서로가 차이가 아닌 다름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도와준다. 이는 오히려 차이 속에서 동질감(유사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이질감을 줄여줌으로써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통해 상호교류와 공존의 가능성(혹은 동기화)을 높여 준다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다문화사회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방법적 논의들은 주로 교수학습 방법은 과정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점, 단편적인 소재나 활동보다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또한 이러한 통일교육을 통한 이점으로는 한 사회의 집단주의와 폐쇄성,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점, 다양성이 가지는 풍부함과 발전가능성을 고양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점, 통일자

28) 실제로 조응태,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도덕 교육」, (한국도덕교육학회, 2006), p.60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국가애(愛), 안보의식 등이 일반 학생에 비해 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체뿐만 아니라 통일사회 이후의 공존과 공영(共榮)의 길을 이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해준다는 점 등이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교육방법에도 문제점은 지적된다. 먼저 가장 큰 지적으로는 남과 북의 문화가 단순한 문화적 다양성으로 설명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써 남북의 관계는 일반적인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 간에 생기는 다양성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곧 특수한 경우라는 지적이다. 이 지적에서는 우리가 외국의 문화를 한국과 타 국가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외국인을 만나볼 수도 있지만, 북한의 문화를 한국과 북한에 가서 경험할 수 있지 않으며, 북한 사람을 만나볼 수도 없다는 예시로부터 상당한 논거를 가진다.²⁹⁾ 또한 다른 지적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관용이 ‘아무 문화나 다 존중해야 한다’라는 상대주의적 관용으로 빠지는 위험을 지적하는 것으로 문화에 대한 관용은 상호 비교와 상호 비판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논의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를 고려하는 통일교육은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2. 다문화 통일교육의 성격과 위상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부류의 통일교육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통일교육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목표, 내용, 방법적 측면 중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서 앞선 3가지 부류의 통일교육 논의들은 비교적 시대 순서적으로 발전한 특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통일교육이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는 ‘통일교육의 목표’에 대한 고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삼는 통일교육논의」들은 새로운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고찰로써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논

29) 오기성, 앞의 논문, p.153에서 이와 같은 지적이 잘 드러난다.

의」는 비교적 간과되었던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서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기존의 안보, 남북한문화교육을 넘어선 민주 시민적 역량교육을 첨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세 부류의 통일교육 논의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은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류의 「새로운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의도와 달리 기존의 통일교육 내용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뿐더러 의존적, 혹은 선행적인 측면으로 기존의 통일교육 내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게 되며, 두 번째 부류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삼는 통일교육 논의」들은 ‘N세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실행에 앞서 그 내용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나 기준이 없다는데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며, 세 번째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논의」는 아직 새롭게 적용시켜야 할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들의 검증과 논증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³⁰⁾ 따라서 현대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증들과 주장들은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확고한 기준과 토대를 찾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앞선 3가지 부류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북한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사실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화해·협력력을 대비한 통일교육으로서 다문화시대에 맞춘 ‘역량 양성위주’의 ‘가치교육(철학교육)’이 뒤따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통일교육의 실행에서 현대의 학생들(N세대)에 맞춘 맞춤형 통일교육을 사실교육과 가치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유연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절충할 수 있다.³¹⁾ 결과적으로 현대의 통일교육의 핵심은 통일교육의 내용적

30) 본문의 요지는 세계가 변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통일교육의 직접적인 ‘내용’도 변모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증이 아직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그러한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기본 바탕이 될 교육철학(철학적 기초)의 토대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만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논거를 구성하고 있다.

31) 이는 사실교육(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적 토대)에서 가치교육(사실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통일의 당위성·필요성을 정립하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학습자중심의 현대식 교육방

측면이며, 이러한 내용적 측면을 가장 보강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세 번째 부류의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논의」가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논의」가 현재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의 공백을 ‘가치 교육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첫 번째 부류의 부족한 통일교육적 내용을 보강시키는 작용이 되고, 두 번째 부류의 교육방법을 직접적으로 실행시킬 내용과 소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²⁾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논의는 현대의 시민사회는 물론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방향성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다른 논의들에 비해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³³⁾ 앞선 논의에서처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일 이후에서는 우리가 통일공동체 속에서 공존할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어

법을 사용하는 절충안을 의미한다. 이때 ‘내용’적 측면에서 사실교육의 양과 질을 늘리는 방법은 북한에 대한 자료를 늘리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다. 반면 가치교육에서는 통일의 준비,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한 수많은 탐구와 판단기준 등 여러 가지가 추가될 수 있다. 사실교육이 ‘자료’라는 측면으로 국한된다면 가치교육은 ‘분석’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질과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가치교육이 더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가지 자료만으로도 수백 가지의 분석과 방법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의 하나의 방편으로 정의적 측면의 ‘배려교육’을 언급한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임에 동의한다.

- 32) 즉, 북한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이해방법을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삼음으로써 첫 번째 부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으며,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 자체가 하나의 주제가 되므로 이를 통해 두 번째 부류의 통일교육방법을 적용시켜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다. 결국 양쪽 모두에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는 방안이 세 번째 부류의 통일교육 논의임을 주장해 본다.
- 33)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의 부실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다문화, 다양성과 존중에 중심을 둔 ‘배려교육’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논의들이 현재 가장 최신의 통일교육 논의이기 때문에 시대 순서적으로 가장 우월하다든지, 혹은 이것만이 가장 최종(완결)적인 통일교육의 논의라는 입장에 반대임을 밝힌다.

야 비로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필요충분조건인 내용의 내용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첫째, 안보 교육적 측면(북한 체제와 사상)과 둘째,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측면(이하 사실교육)과 셋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통일사회를 이룩할 시민의 역량의 측면(가치교육)이 필수적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그동안 통일교육들의 논의가 안보교육과 사실교육, 그리고 시민의 역량의 측면 중 전자인 정부와 시민에 대한 사실적 내용(안보교육을 포함하여)들이었다면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후자인 통일사회를 이룩할 역량의 측면, 즉 정부와 시민에 대한 ‘가치적 내용’에 대한 것들이 된다. 첫 번째 부류(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 논의)에서 논의되었던 통일교육의 내용적 한계는 바로 셋째의 내용인 통일시대(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대비한 시민과 정부의 역량적인 고찰에서 대부분 ‘사실적 측면(경제력, 이념체제의 정당성, 국제적 힘의 논리, 실용성, 흡수통일논의, 손익계산 등)’에 대한 논의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이 부류의 논증들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새로운 일들과 정책방향들을 사실적 수준에서만 탐구하고, 학생(시민)들이 해야 할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시선들에 대해서는 그저 ‘필요하다’는 제기(提起)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이는 곧 당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적 측면에서 방향을 급선회해야 함을 논증하기 위해서 보다 근거가 확실한 ‘사실적 측면(특히 정치)’에 주목하여 이론들과 논증을 펼쳐야만 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더욱 많이 진행된(시대순서적으로 더 후대에 가까운) 세 번째 부류의(다문화화를 고려한 통일교육) 논증들에 도달해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부와 시민의 역량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정책수단, 이념적 정당화를 넘어선 실제 시민사회에서 수행 가능한 극히 작은 것들에 대한 필요성까지 요구되게 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북한의 어린이가 지금 당장 나와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곧장 대답하고, 대답을 넘어서 실제 행위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일반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나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우하며 공존해서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답을 알아도 거리낌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극히 사소하고 매우 일상적인 민주시민의 역량이 학교에서부터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는 크게 요구되지 않았던 교육으로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현대 학생들이 처한 현실이며, 또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나가야 할 관문이 되고 있다. 이때 도덕철학(교육철학을 포함해서)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도덕교육이 바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기 때문이다.³⁵⁾ 그리고 이러한 가치교육의 논의로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본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하여 ‘정의적 측면과 배려 교육’을 다룰 것임을 미리 밝힌다.

Ⅲ. 다원주의의 한계와 비판

1. 다원주의적 통일교육의 한계와 비판

앞선 논의에서는 통일교육 논의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그 중 가장 최신의 흐름으로서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주된

34) 이정우, 「다양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비교」, (한국사회과 교육연구학회, 『社會科教育』, 제47권 제3호 2008. 9), pp.307~30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학생은 다양성의 존중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구체적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다소 떨어지며,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교육철학적 내용은 모두 도덕철학적 내용과 관련 있는 것임을 밝힌다. 실제로 길리건, 나딩스, 레비나스 모두 도덕·윤리를 중심으로 논의한 학자들이다.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배려와 다양성의 존중을 추구하는 통일교육이 과연 통일교육의 한 축으로서, 특히 본 논문의 주장과 같이 다문화적 통일교육이 다른 것보다 중심으로 추구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몇몇의 사람들은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과 같은 새로운 시선들이 그저 세계화와 현대의 경향에 맞춘 일종의 아류(亞流)나 추가적 성격을 지닌 하나의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논의가 실제로 추구되어야 하는 이유와 한계점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에 대한 가장 큰 반발적 흐름인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를 테일러(Ch. Taylor)식의 강한 문화 다원주의의 폐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³⁶⁾

다문화교육과 배려, 그리고 다양성 존중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향·교육이 가진 문제점은 한 마디로 지나친 다양성의 추구가 폐해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무분별한 상대주의로 빠짐으로써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석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서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말로는 쉽고 좋으나, 그러한 것들이 현실 속에서 많은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은 사실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인해 사회 속에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입장에서 많은 다양성들은 우리의 사회를 발전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통합성을 해치고 이를 무너뜨리는 요소로서

36) 논의의 전개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는 선우현, 「다원주의는 사회적 진보의 징표인가? · 오늘의 다원주의적 한국 현실과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6호, 2003. 10)에 나온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우리가 치유해야 할 혼란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이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다양한 가치관과 개성은 그것이 옳던, 그르던 지금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이며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피해갈 수 없으며, 올바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의 존중과 배려의 측면을 양쪽에서 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³⁷⁾

2. 다원주의의 특성

다원주의의 실재를 다룰 때 한국사회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같은 다원주의가 발현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다원주의는 그 양상과 의미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오랜 기간 반민주적 군사독재의 정권에 놓여있었으며, 정부수립 이전 시기에서도 대체로 보수적인 정책과 사회이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혹은 다른 경향성들은 이른바 진보주의로 사회의 민주화를 대변한 표상으로 작용해왔다.³⁸⁾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다원화는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가치관·인생관 등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윤리적 신념들이 공존하는 윤리적 무질서를 초래하기도 했다.³⁹⁾ 종합하면 한국의 다원주의적 사회현실은 수직적 사회관계로부터 수평적 사회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잠정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다양성과 차

37)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로서 다원주의의 갈등이 ‘선우현’은 소극적·보완적 이념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사회적 진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적극적·대체적 이념으로 작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퇴보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현재 한국의 한국사회가 다원화된 세계체계인가에 대한 물음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논증은 ‘선우현’ 자신도 추정(presumption)으로 언명할 만큼 다원주의에 대한 하나의 해석일 뿐이지만 그의 한국사회가 잠정적으로는 다원주의라는 주장과, 강한 다원주의가 지닌 한계에 대한 비판 논변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다원주의적 사회로 직관하고, 강한 다원주의가 지닌 한계점을 설명하여 무분별한 상대주의와 다양성이 아닌 통합속의 배려를 논의하고자 한다.

38) 선우현, 앞의 논문, p.42.

39) 선우현, 앞의 논문, p.43.

이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순기능적이지만, 그것이 분열과 퇴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편적 보정 장치’를 필요로 한다.⁴⁰⁾ 이때 이러한 입장들·사상·다양한 이념들을 통괄하고 있는(밑바닥에 깔려 있는) 핵심은 바로 ‘이해관계(interest)’이다.⁴¹⁾ 여기서 만약 다양성과 차이점에 대한 충돌들이 단순한 가치관과 사상적 차이일 뿐이라면(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배려의 대상과 존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중대한 사회적 대립이나 갈등으로 나타나는 이해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대립이라면 양측이 쉽게 양보하기 힘들게 되므로 갈등과 충돌을 막기 위해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조정(調停)될 필요가 있다.⁴²⁾ 따라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것을 조정해줄 마땅한 보편적 보정 장치, 즉 ‘선협적이고 초월적인 보편적 잣대’가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보편적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기준이 당위적으로 요청(필요)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원주의의 존립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방법을 강구한다면 이는 ‘절차적 보편성’을 예로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편적 척도는 특정한 규범적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형식적인 형태’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동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담론적인 절차 과정에서만 다원주의의 존중과 보장이 가능하며,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일종의 민주적 절차들을 통하여 그동안 많은 사람들·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왔다.⁴³⁾

그러나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견해와 주장을 잘못된 것으로 봐야하는

40) 선우현, 앞의 논문, p.44.

41) 이해관계는 개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선우현, 앞의 논문 45 참조.

42) 이해관계는 단순한 흥미의 시선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일도 포함된다. 중대한 사회적 대립은 후자의 입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은 선우현, 앞의 논문, p.48 참조.

43) 관련 내용은 선우현, 앞의 논문, pp.46~49참조. 이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된 것 중 하나가 ‘법규범’이다.

가, 맞는 것으로 봐야하는가에 대한 가치적 성찰로서의 답안은 여기서 유추되지 않는다. 통일교육 논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상과 의견에서도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다원주의는 이를 용인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강한 다원주의’로서 우열을 따지지 말고 내재적 가치를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테일러(Ch. Taylor)식 다원주의를 예로 들 수 있다.⁴⁴⁾ 이러한 강한 다원주의는 상이한 문화는 서로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모든 문화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추상적으로는 올바르게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문화가 어느 한 쪽의 다른 문화를 흡수 또는 지배하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모든 문화나 입장을 존중하자는 주장은 궁극적으로 ‘주관주의적 상대주의’로 귀결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⁴⁵⁾ 결국 이것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나 입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의인데, 겉으로는 맞는 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규범적 당위간의 구별’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유한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다양한 신념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다른 문화권의 도덕적 현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다원주의(당위)는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따라서 차

44) 선우현, 앞의 논문, pp.51~53. 테일러는 차이의 존중에 기반을 둔 문화다원주의를 주장한 학자이다. 특히 테일러는 기존의 문화상대주의나 가치상대주의와 동일한 형태의 입장이 아니라 ‘약한 보편적 규범을 담보로 한 문화적 다원주의’를 주장한다. 그의 논의의 초점은 상대주의나 보편주의의나 구분과 대립이 아니라 동등한 존엄성으로서의 보편성에 기초한 상대적 존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모든 가치를 정당화시켜주는 상대주의적 오류(한계)를 벗어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문화의 힘의 논리를 인정함으로써(보편적 규범·기준이 자신의 문화가 됨) 타자의 문화를 침식·흡수할 수 있음을 정당화시키는 강한 문화상대주의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문화를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미국의 문화가 더 보편적이고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면 흡수해도 상관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힘에 의한 문화적 침식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즉 강한 나라의 문화가 그저 일방적으로 좋아 보이는 착각현상(상대주의)도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일러는 그런 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

45) 관련 내용은 선우현, 앞의 논문, p.54를 참조.

46)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해서(사실판단)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당위판단)는 논리적으로

이의 존중을 그저 ‘상대주의적 지향성’으로 보는 강한 다원주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윤리적 위기(갈등) 상황을 부채질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⁴⁷⁾ 이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 다루게 될 ‘배려 윤리적 관점의 다원주의’가 테일러식의 강한 다원주의적 논점과 같은 논리를 편성하고 있다는데서 주목할 만한 논의이다. 배려 윤리적 관점의 다원주의 역시 기존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는 담론 윤리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배려 윤리적 관점은 모든 가치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려하듯이 윤리적 상대주의나 가치 상대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⁴⁸⁾ 이러한 점은 통일교육의 논의에서도 북한의 체제와 질서를 그대로 ‘관용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로 인한 기아와 인권탄압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차이의 존중이라는 관용만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측면의 논의에서 북한 체제를 고유한 내적 가치를 지닌 체제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 위에서 남북이 상호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문화상대주의적, 배려 존중적인 입장)과, 북한의 체제를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으로 척결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문화의 우월성이 있다는 입장)의 대립으로 다시 나아간다.

3. 다문화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한계범위

이쯤에서 다시 처음의 논의 전개로 돌아가 보고자 한다. 먼저 다양성의 갈등의 발현에서 이것이 직접적인 손익에 대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사회적 문제나 충돌이 아니라면 우리는 배려의 대상으로서 바라볼 수 있고, 이러한 태도는 서로의 존중과 보호로서 긍정적인

도출될 수 없다.(자연주의적 오류)

47) 선우현, 앞의 논문, p.60. 논문 저자인 선우현은 한국 사회적 특성의 예를 몇 가지 들어 이를 논증하고 있다.

48) 선우현, 앞의 논문, p.66.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각각의 문화·가치를 지닌 규범이 아니라 절차적 보편성에 근거한 규범만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강한 다원주의나 배려 윤리적 다원주의는 이러한 점에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정책적 측면과 사회의 중대한 이해 관계적 측면에서는 강한(배려 윤리적) 다원주의는 적용되기 어려우며, 이는 절차적 규범으로 대체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관용(배려)의 대상으로 봐야하는가의 당위성 논증과 북한 주민과 문화에 대한 관용(배려)에 대한 당위성 논증의 범위는 같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체제를 논의하는 영역은 정치적 담론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며, 북한 주민과 문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사회적 현실과 직접적인 생활에 해당하는 작은 영역이다. 물론 문화는 사상과 정치체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개별적이고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화체계와 모습을 가진 북한 주민은 우리의 이해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자로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⁴⁹⁾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 담론이나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윤리 담론의 논의가 아닌 범위에서는 배려 윤리적 다원주의의 접근이 절대 옳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특정한 규범적 내용이 아닌 추상적인 논의로 빠지게 되는 절차적 규범의 논의로 이를(북한주민) 대하는 것은 마땅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사회·문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정치를 순종하는 주민들에 대해 절차적

49) 사람(개별자)의 영역에서 배려와 존중의 적용은 가능할 수 있으나 더 큰 범위인 문화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문화의 범주가 매우 개연성이 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인 단어로써의 문화가 아니라 각 개별자가 가진 문화(언어, 생활습관,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개별자의 문화와 북한 자체(사회)의 문화는 서로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개인의 고유한 성향과 사회의 문화가 반드시 같지는 않으므로) 이때 개별자의 문화가 결코 북한 자체(사회)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답변하며(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로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규범의 논의로서 ‘당신은 민주적이지 못하다(잘못되었다)’라는 판단과 대우는 앞으로 통일사회에서 서로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나아질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며 올바른 가치와 판단을 행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후 순서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규범적 당위 담론(가치 판단)에서 ‘배려 윤리적 접근’과 ‘절차적 규범의 접근’은 각각의 논의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다원주의의 논의를 테일러처럼 하나의 만병통치약같이 강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 즉 이것은 ‘통합 속의 배려’로서 북한을 큰 범위에서는 우리의 민주적 절차와 보편적 당위의 정당성으로 검토하고(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절차적 규범의 접근을 사용하고), 개별적인 북한 주민과 사회문화의 다양성은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서 접근하는(배려 대상에 대한 측면은 배려 윤리적 접근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⁵⁰⁾ 이런 점에서 ‘통합’의 논리는 주로 정치담론에서 많이 다루어질 수 있다면, ‘배려’의 논리는 주로 교육론과 사회생활에서 크게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배려’에 대한 논의를 통일교육의 논의에서 접근하며 특히 북한 주민과 문화에 대한 배려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철학적 토대와 근거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는 곧 우리가 북한의 수령 체제와 같은 통치체계를 배려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북한의 학생들과 문화,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적 시민의 배려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서 배려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려를 교육하고자 하는데 배려가 무엇

50)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로부터 통일의 과정과 전개는 보편적이고 절차적인 타당성을 줄 수 있는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철학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민주적 방식이 가치적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인 방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과 각계의 문화(우리가 충돌하게 될 일상생활의 문화)는 배려와 존중의 대상으로서 민주적 시민의 역량(배려 윤리적 접근의 기량)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 모른다면 그런 통일교육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수많은 다문화통일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일교육,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방법론 등에서 언급되지 못했던 ‘다양성 존중과 배려’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논거이며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배려’가 실제로 가능하지 못한 것이거나, 문자 상으로만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든지, 서로가 보편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개념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추구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길리건, 나딩스, 레비나스의 철학적 논거들을 통해 배려란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증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V. 통일교육의 배려윤리적 접근

1. 길리건의 배려 윤리적 접근

길리건의 도덕윤리철학은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에 반발하여 나타난 비교적 최신의, 그리고 독특한 도덕철학(교육학) 이론이다. 길리건의 이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도덕성에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둘째는 도덕성은 정의, 권리, 공정성, 규칙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 관계, 조화, 배려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먼저 제기된 도덕성에 성별(性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현대의 다양한 분석과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설득력이 떨어진다.⁵¹⁾ 그러나 도덕성에 책임, 관계, 배려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그의 이론은 콜버그의 이론만으로

51)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경기: 인간사랑, 1996), p.300을 참조. 길리건과 나딩스는 특히 여성적 측면의 도덕성을 논의하는 측면이 강한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한계성(오점)을 인정하여 여성 주의적 도덕 논의를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생략하기로 한다.

설명되어지지 않고 또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을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윤리학에서 도덕성의 개념 속에 상호연관성, 조화, 비폭력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킴으로써 도덕성에 대한 개념화 및 이해 자체를 넓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⁵²⁾ 이러한 부분은 인간이해의 측면에서 도덕적 인간이란 기존의 정의(正義)의 원칙에 입각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상을 뛰어넘어 타인의 복리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는 인간상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민주시민, 혹은 올바른 전인(全人)에 대한 뚜렷한 목표상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곧 교육의 목표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즉 교육목표에서 전인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의와 원칙의 인간’을 뛰어넘어 ‘관계와 배려의 인간’으로 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길리건 이론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은 정의뿐만 아니라 배려성과 함께 구성된다. 둘째, 정의와 배려는 각각 도덕적 문제를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이며, 각각 서로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셋째, 정의에 의한 윤리는 법과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이며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자아와 자율성, 그리고 분리의 이해관계에 의한 도덕적 접근을 보여준다. 반면 배려에 의한 윤리는 대인관계와 상호반응에 중심을 두고 상호의존과 결합(배려), 각각의 특별한 자기이해,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구체적 책임에 의한 도덕적 접근을 보여준다.⁵³⁾ 예를 들어 임신중절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태아와 임산부간의 ‘권리의 문제’로 보는 시선이 있는가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임의 문제’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콜버그의 도덕 판단의 경우 이러한 도덕적 판단들의 다양성의 존재를 무시하고(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정한 정의·권리적 측면을 중심으로(길리건의 직접적인 주장으로는 남성 편향적인) 해석한다. 길리건이 지적하는 콜버그식의 도덕판단의 문제점은 이들의 논

52) 앞의 책 p.307참조.

53) 앞의 책 pp.287~290.

의가 배려 윤리적 측면을(길리건의 직접적인 주장으로는 여성적인 태도들을) ‘독특함’, ‘다름’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결함’내지 ‘열등함’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배려 윤리는 기존의 도덕적 판단들의 맹점(盲點)들을 드러내고, 다양한 시선의 접근성의 필요성을 이끌어 냈다는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기존의 도덕적 문제해결(가치적 문제해결)의 방법론에서 칸트·콜버그식의 정의 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도덕적 문제해결(가치적 문제해결)의 방법론도 새롭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길리건의 논의는 도덕성에 대한 논의이지만 이는 결국 인간 이해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길리건의 이론의 핵심은 인간에게는 정의, 권리, 원리, 규칙성 등의 요소(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 관계성, 동정심, 배려 등의 요소도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성격적 모습이 아니라 도덕적 추론과 원리를 적용시키는데 가장 원천적으로 작용하는 주요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에 있다.⁵⁴⁾ 이것이 현대의 인간이해(도덕성이해)에 중요하게 작용된 이유는 기존의 칸트·콜버그식의 인간이해(도덕성이해)에서 ‘정서’의 역할이 도덕성의 구성요소가 아니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게 취급된 것에 비하여, 배려윤리에서는 ‘정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다는데 있다. 이는 현대의 도덕성의 구성 3요소(인지, 정서, 행동)에서 이른바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정서’에 대한 의의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전인교육 및 도덕교육에 있어서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⁵⁵⁾ 왜냐하면 기존의 도덕적(가치적)이론이나 교육은 지나치게 인지적인 요소(정의, 권리, 원칙, 규칙 등)로 해석됨으로써 실제 도덕(가치)교육에서 배웠으나 행하지는 않는 맹점이 발생해왔었는데, 이를 보완할 새로운 관점이 비로소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⁵⁶⁾ 현

54) 박병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울력, 2002), p.52.

55) 도덕성의 3요소로 인지, 정서, 행동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현대 도덕철학(교육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56) 이러한 것은 소크라테스, 칸트, 콜버그의 논의에서 주로 발생하는 ‘알면 행한다’는 ‘주지주의(主知-主義)’적 입장의 맹점을 나타낸다. 인지적 관점을 중시여기는 입장에서는 머리로 아는 것(인

대의 도덕철학자 혹은 도덕 심리학자들은 콜버그식의 도덕적 추론 접근방법과 길리건식의 도덕적 추론 접근방법이 서로 대립이 아닌 통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⁵⁷⁾ 이러한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은 사회학과 교육학에도 같은 의미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인간의 ‘정서’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시작하게 하는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길리건의 이론들이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한데 첫째, 민주시민과 올바른 전인교육의 목표(내용)에는 정의와 권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배려와 관계성을 인지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가치판단에서는 특정한 판단기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판단의 시선들을 고려하고 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정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길리건의 논의는 결국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다양성 존중과 책임교육, 정의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등)이 실제 교육과정으로 활용되기에 올바르다는 철학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일교육과 대다수의 도덕·윤리적 교육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이러한 논의는 통일교육과 도덕·윤리적 교육이 ‘정의적 측면’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논증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길리건의 논의만으로는 통일교육을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왜냐하면 길리건의 이론에서는 인간에게서 배려윤리의 측면(정의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관계’에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까지

지)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행위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입장을 가지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올바른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고 행위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지론만 가지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당위에 대한 논증을 펼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다.

57) 박병기 외, 앞의 책, p.307.

는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⁵⁸⁾ 또한 길리건의 배려윤리는 윤리적 상대주의로 이끌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이나 특별한 관계, 상황적 논리를 내세워서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리건이 주장한 인간의 배려 윤리적 측면에서는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상대주의적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2. 나딩스의 배려 윤리적 접근

나딩스는 배려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 것이며 실천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한 교육철학자이다. 나딩스는 길리건이 주장한 인간에게 배려적 요소가 있다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며,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전개한다. 먼저 나딩스는 ‘배려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 내용을 설정하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첫째, ‘배려’에서는 ‘배려를 해주는 사람(배려자)’과 ‘배려를 받는 사람(배려당사자, 피배려자)’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 둘째, 배려를 받는 사람(나를 제외한 타자)과 나의 구분은 기존의 감정이입(empathy)인 투사(projection) 행위를 넘어선 수용(reception)을 의미한다는 것⁵⁹⁾. 셋째,

58) 실제로 길리건의 논의는 인간의 정서와 관계에 대한 고찰을 사회학과 교육학에 시작하게끔 하는 시발(始發)적 요소로 작용했을 뿐 그 자체로 방법론적 측면이나 심화된 교육학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59) 기존의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한다’라는 뜻의 감정이입은 내가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위(생각)로서 일종의 배려적 행위가 되는 것이지만 이때의 문제점은 타자를 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점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 타자는 나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맹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가 배려하겠다고 한 행위가 타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폐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려적인 행위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행위가 되는 경우를 실제 현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가 나를 기준으로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수준인 감정이입을 넘어서 타자의 기준에서 행위를 직접 헤아릴 수 있는 수용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 박병기 외, 앞의 책, pp.314~315를 참조.

배려를 받는 사람의 역할도 배려를 해주는 사람만큼 중요하며, 이 때문에 배려 상황에서의 구체적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 넷째, 최종적으로 배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려를 해주는 사람의 배려’와 ‘배려를 받는 사람의 인정(recognize)’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나딩스의 이론적 구성은 ‘배려’가 배려자의 일방적인 태도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자와 배려당사자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현실적인 핵심을 간과한 것에 의미가 있다. 즉 배려는 배려자가 배려하겠다고만 해서 배려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당사자(피배려자)에게 적합한 배려가 시도되어야만 의미가 있으며, 또한 배려자의 배려시도에 응하여 그 배려를 수용하고 이에 반응하는 배려당사자(피배려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⁶⁰⁾ 결과적으로 배려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것이 되며 이때 배려자가 배려당사자를 올바르게 고려하기 위한 실제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게 된다. 따라서 나딩스의 이론에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적 내용’으로서는 ‘관계(배려자와 배려당사자의 속성)’와 ‘상황에 대한 이해(구체적인 상황적 요소)’, 그리고 ‘가치적 내용’으로서는 배려를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는 ‘심성(정의적 요소)’으로 귀결된다. 이는 길리건이 인간에게는 타인을 배려하거나 관계를 중시하는 도덕적 속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 사실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한다면, 나딩스는 그러한 도덕적 속성 중 ‘배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으로써 배려를 논증하는 데에는 ‘사실적 내용’과 ‘가치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0) 이는 배려의 연속성에 대한 논증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배려자의 행위에 배려당사자(피배려자)가 관심과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배려가 지속될 수 없다는 데 핵심이 있다. 박수가 마추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배려자의 행위에 배려당사자가 감사의 표시나 자신이 배려를 받았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배려자는 자신의 배려행위가 옳은 것인지, 실제로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계속적인 배려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배려행위에 대한 심리적인(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도 같이 작용된다.

나딩스의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사실적 내용’으로서의 이해는 첫째, 배려자와 배려당사자의 양자가 서로 다른 태도·필요성·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둘째,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을 매개로 관계를 맺게 되므로 배려자는 당사자의 상황과 그의 구체적 요구를 무엇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 셋째, 배려자와 배려당사자는 특정 배려(사건) 동안에는 비동등적·비대칭적 관계이지만 이 관계는 불변이 아니라 서로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배려를 올바르게 성사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이해로써 ‘배려’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정보력(혹은 판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한 것이다. 즉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만 가지고서는 배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올바른 배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려자가 배려당사자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과 입장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요구상황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려자와 배려당사자와의 관계성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배려와 배려당사자의 관계는 불변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타인을 배려할 수 있지만, 내일은 타인이 나를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다.⁶¹⁾ 이는 배려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배려자가 배려당사자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전달자라는 측면에서) 비대칭적인 관계가 되지만 배려자와 배려당사자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 유동적인 관계일 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관계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배려란 우리가 어떤 교만이나 지위(地位)적인 특성으로 하게 되거나, 혹은 그래서 해야 하는 ‘특별한 것’이

61)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친구를 위해서 청소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일은 친구가 나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거나 간식을 사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식의 상호적 작용을 보여 주기도 한다. 다만 나딩스의 논의는 반드시 그렇게 상호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아니라 상호의 입장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유동적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는 배려자가 배려대상자보다 항상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의 배려 상황에서 배려자의 위치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서 배려자의 일방적인(무거운) 도덕적 책임(부담)을 낮추고 배려당사자의 위치를 추후의 배려자로서 격상을 시킴으로서 상호의 위치를 동등하게끔 만들어준다.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동등한 관계와 인간에 대한 존중 속에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가치적 내용’으로는 배려를 수행하려는 마음인 ‘심성(心性)’이 언급된다. 나딩스에 따르면 인간의 배려를 행하려는 심성은 누군가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거나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자연적인 심성이라고 한다.⁶²⁾ 따라서 나딩스에 의하면 (길리건도 마찬가지) 인간의 배려심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따로 새롭게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⁶³⁾ 그러나 나딩스는 인간의 배려심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동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우선순위, 양과 질에서 차등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관계’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타자가 배려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에는 배려의 우선순위가 높고, 배려의 정도(경향성)가 강하며 먼 관계에 있을수록 배려의 우선순위와 정도는 약해진다.⁶⁴⁾ 실제로 매우 멀리 떨어진 사람의 경우, 그는 배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그 타인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매우 어려우며(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없음으로 타인의 필요나 요구를 알 수 없기 때문(정확하게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이다. 따라서

62) 이인재, 『초등도덕교육론』, (서울: 두손, 2007), p.145.

63) 맹자의 사단설로 대변되는 이러한 타자를 위한 심성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 논의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성선설·성악설로 대변되는 양분화 논의가 존재함에도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속성에 모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다. 다만 인간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성품에 맞는 행동을 하는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행위논의)는 더 생각해봐야 할 논의이며 이러한 실제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도 별개로 언급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성선설·성악설에 해당하는 인간의 이분법적 이해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해에 대한 하나의 시선으로서 ‘배려’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논의한다. 실제로 본 논문에 대응하여 ‘인간에게 배려라는 것은 없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양분화를 펼친다면(반대파의 입장에서) 본 논문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배려를 행하는 심성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발달되는 것인가에 대한 극단적이지 않은 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본문에서 나딩스의 윤리적 배려를 통해 언급된다.

64) 이인재, 앞의 책, p.145.

나딩스에서는 한 개인이 모든 인류를 배려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나 나딩스는 실제 생활간의 도덕문제들을 통하여 이러한 ‘관계’에 의해 일종의 자연적 배려심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삶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점을 분석하고, 의도적으로 확장한 자연적 배려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⁵⁾ 이것이 윤리적인 배려(ethical care)인데 나딩스는 인간에게는 자연적 도덕심(배려·심성)의 발현이 차등적으로 나타나지만, 인위적인 도덕심의 확충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도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나딩스에게서 배려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적 내용으로서의 ‘배려당사자와 배려에 대한 객관적 이해(정보)’와 가치적 내용으로서의 ‘자연적 심성과 윤리적인 심성’이다. 이때 사실적 내용에 대한 것은 배려자와 배려당사자간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달라지는 것임으로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⁶⁶⁾ 그러나 가치적 내용에 대한 것은 윤리적인 심성의 경우 교육을 통해서 확충해야 하는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나딩스의 배려윤리(배려교육)에서는 배려심을 높이기 위한 도덕적 확충 수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⁶⁷⁾ 여기서부터 나딩스에게서는 길리건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배려에 대한 교육적 방법론이 도출된다.

나딩스의 배려교육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크게 본보기, 대화, 실천, 확신(confirmation)⁶⁸⁾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보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65) 이는 만약 관계가 서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는 척박해지고 서로의 삶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나딩스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는 나와 비교적 거리가 먼 관계자(나와의 관계성은 없으나 같은 공동체인 타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 인류적으로 무조건적인 배려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딩스는 내가 친구를 상대로 배려하는 것은 쉬우며(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이웃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어려운데(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이웃에 대해 배려할 수 있도록 배려심(윤리적인 배려)을 확충시키는 교육이 있어야 삶의 질과 행복이 증진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지구의 저편 누군가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66) 각각의 인간관계와 상황의 내용은 항시 다르기 때문이다.

67) 상황과는 상관없는 나의 판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용(판단기준과 방법론)이 포함된다.

68) 확신에 대한 번역도 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확신은 확증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2004), p.238.

배려에 대한 의미와 배려의 방법을 전달하는 데에 말로써 설명하거나 책을 읽게 하기 보다는 교사가 그에 대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⁶⁹⁾ 또한 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배려의 관계를 맺어 배려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배려를 교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배려에 대한 교육 자체만으로 학생들에게 비교적 많지 않은 ‘배려적인 관계’를 확충시켜주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학생들이 배려교육을 통하여 배려관계를 확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생은 교사와 일차적으로 배려관계를 가지게 된다.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의 능력은 자신들이 배려를 받았던 경험과 배려를 베풀었던 경험에 의존한다. 이러한 점에서 배려의 경험을 증진시키는 것은 실제 배려를 행하게 해주는 역량으로서 작용된다.⁷⁰⁾

그 다음 대화는 배려관계를 맺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화를 통해서 배려자는 배려당사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배려당사자는 배려자에 대한 배려를 인식 및 수용하였음을 전달 할 수 있다. 이때 대화의 특성이 중요한데 여기서의 대화는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의견교환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인정)하기 위한 참된 대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이면 충분하며 대화의 주제보다 대화의 당사자가 더 중요시 여겨진다. 왜냐하면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논쟁과 설득이 아니며, 서로 격려하고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크게 두어야 할 것은 대화가 아닌 대화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대화의 주제나 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나딩스의 대화에 대한 논의는 그것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시사점이 있다.⁷¹⁾ 또한 대화는 배려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데 이는 배려당사자가 배려를 올바

69) 이인재, 앞의 책, p.146.

70) 박병춘, 앞의 책. p.149.

71) 박병춘, 앞의 책. p.151.

르게(감사하게) 받았음을 배려자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배려당사자가 배려자에게 배려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배려는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배려교육에서는 직접적인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값이든 단순한 언어적 정보의 획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듯 배려도 실천적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딩스는 공동체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한 배려교육의 실천적 체험과 보람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배려란 대화해보거나 글을 써보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인 배려의 능력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말만으로는 배려를 실천할 수 없다는 자체적인 특성) 배려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또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체험과 봉사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인간의 나눔과 배움의 가치를 체험하게 하고 서로를 경쟁의 대상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게 해줄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등은 배려의 방식뿐만 아니라 배려가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수행될 수 있으며(형식적인 측면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려의 태도가 아닌 배려의 형식적인 면만 배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⁷²⁾

마지막으로 확신(confirmation)은 타인에 대한 일종의 격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사가 학습자에 대한 자아와 가치관에 대한 격려방법을 말한다. 나딩스는 외재적인 자아나 가치를 학습자에게 강요하거나 학습자가 외부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아와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하고 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학습에서도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72)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배려의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은 훌륭한 지적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봉사활동 등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내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자중심의 통일교육방법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외식의 상장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학습자중심의 비교적 눈높이에 맞춘 열린 통일교육을 하더라도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이끌어가는 교사의 주도적인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 각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특성, 관심 등을 중심으로 최상의 동기화를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험 도중 좋은 의도로 부정행위를 도와주려는 학생에 대하여 교사는 “네가 시험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친구를 도와주려는 깊은 뜻을 선생님은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네 친구도 정직하고 몇몇한 방법으로 얻은 점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로 교정해주는 행위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 행위들은 평가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평가방식과 객관적형태의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최상의 동기와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을 배려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⁷³⁾ 그러나 이러한 나딩스의 배려교육방법은 실제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나딩스는 학교의 구조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들도 간략하게 내놓았는데 배려교육이 전통적인 학교의 구조와 제도상으로는 이루어지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⁷⁴⁾ 그래서 나딩스는 궁극적으로 행해져야 할 배려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교사와 학교의 구조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도 주장한다.⁷⁵⁾

이와 같은 나딩스의 배려논의와 배려교육의 내용들은 통일교육논의

73) 앞선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가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배려(정의적 측면)’를 지적하는 모습이다. 이는 기존의 객관적인 판단과 형식을 뛰어넘는 것인데 예제를 통해 분석하면 학생에게는 부정행위보다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의도(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판단과 형식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판단, 가치, 의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正義)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나딩스는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한편 나딩스의 확신(확증)에 대한 언급은 배려자·배려당사자 사이의 배려교육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논의는 교육방법자체에서도 배려가 가능하며 배려가 포함된 교육방법의 시사점을 던지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나딩스의 배려교육은 학교 현실을 떠난 배려교육이 아닌 학교 자체를 통한 배려의 생활화를 노렸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루지 않는다.

74) 관련된 내용으로는 ‘탈 전문화(deprofessionalism)’와 ‘규칙과 처벌에 대한 개선안들’ 등이 있다. 내용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의 이해는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학교의 규칙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내지 위한 일종의 안내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5) 이와 같은 교사와 학교의 구조적인 개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논의는 사실 회의적이다. 배려교육만을 위해서 교사와 학교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배려교육에서의 교사의 중요성이다. 앞서 보았듯이 배려교육에서는 배려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모범과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심이 된다. 따라서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들은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주로 다루지 못하였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앞선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논의에서 간과되는 측면인 ‘통일교육에서의 교사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는 교육은 학습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눈높이를 새롭게 정립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비전(vision) 혹은 목표와 과제를 교사가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함을 보여준다.⁷⁶⁾ 즉 나딩스의 배려교육은 배려를 교육시키는데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논증하며, 이는 곧 통일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 다문화적 배려교육도 기존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넘어선 교육자 중심의 교육도 필요함을 이끌어낸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배려를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함을 일깨워주었다는데 있다. 현재 다문화중심 교육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들에서는 배려를 행하는데 필요한 철학적 논증들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다.⁷⁷⁾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육에 관련된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문화중심 교육의 경우 다양한 체험과 역할놀이, 공동체 활동 등의 교육방법적 측면의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

76) 특히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보기로서의 참여와 역할을 맡아야 함이 중요함이 같이 언급되어야 한다.

77) 이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문들이 주로 사실자료를 기초로 한 연구논문이 많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다문화’, ‘다문화가정’ 등의 용어 자체에 대한 분석과 고찰은 상세히 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철학적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수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정당성의 논의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다원주의에 대한 논증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회 혹은 집단수준의 커다란 이해관계까지 얽힌다면 단순한 배려의 차원에서 논증하기 힘들 것이며, 실제 배려를 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막연히 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직관으로 논의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철학적 토대를 정초하는 것이 용의할 것이다.

게 경험적인 측면을 토대로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등을 논증하는 것은 머지않아 한계가 드러날 것이며, 배려 이전의 질문인 ‘배려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배려가 정말 올바른 배려인가?’등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철학적 고찰능력은 저학년 층의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작업으로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에게는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고찰보다는, 배려 자체를 해야 하는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토대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딩스의 이론들은 배려가 그저 이루어지는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며, 따라서 이를 토대로 교육자(교육기관)가 스스로 배려교육에서 배려자와 배려당사자의 입장고찰을 통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교육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⁷⁸⁾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평가’와 ‘분석’적 측면에서, 나딩스의 논의는 실제로 실행된 배려를 중심으로 다룬 통일교육을 분석하고 이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⁷⁹⁾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올바른 깨달음을 주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⁸⁰⁾ 세

78) 즉, 나딩스의 배려교육은 학생들에게 그 논의를 이해시키는 것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배려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결국 나딩스의 이론은 학생들을 위한 이론 보다는 ‘교육자를 위한 이론’이다.

79) 예를 들어 특정한 통일교육방법에 대해 나딩스가 고안한 배려교육의 4가지 요소가 충분히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는 교사의 지도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대화의 중요성이 잘 다루어졌는지 등 필요에 따라 세분화시켜서 분석평가의 요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80) 물론 나딩스는 통일교육(다문화를 고려한)중에서 ‘배려’에 대한 부분에서만 평가와 지침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과정에 대한 사실적 논증 등은 다른 철학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에서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의 논의에서 나딩스의 배려자와 배려당사자간의 상호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배려의 요소’들에 대한 논증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려 하였다. 예를 들어 통일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려자가 된다면 북한은 배려당사자로서 우리는 우리만의 입장과 가치로 일방적인 배려를 행해서는 안 되며, 또한 북한 역시 배려당사자로서 우리의 배려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배려가 정립되지 못할 수 있으며, 배려자와 배려당사자의 입장이 교환적이기 때문에 북한도 배려자로서 우리를 먼저 배려해주는 입장도 필요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통일에 대한 논의들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측면을 실제 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는지, 배려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반응(피드백)이 있는지, 배려자와 배려당사자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는지 등을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참된 배려’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번째로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격양시켰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나딩스의 배려에 대한 논의는 관계와 공동체에 주된 관심을 가지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학교 공동체의 특성을 살리고 이를 통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식과 안보를 전달하는 교육으로서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을 살리는 강단의 교육이었다면 나딩스식의 배려교육은 현대의 다문화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이점을 살리고 학교 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 배려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형태의 교육 방안에 힘을 실어준다.⁸¹⁾ 또한 이러한 교육 논의는 실천과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식은 풍부하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언어화와 추상화를 떠난 실제 삶의 표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러나 나딩스의 배려교육 논의는 통일교육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⁸²⁾ 먼저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그러한 통일교육의 특성상 정의적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통일교육의 인지적 측면의 접근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 다문화와 북한을 배려하기 위한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의 개발은 중요하지만, 정당한 판단이나 추론, 사회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소홀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다원주의 함정이나 문화상대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막음으로서 올바른 판단개념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상대주의로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배려가 아니라, 인류공동의 선과 도덕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절제된 배

줄 수 있다. 철학적 정초가 마련되면 활용될 범위들은 매우 많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을 구성한 것이다.

81) 이는 곧 통일교육에서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의 중요성을 떠나 ‘학교’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격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나딩스의 논의를 통해서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교사와 학교로 귀결되는 것이다.

82) 물론 길리건과 나딩스의 논의는 모두 윤리학적, 교육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통일교육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려이며, 이를 위한 인지적 측면의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나딩스의 배려에 대한 논의는 배려의 대상과 관계성의 측면(배려의 가치적 내용)에서 큰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배려’에 대한 정서가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가까움과 멎에 따라 달라진다는 나딩스의 논증에 있다. 이것은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혹은 나·학생과 북한주민과의 관계)가 가까울 경우에는 배려가 일어나기 쉬우나 반대로 관계가 멀 경우에는 서로의 요구와 가치를 알 수 없음으로 배려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논증은 필연적으로 “배려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대에게 배려를 하기 위하여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귀결되며, 이는 곧 “왜 북한이 우리의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의 당위의 물음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나딩스의 논의는 배려에 대한 방법과 어떤 요소로 배려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일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으나, 우리가 북한을 왜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는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곧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인간이 가진 자연적 심성(배려)이나 교육을 통해 확장된 윤리적 심성(배려)을 가지고 배려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교육적·통일적 당위를 증명해 낼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의 통일논의에서는 이러한 북한과의 통일논의에 대한 당위성 논증을 민족주의적 측면이나 상호이익 측면 등 다양한 입장에서 해석하고 증명해보였으나, 현대에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⁸³⁾ 또한 ‘다문화화를 고려한 통일논의’에서는 다원주의나 배려 윤리적 측면을 다루지만 아쉽게도 당위성에 대한 실질적인 철학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는 길리건을 통해서 인간의 배려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배려의 실현방법으

83) 정창우, 앞의 책, p.428에서 정리한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의 근거로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으로’, ‘이산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음으로’, ‘남북통일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국방비에 의한 인력과 재력의 낭비를 막아 줄 수 있음으로’, ‘국가 경쟁력 상승을 통하여 국제 경쟁사회에서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음으로’,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이므로’ 등이 있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적 이유들은 민족주의적 관점과 이해 타산적 관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서 나딩스의 이론을 참조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왜 모든 사람(문화)을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논증도 해내야만 할 것이다. 인간이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배려를 확장시키는 기술과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배려를 행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유추해 낼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느낀다.⁸⁴⁾ 결국 길리건과 나딩스의 배려 윤리적 논의는 둘 다 배려는 가능하지만 배려를 해야 하는 당위성 논증은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제 이러한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한 배려의 당위성에 대한 철학을 살펴봐야 한다.

V. 통일교육의 타자윤리적 접근

1.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적 논증

레비나스는 현상학과 윤리철학을 중심으로 논의한 철학자이다. 길리건과 나딩스가 심리학이나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상가라면 레비나스는 철학을 위한 철학에 중심을 둔 순수 철학자이다.⁸⁵⁾ 따라서 레비나스의 논의는 일반적인 교육학이나 윤리학의 논의에서도 다루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 그 이유는 레비나스의 논의가 매우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시선도 많기 때문이지만, 존재론과 같은 철학적 구조를 논증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⁸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특정한 사실로부터 당위를 유추해 낼 수 없다는 논증은 ‘자연주의적 오류’로 표현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과학적 사실로부터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야 한다는 당위(도덕적)적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없는 것과 같다.

85) 특히 레비나스의 논의는 현상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현상학적 특성으로 논증을 접근하면 이해가 쉽다. 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교육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상학적 논의의 복잡성으로 이해가 어렵기도 하다.

86) 이와 같은 특성은 현상학이라는 철학의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인(학생)들에게 현상학의 논의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철학들의 논의를 이해하는 것에 비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 우리가 통일교육을 논하는데 있어서 레비나스와 같은 철학자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교육에 대한 근본적 물음인 통일의 당위성 논증에서 기존의 민족주의적 태도와 상호의 이익증대 측면의 논의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⁸⁷⁾ 현대의 통일교육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호소가 아닌, 철학자들의 논증 등을 통한 좀 더 광대하고 확실한 통일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을 논증할 수 있는 철학자(철학사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레비나스의 철학은 배려와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레비나스는 기존의 자아와 타자에 대한 철학적 인식(존재론)과 구분을 원천적으로 뒤집는 새로운 형태의 자아와 타자에 대한 철학적 인식 방법을 내놓는다. 데카르트(Ren Descartes)를 시작으로 근대의 인식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존재론은 나(자아) 이외의 모든 타자들을 나(자아)의 인식 속으로 끌어들이며 타자가 가진 타자성을 무시하고 동일자의 영역으로 환원한다. 이런 존재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체계 안에서 재정립함으로써 나(자아)의 존재적 위상을 격상시킨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해석은 ‘나(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인식론’, 홉스(Thomas Hobbes) 이후 나타난 ‘이기적 인간론’에 입각한 자기중심적 활동에 대한 정당화, 자유와 자립성에 가치를 두는 ‘칸트(Immanuel Kant)식 철학적 탐구’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곧 서구철학의 일원론적 존재론과 유아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자아관념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적 개념은 자율성, 자유, 존재 등과 같은 철학적 담론으로서 칸트에게서는 자기 입법과 자율적 의지는 도덕성의 근거가 되었으며, 현대에서도 피아제(Jean Piaget), 콜버그(Lawrence Kohlberg) 등의 입장에서 그대로 전승되어 자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레비나스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아론을

87)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과 논거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적 공동체를 완성시키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뒤로하고 타자중심적의 철학을 새롭게 선보인다.⁸⁸⁾ 레비나스는 서구의 개별적인 존재자(혹은 자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도덕철학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의 윤리적 문제란 개별적인 자아와 추상적인 도덕법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레비나스의 자아와 타자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 논거를 정리하기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⁸⁹⁾ 레비나스는 저서 『존재에서 존재자로(De l'existence a l'existant)』와 『시간과 타자(Le temp et l'autre)』를 통해서 현상학적 존재론을 뛰어넘는 타자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전체성과 무한(Totalit et Infini)』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윤리적 관계와 책임을 설명한다. 레비나스의 논의는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⁹⁰⁾ 첫째, 인간은 인식론적 관계를 맺기 전에 보다 근원적으로 향유적인 관계를 맺는다.⁹¹⁾ 둘째, 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자리, 주거를 마련하면서 세계로부터 분리되며 이로부터 몸·노동·경제·욕구·내면성·이기주의 등의 자아중심의 전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만약 인간이 홀로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소유적인 경향(혹은 자기 안으로 동화시키

88) 반대로 레비나스가 타자 중심적 철학을 나타내기 때문에 타자를 위한,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인간으로서 인간 본유의 주체성의 의미가 간과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 레비나스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타자 중심적 철학이 인간의 주체성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다는 논증들이 많다.

89) 이유택, 「책임에 관한 철학적 성찰·레비나스와 요나스를 중심으로」,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연구』, 제17집, 2008. 4), p.71.

90) 레비나스의 타자(the other)는 환경 물질적 세계, 타인, 신 등의 '나 이외의 모든 다른 것'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논의의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 '나 외의 다른 타인'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레비나스의 논증 방법은 특별히 구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음으로 학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91) 향유(jouissance : 나는 의미를 듣는다.)개념은 레비나스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간이 세계를 합리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이성적 존재이기에 앞서 세계의 삶의 환경에 침수되고, 혹은 누리며, 향유하는 감성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레비나스는 기존의 데카르트와 같은 사유가 곧 자아(존재)의 근거가 되는 형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유하기 이전에 이미 환경적으로 관계와 경험을 맺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최종적으로 사유(이성)이전에 감성(감각)이 작용하며, 또한 감성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논증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레비나스의 이러한 감성에 대한 격상적 이해를 통해서 배려를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감성)이 배려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 판단(이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증을 소개한다. 관련된 내용은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경기: 인간사랑, 2002), p.72를 참조 바란다.

려는 경향)은 문제되지 않으나, 타자가 존재함으로 이는 문제가 된다. 넷째, 타자는 자기 안으로 동화시키거나 통합할 수 있는 자아의 의식의 대상이 아니다. 다섯째, 그러한 타자는 얼굴로서 현현(顯現)하는 존재이며, 때문에 무한자(無限者)이다.⁹²⁾ 여섯째, 현현하는 타자는 그 스스로 나(자아)의 감성에 작용하고 호소하며, 이것은 어떤 맥락과도 무관하게 타자의 존재 자체로서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호소한다. 일곱째, 인간은 이성작용 이전에 감성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타인의 현현을 외면할 수 없는 수용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덟째, 이러한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는 상호성의 관계가 아니라 윤리적 비대칭성의 관계이다.⁹³⁾ 아홉째, 그러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자아)의 도덕적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로 확대시켜야 한다.⁹⁴⁾ 열째, 그 이유는 타자의 얼굴이 말해주는 의미는 바로 제3자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으로 내 앞의 타자는 동시에 다른 타자를 계시하기 때문이다.⁹⁵⁾ 열한째, 그

92) 현현하다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러한 타자는 나(자아)와는 절대적인 다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타자는 무한대로 존재하는 무한자로 설명되며 반대로 자기 자신은 유한자로 설명된다. 여기서 무한자는 그 숫자가 한 없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타자가 나의 인식과 능력의 테두리로는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과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일컫는 용어이다.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에서 “대면적관계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철학회, 2000), p.128을 참조 바란다.

93) 여기서 비대칭적 관계는 윤리적 배려를 행해야 하는 나와 배려를 작용시키는 타자와의 존재적 높이의 차이인데 타자가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윤리적 행위를 명령한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배려를 행하는 우리는 낮은 위치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은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 되지만 그 존재적 높이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배려의 행위를 요구(명령)한다는 측면에서 높이가 높다. 이는 기존에 배려를 행하는 사람이 배려의 대상자에 비해 여유롭고 더 높은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베풀다.’라는 입장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르다. 앞선 예제를 통해 살펴본다면 결식아동과 나의 위치는 충분히 여유로운 내가 베풀는 것으로서 나의 위치가 결식아동보다 높다. 이것은 곧 자아(자신)를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타자를 기준으로 바라보는가에 달라지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 시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94) 앞선 논의에 따르면 타자의 위치는 배려자인 나(자아)의 위치보다 높다. 만약 배려자의 위치가 더 높다면 그 때문에(우월하기 때문에) 책임과 힘(배려의 힘)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논증(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정의 논증)이 있을 수 있지만 레비나스의 논증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밝힌다.

95) 내 앞의 타자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저편의 타자도 모두 같은 현현을 가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 앞의 결식아동의 현현이 배가 고픈 것을 나타낸다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저편의 누군가도 똑같이 배가 고픈 현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논증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프리카 난민들까지 책임지는 비대칭적 윤리를 행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아프리카

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자아)에게 무한한 의무를 지우며, 이는 그(타자)의 특별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자아)의 책임을 일깨우는 근원적 존재의미에서 그러하다.⁹⁶⁾ 열두째, 이것이 나와 너의 일차적 관계에서 제3자에게로 관계범위가 확대되는 이치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방인으로, 종파와 인종이 다른 제3자에게로, 지구촌의 굶주리는 이들에게로, 더 나아가 현재화할 수 없는 무한한 과거의 시간과 관련된 타자의 불행이나 미래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 확충되는 이치이다. 열셋째, 이러한 타자의 불행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감수는 인간이 가진 외부적 몸과 감성적 측면 때문이며, 타자의 고통은 곧 나(자아)에게로 이어지는 고통이 된다.⁹⁷⁾ 열넷째, 이러한 타자를 위해 형성되는 자아로부터 인간은 주체성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한한 자아가 무한성에 이를 수 있다.⁹⁸⁾ 마지막으로 나(동일자)는 이러한 타자(무한성)를 향한 열망(desir)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⁹⁹⁾ 레비나스의 논의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극명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형성과 자아의 존재성이 단지 스스로의 사유와 인식에서 비롯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립되고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통일교육을 논의하는 입장에서 레비나스의 이론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타인의 현현에

난민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없다는 논증적 설명과 비슷하다. 다만 이러한 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다른 도덕철학의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에(너무나 과중하므로) 비해 레비나스는 전 인류적으로 넓게 범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96) 타자의 지위나 생김새, 특성, 성격 등에 의해서 나(자아)에게 배려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배려를 요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7) 인간은 타자의 고통을 보고 자신도 고통을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병마와 싸우는 환자를 옆에서 볼 때 나(자아)도 괴로움을 느끼며, 혹은 최소한의 불편함(일종의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

98) 이와 관련된 논증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나(자아)의 존재는 타자를 도와줄 때(배려할 때) 고유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아이는 그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나(자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이때 나(자아)는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99) 이와 같은 논증의 구조는 김연숙, 앞의 책, pp.12~19의 구조를 따라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대한 우리의 감성의 작용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배려의 작용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들은 얼굴로써 각각의 고통과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는 이러한 타인의 호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불리움을 받는 상황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 아이(타자)는 그가 놓인 상황 그 자체로, 즉 존재 그 자체로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때 레비나스는 불리움을 받은 나(자아)는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성과 유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논의를 자아의 존재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까지 전개시킨다.¹⁰⁰⁾ 배려를 논의하는 통일교육에서 레비나스의 형이상학적 논의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전에 레비나스가 중시하는 타자의 호소와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들에 대한 논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인간)에게 배려적 속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을 논증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타자에 대한 배려의 당위성)적 논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선 철학적 논증방법에 따라 인간은 사유만으로 존재하는 전통 서구철학의 존재론적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앞서 향유와 관계를 통해서 타자와 구분되는 자아로서 존재한다. 둘째, 인간은 감성으로서 타자의 현현을 받아들이게 되

100) 레비나스의 이론은 타자를 먼저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자아의 규정을 다시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정확하게는 여기서 비로소 윤리적 주체성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김연숙, 앞의 책, p.228. 이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의 존재가 완벽하게 부상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레비나스는 단순한 존재의 무무논의를 넘어서, 나(자아)의 고유성과 유일성의 의미가 크고 작아질 수 있음을 주장한 학자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성의 규명은 단순한 사유를 통한 인식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서 윤리적 요청을 감수할수록 그 의미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내용은 김연숙, 앞의 논문, p.131을 참조 바란다. 또한 레비나스는 존재론에 앞서 형이상학이 선행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일철학으로서의 윤리학(형이상학적)을 논증하는 등 다양한 논거들을 주장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강영안, 「레비나스 철학에서 주체성과 타자·후설의 자아론적 철학에 대한 레비나스의 대응」,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집, 1990. 11), pp.251~252를 참조 바란다.

는데, 이때 감성은 감각적 작용으로서 인식의 요소이다.¹⁰¹⁾ 셋째, 왜냐하면 감성은 향유이며 이것이 감각적 존재로서의 몸의 존재방식이고, 이는 곧 삶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본능을 넘어서 있지만 이성에 앞서 있는 반성되지 않은 상태의 자아의 직접성이기 때문이다.¹⁰²⁾ 레비나스의 논의는 현상학적 측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논의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레비나스의 “감성은 경험의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향유의 질서에 속한다”¹⁰³⁾는 말처럼 감성은 인간의 삶 자체에 있는 향유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실존의 몸과 나(자아)와 세계와의 근원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성 그 이전 존재이다. 이것은 시선의 전환으로서 데카르트나 칸트식의 나(자아)의 존재와 이성을 토대로 주변의 감각·경험을 받아들이는 형식이 아닌, 감성이 자신의 실존과 몸을 통해 세계와의 향유로서 먼저 선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성은 더 이상 전통 서구철학에서처럼 나(자아)를 존재하고 정립시키는 데서 지양되고 제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자아)를 존재하도록 하는 가장 원천적인 요소가 된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감성의 격상과 함께, 앞선 논의들과 같이 타자는 얼굴(visage) 그리고 현현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는 보편적·일반적·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자임을 논증하여 타자의 지위도 격상시킨다. 여기서 레비나스의 “절대적 타자에 대한 형이상학적 열망은 얼굴을 향한 무한성으로 향한다.”¹⁰⁴⁾의 말처럼 나(자아)는 무한자로 존

101) 전통적 서구철학의 입장에서 데카르트는 감각적인 것을 합리성의 외부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고, 칸트도 감성과 이성을 분리시키면서 논의하고 있다. 반면 레비나스는 감성의 향유적 측면을 들어 이와 같은 부분을 지적한다. 김연숙, 앞의 책, p.78을 참조.

102) 레비나스에 따르면 이성이 작용하기 그 이전에 감성이 작용되며, 이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누리는 향유이기 때문에 존재에 가깝다. 이는 흔히 현상학적 논의들로 설명되는데 내가 받아들임으로서 인식하는 인식론과는 달리,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존재 그자체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향유가 선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철학은 의식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것을 존재로 삼는 것에 비해 레비나스는 의식하기 그 이전에 향유(관계)로서 존재가 선행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곧 의식이 실존에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 의식보다 먼저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김영한, 『레비나스의 타자 현상학·후설 및 하이데거 현상학 수용과 비판』, (한국현상학회, 2007), p.201.

103) 김연숙, 앞의 책, p.81.

104) 김연숙, 앞의 책, p.124.

재하는 타자들에 대한 열망으로써 나의 자아중심적인 세계질서를 깨뜨리고 진정한 자아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¹⁰⁵⁾ 즉 모든 타인들의 얼굴은 나(자아)에게 윤리적 호소와 요청을 하고 있으며, 타인들과의 향유와 관계 속에서 존재가 완성되는 나(자아)는 이것을 거절할 수 없고, 타인들을 배려하고 도와줌으로서 참된 자신의 존재가 완성된다는 주장이다.¹⁰⁶⁾ 특히 이 부분에서 타인의 얼굴과 호소는 개인적인 거리와 친분(아는 사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자들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타자인 ‘너’는 나(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얼굴로 나타나는 ‘너’가 초월성 속에서 나에게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된다.¹⁰⁷⁾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타자의 힘은 그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 자체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결핍인 것이다.¹⁰⁸⁾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는 윤리적 호소들에 대하여 우리는 왜 회피할 수 없으며, 왜 이를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논의로 넘어간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최종적인 작용을 자아의 완성과 존재적 측면에서 해석하여 자아의 정립은 단순히 ‘나는 나다’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자의 타자성에 의해 즉 자기 밖의 다른 것에 의존하여 정립한다고 설명한다.¹⁰⁹⁾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타자에로의 열망과 초월, 타인의 현현에 맞닥뜨리고 이에 귀 기울이는 자아로서 최종적으로 타자를 위한 존재로의 전환을 맞는다. 이때 타자를 위한, 타자에게 선택된 자로서 그 누구로부터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주체의 주체성

105) 레비나스는 물질적 대상의 타자성은 향유될 수 있지만 타인과 신에 대한 타자성은 열망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김연숙, 앞의 책 p.105.

106) 타인들의 얼굴을 통한 윤리적 요청은 앞선 ‘우물에 빠지는 아이’와 같은 ‘빈곤과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 ‘점심을 거르는 결식아동’,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각각의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난다. 김연숙, 앞의 책, p.125참조.

107)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에 의한 윤리적 호소는 관계의 가까움이나 특별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초월적인 것이며, 때문에 관계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또한 오히려 타자의 얼굴(호소)은 ‘무한자적 성격을 지닌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일자이면서 유일한 나’(자아)는 이러한 무한자적 초월을 열망하는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108) 관련 내용은 김연숙, 앞의 책 p.173을 참조.

109) 김연숙 앞의 책, pp.210~211. 이러한 자아를 ‘향유적 자아’로 언급하고 있다.

이 발생함으로써 고유한 자아와 윤리적 주체성이 형성된다.¹¹⁰⁾ 이것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씨랜드 화재사건”에서 어린아이들을 구하고 자신은 숨겨간 한 선생님의 일화를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화재 속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어린아이들과 선생님인 나와와의 관계가 있으며, 울부짖는 어린이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단순한 선생님의 자유의 지로부터 오는 이성적 책임만을 포함된다고 생각되기 어렵다.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선생님과 선생님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어린 타자들과의 관계만이 문제시 되는 상황이다. 이때 선생님은 그 사건에서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어떤 권리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화재사건은 선생님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그가 화재를 낸 것이 아니며), 어떤 면에서는 자신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만약 교사라는 직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전혀 관계가 없다)¹¹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누구도 대체될 수 없는 선생님의 존재성(그가 아니라면 아이를 구할 수 없는)은 목숨까지도 담보하는(과중하리만큼 큰) 희생의 요구 속에서 비로소 윤리적 자아로서의 고유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레비나스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책임과 윤리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타자와 자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묻고 이를 찾아가면서 타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설명한다. 한마디로 ‘고유한 나(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타자를 통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자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나(자아)’가 존재하고 타자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통해 ‘나(자아)’가 완성됨으로서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란 다름

110) 이러한 자아는 ‘윤리적 자아’이다. 레비나스의 자아 논의는 향유적 자아와 윤리적 자아 등 자아에 대한 몇 가지 차이와 구분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레비나스 논의의 핵심을 강조·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자아의 특성들을 일일이 나열하여 설명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논의했음을 밝힌다.

111) 예시를 이해가 쉽도록 등장대상을 ‘선생님’으로 국한시켰는데 이 때문에 혹자는 이에 반문하여 선생님의 지위라는 도덕적 의무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나’라도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레비나스의 주장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닌 ‘관계’ 속에 있음을 논증하게 되는 것이다.¹¹²⁾ 즉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타자와의 관계를 향유하고 보존(배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기중심적 철학을 극복한 배려의 통일교육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은 나의 도덕적 책임은 지금 여기에서 나를 바라보는 타자에게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로 확대되어 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¹¹³⁾ 따라서 이러한 인간 이해와 도덕적 당위의 논의는 통일교육 논의에서 북한(주민)을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지구촌의 타자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논증해 준다. 이는 현대의 학생(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북한을 배려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철학적 배경인 ‘인식주체성 인간이해’와 ‘자기중심적 태도’, ‘자유와 자립성에 근거하는 도덕적 태도’들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자아)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배려해야 한다.”는 철학적 인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서구의 자유추구와 자기중심적인 자아철학이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왜 우리가 북한을 배려해야 하는가?(이를테면 나도 힘든데)”를 올바르게 논증하게 만들어주는 철학적 토대였으며,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타자중심적인 자아철학이 필요했는데 레비나스의 논의가 이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사회는 연대성, 상호의존성을 가진 것으로 서로서로의 진행과 관계에 맞물려 있는 것인데, 타자와 내가 서로 묶여져 있는 관계망을 외면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진행되는 철학은 동일성의 철학과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자국중심주의 · 인종중심주의 ·

112) ‘자아가 완성 된다.’라는 표현을 본 논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했으나 이는 사실 올바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정확하게는 “감성의 자아는 ‘타자의 필요를 돌봄’, ‘타자의 불행과 실수에 대한 배려’, ‘타자에 대한 나눔’속에서 ‘존재하게’된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강영안, 앞의 논문, p.161을 참조.

113) 김연숙, 앞의 책, p.176.

종교중심주의·남성중심주의 등의 특징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외부의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데 있으며, 자기국가나 민족의 종교를 위해서 억압과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절대적으로 다른 타자와 평화롭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은 타자의 절대적 다름, 즉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인종과 민족과 국가의 절대적 차이와 다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관용을 베풀게 되며, 그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의 적극적 평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가 윤리적으로, 형이상학적 관계로 이어지는 레비나스의 논의는 이와 같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등에도 적용해 갈 수 있다.¹¹⁴⁾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통일교육에서 우리가 전 인류적으로 배려를 행위 해야 하는 철학적 근거와 토대로서 적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길리건, 나딩스, 레비나스를 통해 배려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어떻게 정초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길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였던 도덕적 판단(가치판단)의 정의적 요소의 존재와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딩스를 통해서 ‘배려’란 무엇이며 ‘배려’가 실제로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적 구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레비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북한)에 대해 배려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철학적 논증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길리건·나딩스·레비나스의 배려교육에 대한 철학적·교육학적 기반은 앞으로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다문화통일교육의 정당성과 통일교육방법의 정당성을 논증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4) 김연숙,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회, 2001), p.425. 레비나스의 논의를 평화윤리의 측면에서 다루는 시선도 있다.

VI. 結 論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통일교육의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현대의 통일교육논의의 ‘내용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곧 다문화적 통일교육은 화해·협력 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의 ‘가치교육’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진 다문화통일교육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범위 규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큰 범위(정책과 통합적 측면)에서는 절차적 규범이 작용해야하고, 작은 범위(개별자와 생활문화적 측면)에서 ‘배려의 논리’가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하여 볼 때 배려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이 우리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는, 커다란 범주에서가 아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가치판단과 생활의 역량(혹은 척도)으로써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적 통일교육의 핵심적 가치논의인 ‘배려’에 대해서 길리건, 나딩스, 레비나스의 논증을 통해 각각 도덕(가치)판단¹¹⁵⁾에서 정의적 요소의 중요성과, 배려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방법론과, 배려를 해야 하는 당위적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논의하고자 한 내용은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현대의 통일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통일교육이 실제로 진행될 때 철학적으로, 혹은 교육방법상으로 그르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다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에 비교적 높은 가치를 매김으로써 내용을 중요시 다루었지만, 이외에도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

115) 여기서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적 판단도 포함된다.

문화시대를 고려한 통일교육」은 현대에 등장한 다양한 통일교육의 시선들 중 가장 핵심적인 중추가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안보교육을 중심으로 하던 인지적 통일교육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정의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방법은 다문화교육으로, 본 논문에서는 ‘배려’를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배려’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방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배려’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방법이 근본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3명의 교육·철학자들을 통하여 논증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구성은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통일교육 방안들은 이미 많은 부분 연구가 진행(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비교적 소외된 다문화 통일교육의 교육철학적 정초(정당성)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통일교육들이 단순히 시대적 요구에 의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변화를 통괄할 수 있는 ‘보편적 타당성’과 ‘학문적 적절성’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철학적 토대와 기반 놓기 작업은 도덕윤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통일교육들은 ‘통일정책’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이었다. 이른바 ‘통일 정책’이 먼저 완성되고 청사진을 그린 후에 ‘통일교육’이 뒤따라가는 식으로 논의들이 구성된 것이다.¹¹⁶⁾ 학계의 논문들과 관심들도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주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그저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의

116)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통일교육이 무조건적으로 정책과 국제정세의 분위기에만 의존하여 움직이게 된다면 지속적인 통일교육논의는 이루어지지 힘들고, 정책방안이 통일에 대해 당위적으로 타당치 못할 때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정책과 별개로 통일교육을 논의할 수 있는 당위적, 방법적 토대를 ‘최소한’으로도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왔을 뿐, ‘통일’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¹¹⁷⁾ 기존의 통일교육의 논의들은 철학적 정초를 기반으로 논의되지 않고 정책을 기준으로 논의됨으로써 통일교육은 자체적인 논리와 논의의 힘이 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국제정세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통일에 대한 당위적 논거와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적 적절성의 논의로서 굳건한 토대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일교육의 위치와 위상이 제대로 존립(存立)될 때 비로소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참된 통일의 길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 시대의 통일교육은 정책에 앞서 ‘통일’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토대로 ‘올바른 통일’과 ‘통일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통일에 필요한 요소’를 학술적으로 정초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철학적 정초를 목적으로 작성된 본 논문은 기존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에 비해 다소 상이(相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도출되는 통일사회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는 다소 외의일 수도 있지만 ‘도덕성(道德性)’이다. 본 논문은 ‘정의적 측면’의 강조를 위하여 ‘배려’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실제로 통일교육에서는 ‘인지적 측면’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적 측면’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최종적으로 ‘도덕성’으로 귀결되며, 이는 곧 통일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철학적 정초를 심어주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¹¹⁸⁾ 즉

117) 예를 들어 화해·협력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통일교육논의들은 남북한의 화해·협력적 정치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철학적 근거를 통하여 ‘통일’을 하는 데에 ‘화해’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현대 통일교육의 직접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책분석을 통해 논의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통일’ 자체에 대해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시선이 필요한 때이다.

118)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통일이라는 것이 결국 공동체간의 삶,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도덕(道德)·윤리(倫理)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와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통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환경의 완성에 앞서서,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습득하고 이를 습관화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과 방향 속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때만 통일의 과정도 올바르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통일 이후의 엄청난 변화와 다양성 속에서 지지치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가 통일교육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남북한의 정책적 비교와 한반도의 정세를 살피는 일에 앞서, 공동체의 삶과 통일이라는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통일교육에서 ‘통일에 대한 철학적 정초 놓기(도덕학자·철학자의 참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은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론과 주제들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연구와, 이에 대한 철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물론 철학자들을 통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그 무엇보다 올바르게 논증한다고 해서 이것이 남북한 통합의 달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¹¹⁹⁾ 통일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다방면의 조건들이 맞춰지고 유지되어야 가능한 어려운 과제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문에서 논의된 통일교육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정의적 측면’, ‘보편적 배려’에 대한 논증들은 현재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주제들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성이 공존하면서도 통합적인 모습의 공동체를 달성하려는 이른바 ‘통합 속의 배려’에 대한 논의들도 계속 될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본 논문을 통해 위와 같은 다문화를 고려한 통일교육의 논의가 현재의 시점에서 논의 되는 것은 정당하며, ‘정의적

119) 윤영돈, 「사회주의 예술과 남북한 통합의 다문화 교육적 접근」,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중국학논집』 제2집, 2008.6), p.20.

측면'과 '배려 교육'이 하나의 통일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으로 작용되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경기: 인간사랑, 2002).
-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경기: 인간사랑, 1996).
- 박병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울력, 2002).
- 이인재, 『초등도덕교육론』, (서울: 두손, 2007).
- 정창우, 『윤리와 논술1』, (서울: 울력, 2007).
- 추병완, 『도덕 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2004).
- 강영안, 「레비나스 철학에서 주체성과 타자·후설의 자아론적 철학에 대한 레비나스의 대응」,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집, 1990. 11).
- 강휘원,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 『준계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7. 4).
- 구복실, 「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 접근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6, 2).
- 권수현, 「사회통일교육현장1·통일 ‘이후’ 바라보는 통일교육 실시해야」, (통일한국, 『통일한국』, 제254호, 2005. 2).
- 권순희,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한국어교육학회, 2008).
- 김두정·김홍운,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에서 “대면적관계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철학회, 2000).
- _____,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회, 2001).
- 김영한, 「레비나스의 타자 현상학·후설 및 하이데거 현상학 수용과 비판」, (한국현상학회, 2007).
- 선우현, 「다원주의는 사회적 진보의 징표인가?·오늘의 다원주의적 한국 현실과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6호, 2003. 10).
-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 연구』, 제11권 제2호, 2008.11).
- 윤영돈, 「다문화·공동체 윤리와 통일교육」,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제18집, 2008.12).
- _____, 「사회주의 예술과 남북한 통합의 다문화 교육적 접근」,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중국학논집』 제2집, 2008.6).
- 이범웅,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8).
- 이용중,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통일교육단체간 적극적인 교류 필요하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217호, 2002. 1).
- 이유태, 「책임에 관한 철학적 성찰·레비나스와 요나스를 중심으로」,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연구』, 제17집, 2008. 4).
- 이정우, 「다양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태도·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비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社會科教育』, 제47권 제 3호 2008. 9).
- 이혁규, 「수업비평으로 여는 수업 이야기·분단 혹은 통일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의 풍경」, (초등우리교육, 『초등우리교육』, 제221호, 2008. 7).
- 양승현,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춘천교육대 교육대학원, 2007, 2).

- 정창현, 「민간 통일교육 혁신의 유일한 해법 상설 통일교육기관 설립」, (민족21, 『민족21』, 제95호, 2009. 2).
- 정희태, 「남북 화해·협력시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4권 제2호, 2004. 12).
- _____, 「제9장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업 방법 개발·초등 도덕과 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PBL)의 적용」,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7권 제2호, 2007. 4).
- 조성태, 「인천지역 학교통일교육·N세대 눈높이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215호, 2001. 11).
- 조응태,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도덕 교육」, (한국도덕교육학회, 2006).
- 최성화,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단원 수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대구 :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2004. 2).

<우수>

북한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 연구

- 2009. 4. 5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심으로 -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조석근

《목 차》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레토릭 분석
- IV. 북한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
- V.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북한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 연구

- 2009. 4. 5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연구’함에 있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구사한 레토릭(修辭, Rhetoric)이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 전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 발사 시점을 전·후해 총 49회의 레토릭을 구사했다.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 ‘전쟁 선포’ 등의 레토릭으로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위기조성을 통한 내부결속을 다졌다. 대외적으로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란 비난에 맞서 ‘인공위성’,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등의 레토릭을 구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요격’ 및 ‘제재’ 위협을 회피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북한의 레토릭은 국내·외적인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는데 기여했다고 여겨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를 논리적·실증적으로 검증하겠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레토릭은 국내·외적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데 기여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하겠다. 양면게임이론의 ‘윈셋’ 개념을 이용해 북한의 레토릭이 국내비준 차원, 국제협상 차원의 윈셋의 확장에 기여했음을 검증함으로써 ‘레토릭이 국내·외적 상황의 유리한 전개에 기여했다’는 가설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윈셋 개념에 의해 ‘북한의 레토릭이 국내비준적 차원의 윈셋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제1보조가설로, ‘북한의 레토릭이 국제협상

차원의 원셋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제2보조가설로 재설정한다. 이 두가지 보조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체계를 취하며 이 두가지 보조가설은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의 레토릭은 국내외적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데 기여했다’는 가설은 제 1보조가설인 ‘북한의 레토릭이 국내비준차원의 원셋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와 제2보조가설인 ‘북한의 레토릭이 국제협상차원의 원셋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가 검증됨으로써 검증되었다.

즉,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 결과, 실제로는 실패였지만, ‘성공’ 레토릭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이라 선전하여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결속을 강화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UN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비난에 맞서 평화적우주이용권을 강조해 미국의 ‘요격’을 포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및 요격의 압력에 거세지자, 총참모부 성명 발표 등 강경한 위기고조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내부결속 및 군부의 지지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UN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불완전한 동의 속에서 그 효용성이 의문시 되며, 이 또한 요격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레토릭의 일환’이란 판단하에 어떤 식으로든 북·미 대화쪽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구 분	북 한		국제사회(미국)	
	레토릭	결과	레토릭	결과
목 표	인공위성 발사 성공	X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	X
핵심 레토릭	인공위성	O	UN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
전술적 레토릭	• 발사전 : 위기고조	O	요격	X
	• 발사후 : 발사 성공	O	제재	△

아울러, 북한의 레토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정책적 고려사항은 첫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한반도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의 강경한 레토릭을 구사시 우선은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과도한 대응은 불필요한 한반도내 긴장고조로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단, 국방부 등을 통한 약간의 강경한 레토릭도 필요하다. 이는 국내의 정치적 지지와 군대의 사기부문에서 ‘북한에 굴복한다’는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의 행동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과의 접촉을 취하는 한편,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연구’함에 있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구사한 레토릭¹⁾(修辭, Rhetoric)이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 전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²⁾(이하 ‘장거리 로켓’이라 명함)을 발사했으며, 이 발사 시점을 전·후해 총 49회³⁾의 레토릭을 구사했다.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 ‘전쟁선포’ 등의 레토릭으로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위기조성을 통한 내부결속을 다졌다. 대외적으로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란 비난에 맞서 ‘인공위성’,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등의 레토릭을 구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요격’ 및 ‘제재 위협을 회피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북한의 레토릭은 국내·외적인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는데 기여했다고 여겨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를 논리적·실증적으로 검증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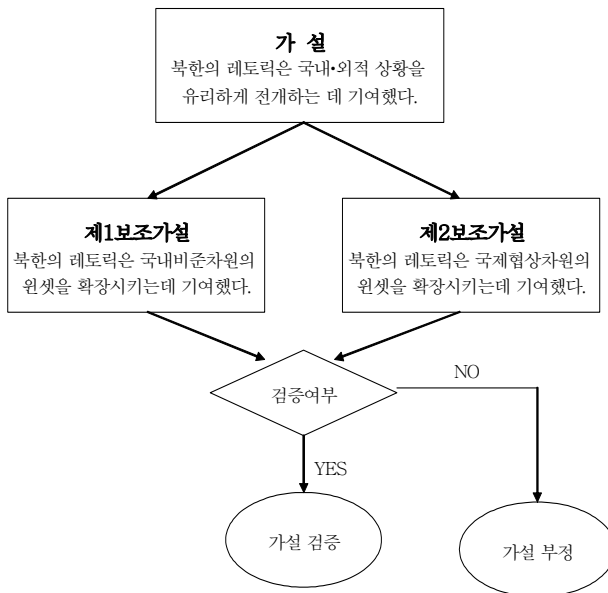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레토릭은 국내·외적 상

-
- 1) 레토릭의 개념에 대해선 2절에서 자세히 다룸.
 - 2)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들어 정부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장거리 로켓’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로켓은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로켓’이라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로켓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답변함.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9. 3. 30
 - 3) 레토릭의 범주는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통일부의 『북한동향』과 『주간북한동향』을 토대로 ‘장거리 로켓’에 대한 북한의 기관 및 언론에 대한 분석을 했다.

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데 기여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하겠다. 양면게임이론의 ‘윈셋’ 개념을 이용해 북한의 레토릭이 국내비준 차원, 국제협상 차원의 윈셋의 확장에 기여했음을 검증함으로써 ‘레토릭이 국내·외적 상황의 유리한 전개에 기여했다’는 가설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윈셋 개념에 의해 ‘북한의 레토릭이 국내비준적 차원의 윈셋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제1보조가설로, ‘북한의 레토릭이 국제협상 차원의 윈셋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제2보조가설로 재설정한다. 이 두가지 보조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체계를 취하며 이 두가지 보조가설은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그림 1]은 위와 같은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연구 방법이다.



[그림 1] 연구 방법⁴⁾

4)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윤치호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의미』,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과 곽중철의 『미국 대통령의 위기수사(레토릭)에 관한 연

II. 이론적 배경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레토릭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양면게임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이 이론의 핵심인 윈셋에 레토릭의 기능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관계성을 살펴보고, 북한 장거리 로켓의 국내적·국제적 의미를 고찰해 보겠다.

1. 레토릭의 정치적 기능

1) 레토릭 개념

레토릭(修辭, Rhetoric)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글을 아름답고 정연하게 꾸미고 다듬는 일, 또는 그 재주’라고 정의된다.⁵⁾ 이는 사물이나 현상에 기교를 발휘하여 실제와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로크(John Locke)는 레토릭을 “완벽한 사기 기술”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그만큼 화자의 의도나 기교에 의해 실제보다 미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왜곡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⁶⁾

케네디(George Kennedy)는 레토릭을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과 사고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라고 정의했는데⁷⁾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배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헤릭(Jame A. Herrivk)은 레토릭을 ‘상징의 도구를 이용하여 청중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목표 지향적인 담화(discourse)’라고 하여 레토릭을 화자의 의도, 청중, 상징의 도구 등 정치적 성향이

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의 연구 방법을 참고했다.

5) 동아출판사,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6), p.1217.

6) James A. Herrick, The History and Theory of Rhetoric (Boston: Allyn and Bacon Press, 2001), p.2.

7) George Kennedy, Aristotle on Rhetoric : A Theory of Civic Discourse (Oxford: Oxford Univ. Press, 1997), p.7, ibid, p.5에서 재인용.

강한 담화로 정의했다.⁸⁾

북한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상 레토릭의 정의는 헤릭의 것을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북한 레토릭’이란 ‘북한 지도자(그에 준하는 기관)⁹⁾가 청중들에 대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담화’라고 개념화할 수 있겠다.

2) 레토릭 특징

위와 같이 레토릭을 ‘화자가 청중들에 대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담화’라고 볼 때 하나의 분석 가능한 실체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레토릭은 계획된 것으로, 특히 국가 지도자가 구사하는 레토릭은 즉석에서 구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사된다.¹⁰⁾

둘째, 레토릭은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사된다는 것으로, 레토릭이 구사될 때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같아도 전혀 다른 형태의 레토릭이 구사된다.

셋째, 레토릭의 응답성으로 레토릭은 당면한 상황에 대한 것이거나, 이전에 표현된 특정한 레토릭에 대해 응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김정일 의원장에 대한 폄하’ 발언 등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대응 레토릭이 그 예이다.

넷째, 레토릭의 설득성으로 지도자의 레토릭은 청중들의 감정, 의지

8) James A. Herrick, op.cit., p.28.

9) 원래는 김정일의 레토릭을 연구함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김정일의 직접 발화는 매우 드문 사례이므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표되는 각종 성명 및 담화를 북한을 대변하는 레토릭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10) 대통령은 위기담론(레토릭)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수사적 선택은 전례, 전통, 편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Windt, Presidents and Protestors, "Political Rhetoric in the 1960s"(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0, p.4, 곽중철, "미국 대통령의 위기 수사(레토릭)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9 재인용.

들을 불러 일으키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데, 웬첼(Joshep Wenzel)은 ‘레토릭의 목적은 설득’이라고 단정짓기도 했다.¹¹⁾

다섯째, 레토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레토릭은 정치적 힘을 형성하고 분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레토릭과 정치적인 힘에 대해 “권력이란 그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상징체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정치적인 힘의 형성·유지가 레토릭의 구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볼 때 레토릭은 정치적인 한 실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레토릭 유형

가. 위기수사

위기수사는 국가지도자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의도하는 대로 반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레토릭이다. 이는 ‘위기감 조성을 통한 지지획득’이라는 논리와도 맥이 같다. 위기수사는 때로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 중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왜곡하는 것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윈츠(Theodore O. Windt)는 위기를 ‘정부의 수사적 창조물’로 보았다.¹²⁾ 그래버(Doris Graber)는 위기상황을 “오늘날 시민들은 정치세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경험으로 체득하기 보다 정치가의 말을 듣고 배운다”고 말했다.¹³⁾ 이는 국민들은 국내·외 정치의 대부분을 지도자를 포함한 정치

11) Joshep Wenzel, “Three PeJames of Argument”, Perspectives on Argumentation: Essays in Honor of Wayne Brockriede(Prospect Heights IL: Waveland, 1990), p.13, James A. Herrick, op.cit., p.28.

12) Denise M. Bostdorff, The Presidency and the Rhetoric of Foreign Crisis (Columbia: Univ. of South Carolona Press, 1994), pp.10~14.

가들의 언변, 또는 설득 등을 통해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위기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지도자의 외교정책에 지지를 보낸다.¹⁴⁾ 즉, 그들의 리더가 외부로부터 위협에 처해있을 때 국민들은 리더의 주변에 운집하는 경향을 있는데,¹⁵⁾ 9·11테러 이후에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87%까지 상승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나. 외교수사

외교수사는 국가간의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대표자에 의해 행해지며 상대국가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레토릭이다.¹⁶⁾ 따라서 국가 지도자의 위기수사의 주된 청중은 자국민인 반면, 외교수사의 주된 청중은 타 국가나 타 정치체제가 된다. 외교수사는 국가의 외교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압적일 수도, 때로는 유화적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자국의 의지를 감춘 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느 협상의 자리에, 또는 중재자의 자리에 있을 경우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2. 양면게임이론과 레토릭의 기능

1)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

퍼트남은 양면게임이론에서 국내정치나 국제정치는 불가분의 연관성 있으며, 협상은 국제협상국면(the first stage)과 국내비준국면(the second stage)이란 두가지 국면(stage)의 게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았다.¹⁷⁾ 국제협상국면은 협상 대상국 대표와 잠정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13) D. A Graber, *Verbal Behavior and Politics*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76), pp.20~21.

14) Denise M. Bostdorff, *op.cit.*, p.5.

15) 이러한 현상을 rally-round-flag라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제적인 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국민들이 외교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Bruce Russett, Harvey Starr, David Kinsella, *World Politics*(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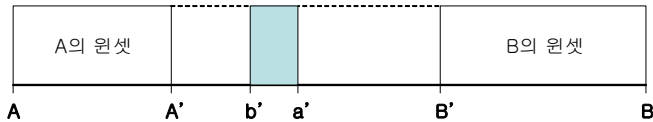
16) 최병구, 『외교, 외교관』(서울: 평민사, 2004), pp.234~235.

를 이끌어내기 위해 벌이는 국면으로서 외교상의 불리한 결과를 극소화하기 위해 국내적 압력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국면이다.

국내비준국면은 국제협상국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되는 결과들과 연계하여 국내의 여러 집단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러한 집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국면이다.

양면게임이론에서는 어떠한 국제적 합의든 이것이 실현되려면 국내에서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비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퍼트남은 윈셋(win-set)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윈셋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적인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¹⁸⁾

아래 그림처럼 협상의 당사국을 A, B로 지칭하고 A국가의 국내에서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범위를 A-A', B국가에서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범위를 B-B'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각국에서 국내적인 지지 기반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윈셋의 범위를 각각 A'→a'까지, B'→b'까지로 확장한다면 이 경우 b'-a'라는 공통 영역이 생길 수 있으며, 양국은 이 영역에서 국내 비준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윈셋은 국제적 협상에 있어서 국내적 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⁹⁾



[그림 2] 양면이론 게임에서의 윈셋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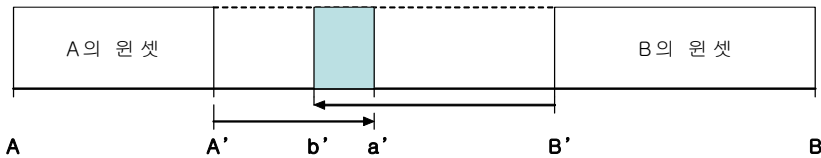
17) 이상우, 『국제관계 이론』 (서울: 박영사, 1991), p.118~119.

18) 김태현·한태준, “양면게임의 논리와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전략”, 김태현·유석진·정진영, 『외교와 정치』 (서울: 오름, 1995), pp.88~90.

19) 위의 책, pp.91~92.

2) 원셋 개념과 레토릭 기능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에서 국가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A-A'와 B'-B의 공통영역인 b'-a'가 된다. 그런데 공통영역 b'-a'가 실제적으로는 매우 작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지도자는 A-A'나 B'-B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없는 공통영역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셋의 영역을 확장시켜 공통영역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이 레토릭의 기능이 되는 것이다. 즉, 레토릭은 정책실행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그림 3] 원셋 구조에서의 레토릭의 기능

3. 북한 장거리 로켓의 국내외적 의미와 원셋

1) 국내적 의미

가. '강성대국'의 핵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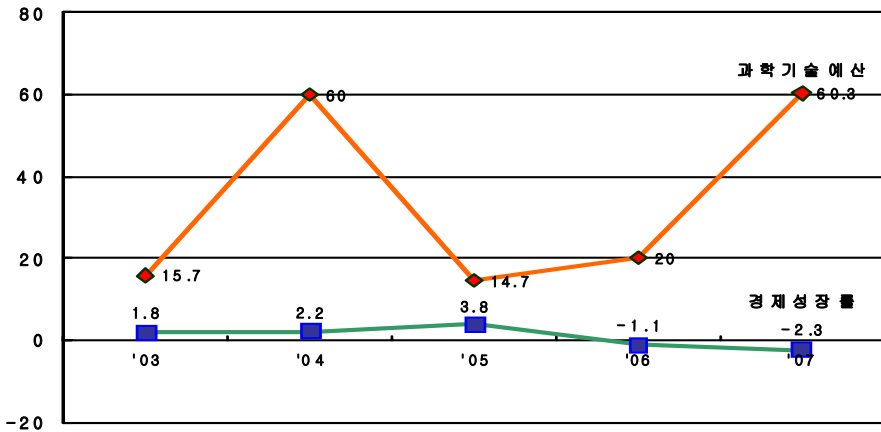
북한은 2012년까지 경제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혁명적 대고조'를 통해 "강성대국²¹⁾의 문패를 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장거리 로켓을

20) 윤치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의미』,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22~23 참조.

21) 강성대국의 구호는 『광명성-1호』가 발사된 1998년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위성을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다계단 로켓 기술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국가 전략과 항상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인도가 ICBM을 보유하고 있다. 또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이란 등이 ICBM 개발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동향>북한주요동향>대외관계』, "2012년 안받침한 광명성-2호"; 세계일보, 2009. 4. 6, "북,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

그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과학기술을 하지 말자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을 ‘과학기술의 해’로 정하고, 2000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의 3대전선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15.7%, 2004년은 60%, 2005년은 14.7%, 2006년은 20%, 2007년은 60.3%나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다.²²⁾



[그림 4] 북한 과학기술 예산편성²³⁾

실제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후 ‘광명성 2호는 강성대국의 대문과 잇달아 있다’(4. 21), ‘광명성 2호는 강성대국의 경제부흥노선’(4. 5), ‘광명성 2호는 자주강국의 위상’ 등 장거리 로켓을 강성대국과 연결지어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일 체제에 있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는 강성대국과 직결되어 있으며, 발사에 성공해야 하는 핵심사업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22)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2009)』, p.162.

23) 위의 책, p.134. p.162 재편집함.

나. '선군정치'의 표징(表徵)

북한은 1980년대 이래 한국과의 재래식 군사력 경쟁에서 뒤처지자,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전반적인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려 했다. 그 결과 1993년 발사한 '노동 1호'의 사거리가 1,300km를 넘어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었으며,²⁴⁾ 2009년 4월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3,000여 km를 날려 보내 미국을 놀라게 했다. 따라서, 미사일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김정일과 군부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표징(表徵)으로서, 군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⁵⁾

2) 국제적 의미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이 단지 수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안보에 큰 악 영향을 미칠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북한은 약 8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²⁶⁾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 어느 곳에서나 제주도 포함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²⁷⁾

24) '노동 1호' 발사로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가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대외에 공개되어, 북한의 미사일이 더 이상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국회도서관, 『북한 장거리 로켓 한눈에 보기』, 2009, p.14.

25) 문화일보, 2009. 4. 7, “북, 先民아닌 先軍 대가 멀지 않다”

26) 스커드와 같이 지대지미사일은 공격징후의 포착이 매우 어려워,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시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9, 2. 23일 “북, 특수전, 미사일전력 증강”

27) 김필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 국방과학기술플러스, 제38호, 2007. 7.

[표 1] 북한의 미사일 재원 및 보유 현황²⁸⁾

구 분	스커드-B	스커드-C	노 동	대포동1호	중거리미사일	대포동2호
사정거리(km)	300	500	1,300	2,500	3,000	6,700이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500	650	650~1,000
보유규모	600여 기		200	?	10~12	?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작전배치	개발 중

‘노동’, ‘대포동 1호’, ‘노동-B’와 같은 중거리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한국과의 분쟁 발발시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을 저지하는 수단이 된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은 미국의 분쟁개입을 저지하려는 수단이며, 탄도미사일 수출 및 미사일 기술 확산도 세계적인 안보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²⁹⁾ 이러한 장거리 로켓의 국제적 의미를 고려할 때,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의 발사는 반드시 포기되어야만 안보 위협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의 의미와 원셋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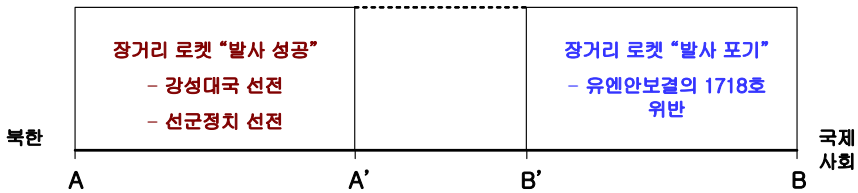
위와 같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국내적으로는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선전할 수 있어 발사에 성공해야만 하는 것이었으며,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및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발사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관련한 원셋 구조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假설정할 수 있는데, 협상의 접점이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북한이 구사한 레토릭을 실증 분석하여 이 원셋 구조를 확

28) 국회도서관, 『북한 장거리 로켓 한눈에 보기』, 2009, p.7.

29) 국제사회는 2006년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UN안보리 결의안 1695호』 및 『UN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고, 발사 중지를 요구했다. 문화일보, 2009. 3. 13일자, “북 발사체 내달 예고 파문, 인공위성 명분”

정하고, 레토릭의 기능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그림 5]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의 원셋 구조(假설정)

Ⅲ.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레토릭 분석

3장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사되었으며, 발사 전·후 북한의 레토릭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구사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되며, 이 분석을 토대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의 원셋 구조를 확정하게 된다. 4장에서는 이 확정된 원셋 구조에서의 레토릭의 기능을 검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1.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물체는 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로 확인되었으며, 1단계 추진체는 아키타현 인근 서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일본 동쪽 태평양 1,270km에 낙하되었다.³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전망 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말한 궤도에 새로 등장한 인공위성은 없으며,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은

30) 연합뉴스, 2009. 4. 5일자, “靑, 北로켓 11시 30분 15초 발사 확인”

실패했다”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분석을 토대로 실패라고 결론지었다.³¹⁾

[표 2]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일지³²⁾

시 기	주요 내용
2월 3일	로켓 부품, 무수단리 기지로 이동 포착
2월 11일	로켓 설비 추가 이동
2월 24일	북한, 시험통신 ‘광명성 2호’발사 준비 공언
3월 9일	인민군 총참모부, ‘위성요격 행위에 즉시 타격’성명
3월 12일	북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로켓발사시점/궤도좌표 통보
3월 24일	장거리 로켓 발사대 장착
4월 1일	연료 주입 시작
4월 4일	북한, ‘인공위성 발사 임박’ 발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2.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관한 레토릭 분석

1) 레토릭 현황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2월 7일부터 4월 29일³³⁾까지 ‘장거리 로켓’을 주제로 통일부 『대외관계』와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자료를 검색·분석하여 [표 3]과 같은 현황을 도출했다.³⁴⁾

31) 조선일보, 2009. 4. 5일자,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 ; 아시아 투데이 2009, 4. 6 “북, 로켓 발사전 미·중·러에 통보”

32) 쿠키뉴스, 2009. 4. 5일자, “북 로켓발사 포착에서 발사까지 ... 미정부, 발사체 정보 확인 안해”

33) 2월 7일은 북한이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암시를 보인 시점이며, 4월 29일은 인공위성 발사후 레토릭이 확연히 찾아진 시점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한정했다.

34)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동향>북한주요동향>대외관계』, 2009.2.1~2009.4.30,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KINU현안분석>주간통일정세』, 2009.2.1~2009.4.30. 단, 검색시 북한 언론의 畵文이 수록된 것이 아닌, 통일부 및 통일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2차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므로 집계되는 현황이

[표 3] 북한의 레토릭 현황

일 자	매 체	발표기관/성격	내용
2. 7	노동신문	논평/보도	• 이란 위성발사처럼 북도 우주진출 권리
2. 16	조중통	논평/보도	• 무엇이 날아 올라갈 지는 두고 보면 알 것
2. 18	조중통	총참모부대변인담 화	• KR/FE로 남북관계 정면대결 진입
2. 19	조중통	논평/보도	• KR/FE로 남북한 물리적충돌 시간문제
2. 24	조중통	우주공간기술위원 회 대변인 담화	• 광명성 2호를 쏘아올리기 위해 준비사업이 함북 화대군 위성발사장에서 본격 진행
2. 25	조중방	논평/보도	•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의 보편성
2. 26	조중통	조평통	• 이 국방장관의 대응타격론은 남 초토화 초래
3. 4	노동신문	논평/보도	• KR/FE로 영토 0.001mm 침범시 천백배 보복타격
3. 5	조중통	조평통	• KR/FE로 남조선 민용항공기 항공안전담보 불가
3. 9	조중통	총참모부 성명	• 광명성 2호 요격시 즉각 대응타격(미,일,남)
3. 11	노동신문	논평/보도	• 인공위성 요격은 미국의 MD 수립 책동
3. 12	조중통	논평/보도	• 국제기구에 비행기/선박 항행안전 자료 통보
3. 12	노동신문	논평/보도	• KR/FE는 한반도 핵전쟁 도발책동
3. 13	조선신보	논평/보도	• 미국의 MD시도는 냉전시대 대결노선 추구
3. 15	노동신문	논평/보도	• KR/FE는 한반도 전쟁일촉즉발 정세 조성
3. 19	조선신보	논평/보도	• 미국가정보국장 우주발사체가 인공위성 시사
3. 18	조중통	논평/보도	• 세계 모든 국가 우주진출 권리 보유
3. 19	조선신보	논평/보도	• 미국 제재시 6자회담 중단 위기 초래
3. 23	조선신보	논평/보도	• 위성발사는 경제강국 건설의 한 걸음
3. 24	조중통	외무성대변인 담화	• 우주공간 평화적개척은 합법적 권리
3. 25	노동신문	논평/보도	• 남한의 단호한 대처 비난
3. 26	조중통	외무성대변인 기자회견	• 안보리 제재는 난폭한 적대행위임

다소 차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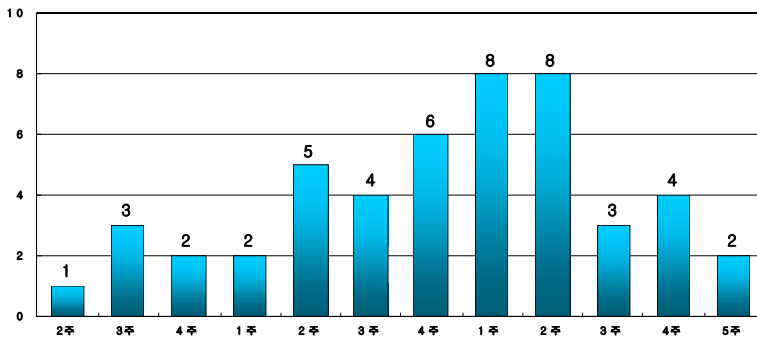
일 자	매 체	발표기관/성격	내용
3. 26	조선신보	논평/보도	• 안보리 제재는 초강경 대응 촉발
3. 28	조선신보	논평/보도	• 우주 개발은 모든 나라에 인정된 권리
3. 30	조중통	조평통대변인	• 남한의 PSI참여는 전쟁의 불구름 도화선
3. 31	조중통	기자회견	• 대북결의안은 반복 모략책동의 산물
4. 1	조중방	논평/보도	• 미국의 공중정찰 침범시 쏘아갈 것
4. 1	노동신문	논평/보도	• 미국의 요격시험은 MD체제 강화 의도
4. 2	조중통	총참모부중대보도	• 위성 요격시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
4. 2	조중방	총참모부중대보도	• 위성 요격시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
4. 3	노동신문	총참모부중대보도	• 위성 요격시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
4. 4	조중통	논평/보도	•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완료
4. 5	조중통	논평/보도	• 광명성 2호 성공적 발사
4. 5	조선신보	논평/보도	• 광명성 2호는 강성대국의 경제부흥노선
4. 5	조선신보	논평/보도	• 위성발사, 자주강국의 위상
4. 6	조중통	논평/보도	• 김위원장은 광명성 2호의 발사 전과정 관찰
4. 8	조중방	논평/보도	• 광명성 2호 성공적 발사 환영 군중대회
4. 8	조중통	총참모부 성명	• 일본의 위성부품 수색은 악랄한 정탐행위
4. 8	조중방	논평/보도	• 위성이 정상가동(위성 기술자 인터뷰)
4. 10	조선신보	논평/보도	• 일본 송금 규제강화 등의 조치 비난
4. 14	조중통	외무성 성명	• 북핵 6자회담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
4. 14	조선신보	논평/보도	• 안보리 성명은 북의 자주권 침해행위
4. 18	조중통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남한 PSI에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
4. 19	조중방	논평/보도	• 도별 군중대회 개최
4. 21	조선신보	논평/보도	• 위성발사는 강성대국의 대문과 잇달아 있음.
4. 24	조중방	논평/보도	• 김위원장이 위성개발한 과학자, 기술자 격려
4. 25	조중통	외무성대변인 기자회견	• 폐연료봉들을 채처리하는 작업 개시

일 자	매 체	발표기관/성격	내용
4. 29	조중통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안보리의 모든 결의/ 결정은 철회해야 함.
4. 29	노동신문	논평	• 안보리의장 성명 배격, 6자회담 거부

2) 레토릭 분석

가. 레토릭 발화 빈도

레토릭 발화 빈도를 고려할 때 4월 1·2주를 정점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월별로는 2월에 7회, 3월에 19회, 4월에 23회로 4월에 가장 많은 레토릭을 구사했다. 주별로는 발사시점인 4월 5일을 중심으로 4월 1주와 2주에 각각 8회로 가장 많았다.



[그림 6] 레토릭 발화 빈도(2009. 2. 7~4. 29)

특히, 2월 7일 노동신문을 통한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 보유’주장³⁵⁾을 시작으로 ‘인공위성 발사 준비 공식 발표’³⁶⁾, ‘국제우주조약가입 및 위성관련 관련 정보의 국제기구 통보’³⁷⁾ 등 향후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

35) 노동신문, 2월 7일자, “평화적인 우주이용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36) 북한은 2월 24일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인공위성 광명성 2호발사 준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동향>북한주요동향>대외관계』, “인공위성관련 국제우주조약가입을 발표”

37) 북한은 3.11자 평양발 해사국(Maritime Administration) 국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광명성 2호’ 발사 관련 정보를 IMO에 통보하였고, IMO 사무국은 동 서한 사본이 이메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쳐 관련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회람하였다. ▶주의 기간 및 시간: 2009.4.4

성 발사로 정당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발사 분위기를 이끌었다.

나. 레토릭 발화기관 및 매체

레토릭 발화기관으로는 조선중앙통신³⁸⁾과 조선중앙방송³⁹⁾ 등 국가통제언론기관의 논평 및 보도가 35회(72%)로 가장 많았고, 외무성의 담화 및 성명발표가 6회(12%), 총참모부 담화 및 성명발표가 5회(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참모부⁴⁰⁾의 성명발표는 1998년 12월 ‘작전계획 5027 관련 성명’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그 빈도도 잦았다. 레토릭이 발표된 매체로는 조선중앙통신이 21회(42%)로 가장 많았고, 조선신보⁴¹⁾ 11회(23%), 노동신문⁴²⁾ 10회(21%), 조선중앙방송 7회(14%)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북한의 보도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등의 보도를 통해 국제조약가입 사실과 인공위성 발사 관련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총참모부의 성명을 통해서도 인공위성 요격은 전쟁이라고 위협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⁴³⁾

(토)~8(수), 매일 02:00~07:00(UTC) ▶ 우리 시간으로는 11:00~16:00 ▶ 예상 위험지역 (위험지역 범위 1) : 동해 (위험지역 범위 2) : 태평양, 외교통상부, 3월 13일 발표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해상안전정보 IMO 통보”

38) 북한 유일의 통신으로서 북한 정부 당국의 의사를 정식으로 대변하는 국영통신,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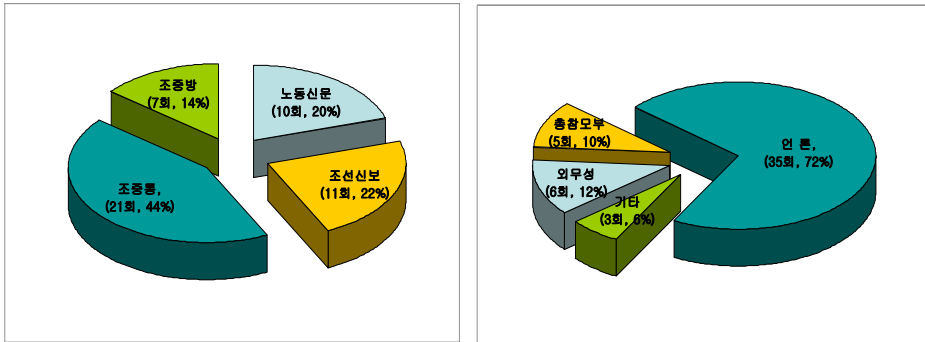
39) 1945년 10월 일제가 설립, 운영하던 북한 지역 5개 방송의 하나인 평양방송국의 시설을 인수하여, ‘조선중앙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개국하였다. 위의 페이지

40) 북한군의 육·해·공군에 대한 군령권을 장악한 조직, 통일연구원, 『북한 이해』 (2009), pp.106~107.

41)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조선어판(한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나누어 주(週) 3회 발행하는 기관지. 위의 페이지

42)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당 기관지, 위의 페이지

43)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동향>북한주요동향>대외관계』, “위성발사 관련 국제우주조약 가입 등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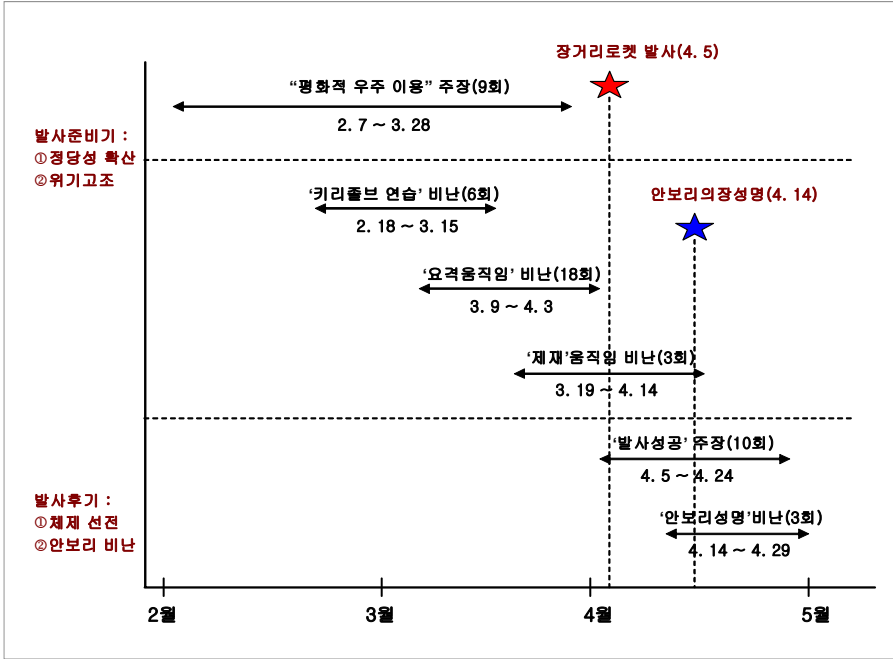


[그림 7] 레토릭 발화 기관 및 매체

라. 레토릭 주제

레토릭의 주제는 발사 준비기(2. 7~4. 4)에는 평화적 우주 이용권 보유 주장을 통해 국제사회의 탄도미사일 비난에 대한 정당권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미국의 요격 및 체제 압력에 대응해 키리졸브 연습 비난, 요격 움직임 비난, 체제 움직임 비난 등 강경한 위기고조 레토릭으로 맞섰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도 동원되었다.

발사 후기(4. 4~4. 29)에는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발사 성공 레토릭으로 체제 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시기별 레토릭 주제의 추이

3)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관한 레토릭과 원셋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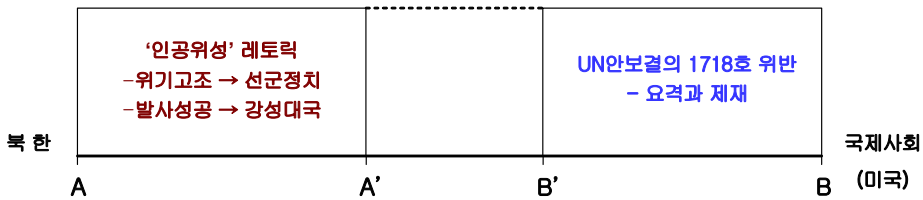
[그림 8]과 같이 북한 레토릭의 핵심은 ‘평화적인 우주이용권’, 즉 ‘인공위성’ 레토릭이었다. 이는 장거리 로켓이 ‘탄도미사일’이며, ‘UN안보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전술적으로는 ‘요격’과 ‘제재’ 압력에 ‘전면대결’ 등 위기고조 레토릭으로 맞섰으며, 발사 후에는 ‘발사 성공’ 레토릭으로 강성대국 선전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된 북한 및 국제사회(미국)의 레토릭을 비교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아울러 이를 원셋 구조에 적용하면 [그림 9]와 같다.

[표 4] 북한 및 국제사회(미국)의 레토릭 비교

구 분	북한	국제사회(미국)
목 표	인공위성 발사 성공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
핵심 레토릭	인공위성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전술적 레토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사전 : 위기고조 • 발사후 : 발사 성공 레토릭 	요격 및 제재



[그림 9]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한 원셋 구조

IV. 북한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

4장에서는 ‘북한의 레토릭이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는데 기여했다’는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를 위해 3장에서 확인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원셋 구조를 토대로 제1, 2 보조가설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제1 보조가설은 ‘북한의 레토릭은 국내비준적 차원의 원셋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이며, 제2 보조가설은 ‘북한의 레토릭은 국제협상적 차원의 원셋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이다. 제1, 2 보조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1. 국내비준적 차원에서서의 레토릭 기능

【제1 보조가설의 검증】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은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레토릭은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를 ‘강성대국으로 진입’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요격’과 ‘제재’압력에 맞서 총참모부 대변인을 전면으로 내세운 위기고조 레토릭이 빈번하게 구사됐다. 국내비준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레토릭 기능을 알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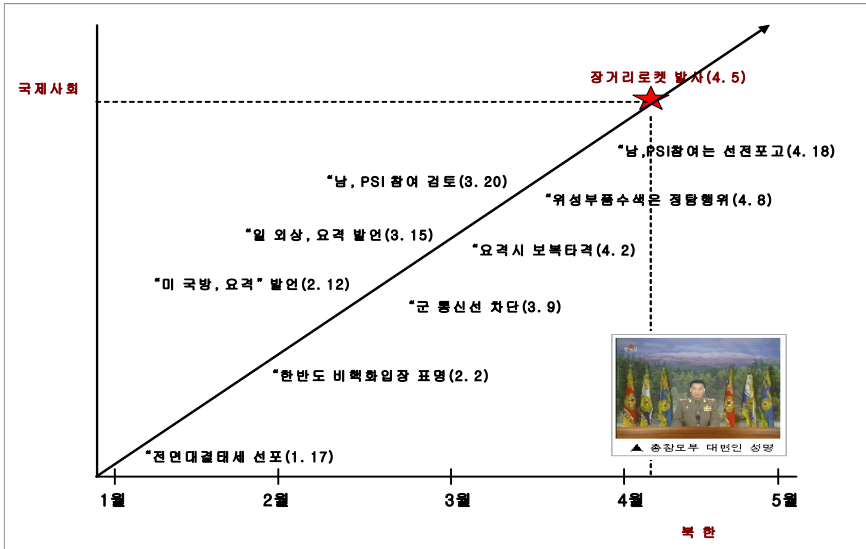
1) ‘위기고조’ 레토릭

장거리 로켓 발사 전 북한은 ‘인공위성’ 레토릭을 지속적으로 구사하는 가운데, ‘위기고조’ 레토릭을 병행했다. 특히, 군부가 직접 등장해 위기를 고조시켰다. 군복을 착용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199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등장해 ‘전면대결 선포’(1. 17), ‘남북한 군 통신선 차단’(3. 9), ‘요격시 보복타격’(4. 2), ‘위성부품 수색은 정탐행위’(4. 8), ‘남한의 PSI 참여는 선전포고’(4. 18) 등 당장 전쟁이 일어날 듯한 강경한 레토릭을 구사해 위기를 고조시켰다.⁴⁴⁾

이런 군부의 레토릭 발화 횟수는 외무성 발화 횟수(6회)와 대등한 수준이었으며(5회), 특히 발화기간이 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구사되어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군부가 주도한다는 것을 가시화시켰다.

특히, [그림 10]에서 보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요격 및 제재 압력이 거세진 2~3월간에는 키리졸브 연습 비난(6회), 요격움직임 비난(18회), 제재 비난(3회) 등을 군부가 주도해 나갔다.

44)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에 따라 일본은 3월 28일 이지스함 3척을 동해와 태평양에서 배치했고, 한국은 세종대왕함을 3월 30일부터 동해에 배치해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동향>북한주요동향>대외관계』, “위성요격 관련 강경 입장 발표 및 성공적 위성 발사 주장”



[그림 10] '총참모부' 위기고조 레토릭

이러한 군부 중심의 레토릭은 미사일 문제를 군부가 직접적으로 주도한다는 군부의 강한 자부심과 입지를 강화시켜줌으로써 향후 미사일 협상과정에서 군부의 동의 및 지지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⁴⁵⁾

따라서, 북한의 레토릭은 ‘국내비준적 차원에서 원셋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제1 보조가설은 검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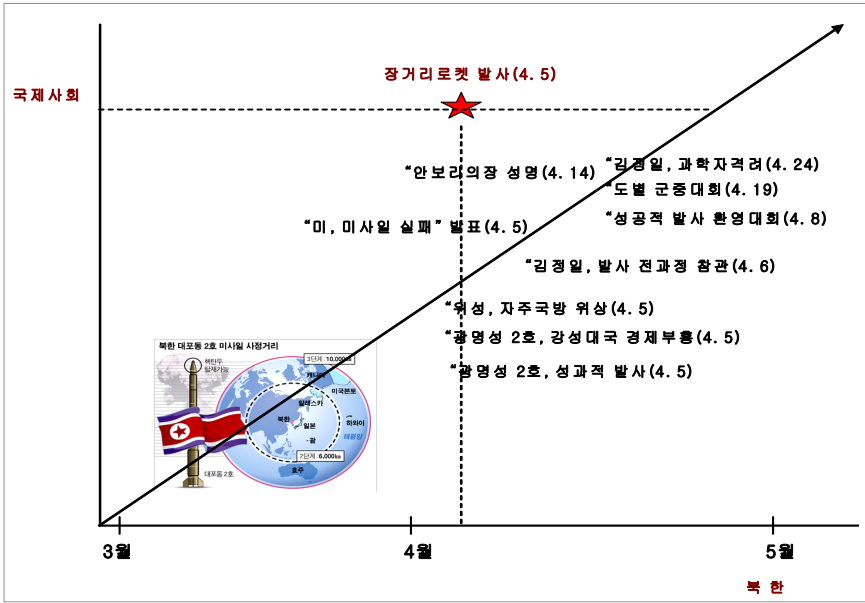
2) ‘발사성공’ 레토릭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의 발사는 실패했다고 결론 지었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부터 지속

45)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의 배경에도 ‘북한의 대미·대미 유화정책의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군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당시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북금융제재, 인권 및 탈북자 문제 등을 통한 압박 등을 강화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일환, “탈냉전이후 북·일관계와 그 진전을 위한 한국의 대응”, 『쟁점과 연구』, 2007, 제2권 제4호

46) 북미항공우주국방위사령부(NORAD)와 미 북부사령부 관리들은 “북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낙하했으며 2, 3단계 추진체와 탑재물은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적으로 ‘성공’ 레토릭을 구사했다.



[그림 11] ‘발사 성공’ 레토릭

[그림 11]과 같이 4월 5일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 전망계획에 따라 운반 로켓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은하-2호는 4월 5일 11시 20분에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으며, 광명성-2호는 40.6°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거리 1,426km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이다. 위성은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의 노래’선률과 측정자료 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UHF주파수 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며 성공인 양 보도했다.⁴⁷⁾

“궤도에 올라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위성체를 우주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향신문, 2009. 4. 7일자, “북한 로켓 발사 실패인가, 성공인가”

4월 5일 조선신보는 “우주개발에서도 자주노선을 관철, 외국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기술로 위성과 로켓을 만들어 쏘아올리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위성발사 성공을 계기로 ‘자주강국 위상을 확보했다’고 까지 선전했다.



▲ 광명성 2호 발사장면 공개(4. 8/조선중통)



▲ 김정일 과학,기술자 격려(4. 6/조선중통)

이러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 레토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가 더해지면서 효과가 더욱 증폭되었다. 즉, 김정일은 4월 5일 인공위성 발사 전과정을 참관했으며(4. 6/조선중앙통신), 인공위성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기술자들을 격려했다.(4. 24/조선중앙방송)

1998년 광명성 1호, 2006년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후로 공개행보를 삼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발사 후 보여진 김정일의 행보는 ‘인공위성 발사 성공’ 레토릭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울러, 성공적 발사 환영대회(4. 8), 군별 군중대회(4. 19) 등을 통해 성공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위성기술자와의 인터뷰(4. 8)등으로 성공의 객관화 작업까지 진행했다.

따라서,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한 내부적으로 ‘성공’이란 확신과 더불어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과 맞물려 체제 결속을 강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⁴⁷⁾

이처럼 북한 김정일은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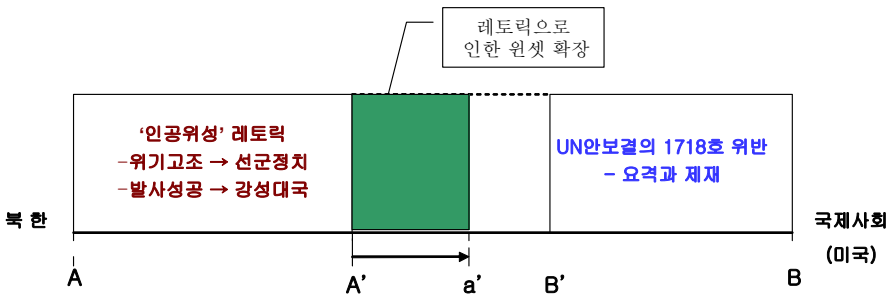
47)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동향>북한주요동향>대외관계』, “로켓 기술 수출 사사 및 위성발사와 강성대국 건설 연계”

48) 위의 페이지, “위성 발사 의미 선전 및 추가 발사 계획 시사”

‘발사 성공’ 레토릭의 지속적인 구사로 ‘성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북한 내부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⁴⁹⁾

따라서, ‘북한의 레토릭은 국내적 차원의 원셋 확장에 기여했다’는 제1보조가설은 검증되는 것이다.⁵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때 북한이 레토릭은 아래 [그림 12]와 같이 북한의 내부적 지지 기반 즉, 국내비준적 차원의 원셋을 A'→ a'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림 12] 북한 레토릭의 국내비준차원의 원셋 확장에 기여

- 49) 통일부에서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작성한 『북한 장거리 로켓 관련 참고자료』(2009. 4. 5)에서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북한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 과시 및 내부결속, 미사일 기술 축적 성과 과시를 했다고 분석했다.
- 50) 즉 1998년에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 이 발사가 실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선전함으로써 당시 김정일 총비서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한 북한은 이번에도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후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실패한 발사를 성공한 것으로 선전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김 총비서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축제분위기에서 추진하고 체제 결속의 계기로 삼은 것이다.

<표 : 광명성 1, 2 호 발사 당시 국내의 정세>

구 분	광명성 1호(대포동 1호)	광명성 2호(장거리 로켓)
발사일	1998년 8월 31일	2009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7월 26일 (제10기)	3월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전체회의	9월 5일 (제10기 1차회의)	4월 9일 (제12기)
북한 정세	김정일 1기 체제 출범	김정일 3기 체제 출범

2. 국제협상차원에서의 레토릭 기능

【제2 보조가설의 검증】

장거리 로켓 발사에 있어서 북한의 목표가 ‘발사 성공’이었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목표는 ‘발사 포기’였다. 이런 상충되는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이란 국제사회의 의혹에 맞서 ‘인공위성’이란 평화적 의미의 레토릭을 구사하여 미국의 ‘요격’ 및 ‘제재’위협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 ‘인공위성’이란 레토릭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요격’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를 검증하도록 하겠다.

1) ‘인공위성’ 레토릭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장거리 미사일 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안보리 결의 1718」 위반⁵¹⁾”이라며, ‘안보리 제재대상은 물론 요격 가능대상’이라는 입장으로, 한·미·일 공통의 입장을 이끌어 냈다. 이후 요격에 대한 의지(레토릭)를 지속적으로 구사했다.⁵²⁾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월 12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등은 우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격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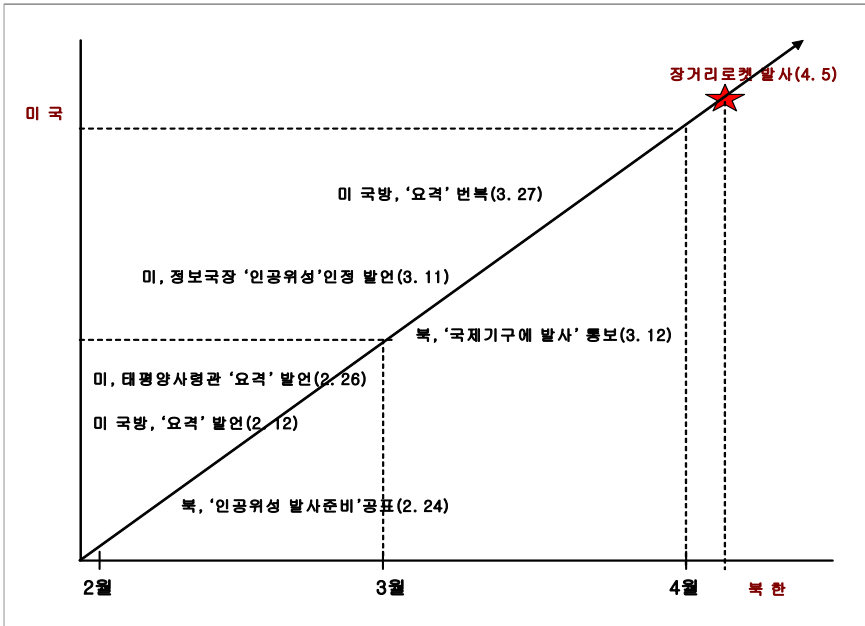
키팅 태평양사령관은 2월 26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대응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51)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등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그해 10월 지하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두건의 대북제재결의는 1695호와 1718호였다. 1695호는 미사일과 미사일관련 물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1718호는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제거를 결의했고, 회원국들에 WMD와 관련된 북한과의 거래는 물론 사치품의 북한 제공을 금지했다. 동아일보, 2009. 3. 14일자, “오바마, 북 미사일 발사계획 위험 첫 경고”

52) 국민일보, 2009. 3. 27일자. “北 로켓 도발에 정교한 대처 필요”

53) 국민일보, 2009. 2. 12일자, “미국 북한 대포동 발사땀 요격, 게이츠 국방 밝혀”

이에 대해 북한은 ‘인공위성’이라는 레토릭으로 대응했다. 2월 24일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 및 시험위성 통신 광명성 2호 발사준비’를 공표해⁵⁴⁾ 발사되는 물체는 ‘인공위성’임을 강조했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와,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에는 사전 예고가 없어 국제적 비난을 받은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⁵⁵⁾



[그림 13] ‘요격’에 관한 북-미 레토릭

54) 서울신문, 2009. 2. 17일자, “북, 뭐 쓸지 두고 보라, 발사임박 암시”, 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은 평화적 이용권을 강조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동정을 구하고 약소국가의 지지를 노리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불법·무례국가라는 이미지로는 현 국제 정세를 뚫고 나갈 수 없다는 판단아래 우주 평화적 이용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행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더라도 ‘정당성’에 문제삼지 말라는 사전조치라고 분석했다.

55) 서울신문, 2009. 3. 13일자, “북 사전 발사 통보 의도는” 실제로 1998년 9월 15일, UN안보리 의장은 대언론 구두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일본 근해 로켓 추진체 발사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사전 통고없이 발사한 것은 유감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어업, 해상 운송 저해 및 역내 신뢰 증진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관련국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의 자제를 촉구했음. 1998년 9월 22~10월 2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총회결의를 채택함.1)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a Contracting State’로 표현하고, 로켓 추진체 발사가 사전통고없이 행해져 민항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야기했음을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각국에 촉구함.

3월 12일에는 “4월 4일에서 8일 오전 11시~오후 4시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며 동해와 태평양상의 잠재적 위험지역을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했다.

이런 북한의 레토릭에 미국의 강경한 요격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3월 11일 미 정보국장 테니스 블레어는 “북한이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를 쏘아 올리려 하고 있다”고 언급해 요격에 대한 변화를 암시했다.⁵⁶⁾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3월 29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요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요격을 포기했다.⁵⁷⁾

사실 요격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평화적 우주 이용 행위인 인공위성 발사를 요격한다는 명분은 희박했고, 또한 요격을 시도한다고 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적어 미사일 방어계획(MD) 추진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⁵⁸⁾

따라서, 북한의 ‘인공위성’ 레토릭은 미국의 요격 부담⁵⁹⁾을 덜어주는 한편, 미국의 인공위성 인정으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능을 한 셈이다.

56) 서울신문, 2009. 3. 12일자, “미국의 북 미사일 발언 혼란스럽다”

57) 세계일보, 2009. 3. 30일자, “미 게이츠 국방, 북한 미사일 요격 않을 것” 문제는 북한이 이번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상황에서 요격할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대포동 2호 요격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부담이다 선불리 요격에 나섰다가 실패한다면 국제적인 입지 위축과 함께 미국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MD회의론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된다. 대북정책에서도 소중한 카드 하나를 버리는 셈이다. 반대의 경우 글로벌 MD체제 구축에 힘이 실리고, 북한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할 수 있다. 국민일보, 2009. 2. 12일자, “미국 북한 대포동 발사땀 요격, 게이츠 국방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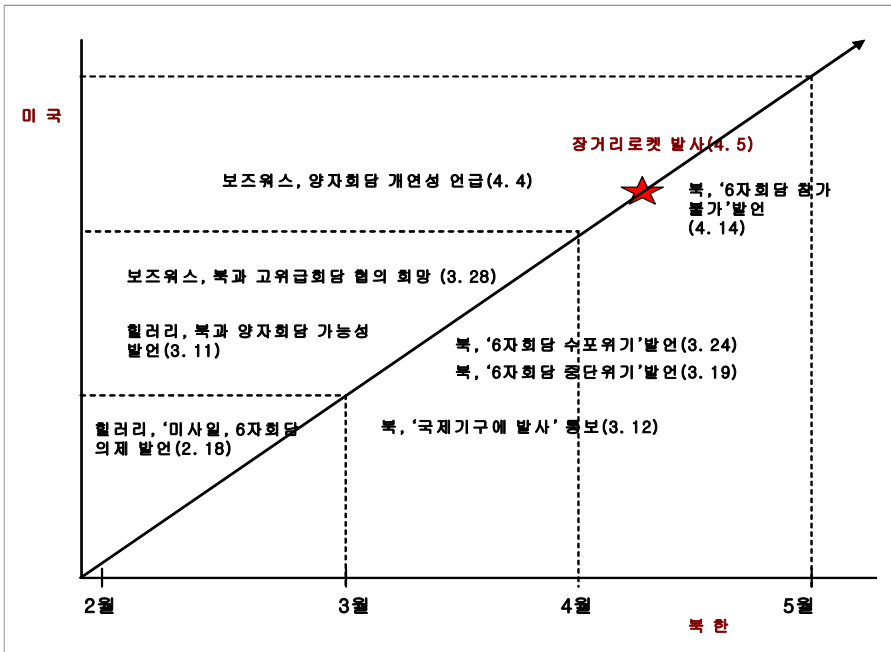
58) 미국이 요격가능성 등 강경대응 카드를 포기한 것은 기술적, 외교적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요격이 실패하면 미사일 방어 체제(MD)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MD체제의 성공률은 50%안팎이다. 동아일보, 4. 3일자, “북 로켓 발사 초읽기”

59)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요격’ 발언도 정치적으로도가 짙은 ‘레토릭’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초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실험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유약해 보일 경우, 오바마는 국내 보수파 및 국제사회의 비난에 휩싸일 수 밖에 없으며, MD추진의 정당성에도 큰 흠집을 입게 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발언)하는 것이 국내 및 국제 사회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의 레토릭은 발사 성공과 요격이라는 양국간의 접점이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으며, 이는 곧 국제협상차원의 원셋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로써 ‘북한 레토릭이 국제협상차원의 원셋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제 2보조가설도 검증되는 것이다.

2) ‘6자 회담 탈퇴’ 레토릭

‘인공위성’ 레토릭이 발사 이전 미국의 ‘요격’위협을 회피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면, 발사 이후 ‘6자 회담 탈퇴’ 레토릭은 미국의 ‘제재’ 입장에 혼란을 던져주는 기능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재’움직임을 일자, [그림 14]처럼 곧 ‘6자회담 불참’이라는 강경한 레토릭으로 대응했다.



[그림 14] ‘제재’에 관한 북-미간 레토릭

조선신보는 3월 16일 “대북정책을 검토중인 오바마 정권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예단하기는 이르나, 제재와 압력의 길을 택할 경우 6자 회담에 의해 유지되어온 북한과의 대화과정이 중단 위기에 직면될 것”이라고 했다.⁶⁰⁾

외무성대변인은 3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은 적대행위로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어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⁶¹⁾며 미국을 압박했다.

이런 북한의 대응에 미국의 ‘제재’ 입장도 변화가 보였다.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2월 18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북핵 6자회담의 의제로 삼겠다”며, 6자회담의 의제가 아닌,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 의제로 하겠다는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 즉, 미사일 문제로 미국의 관심 끌기에 성공한 것이다.⁶²⁾

힐러리 장관은 또한 3월 11일 “미사일(또는 인공위성)발사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6자회담, 미사일 회담 등 양자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⁶³⁾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과 만나고 싶고, 외무성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싶다”고 말해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⁶⁴⁾ 그는 또한 4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시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미국과의 양자대화 문호는 언

60)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동향>북한주요동향>대외관계』, “인공위성 발사관련 미·일 강경입장 비판”

61) 위의 페이지, “외무성 등 발사관련 입장 발표”, 북한이 6자회담 거부카드까지 거론한 것은 미사일 발사 후 예상되는 국제사회 비난과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포석이자 유엔 안보리 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미일과 유보적 태도의 중력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평화적 우주이용 주장에 이어 미사일 발사와는 별 상관없는 북핵 6자회담 카드를 통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나섰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관련국들의 의지를 북한이 역이용한 것이다.

62)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09-08(2. 16~2. 22)

63) 내일신문, 2009. 3. 12, “북미사일, 요격에서 논의대상으로”

64) 연합뉴스, 2009, 3. 29, “북 로켓발사 뒤 북미관계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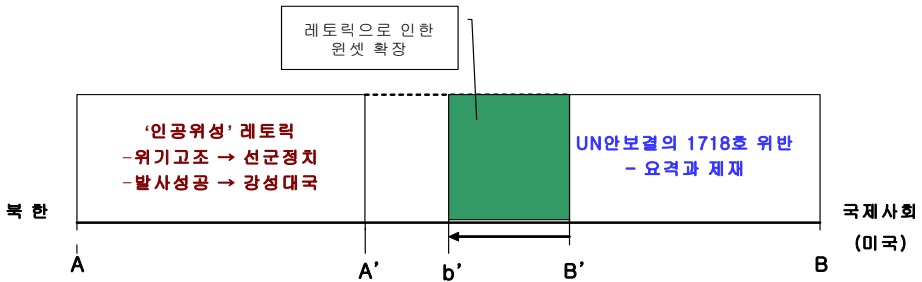
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⁶⁵⁾

이러한 발언들은 북한에 대해 UN1718호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겠지만, 대화 단절이라는 극한 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인사의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⁶⁶⁾

따라서, 북한의 ‘6자회담 탈퇴’라는 강경한 레토릭은 미국의 ‘제재’입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미 협상의 개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레토릭은 국제적 차원의 원셋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제2의 보조가설이 재차 검증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북한이 레토릭은 아래 [그림 15]와 같이 북·미간의 협상 공간이 없던 국제협상적 차원의 원셋 구조(북 : A-A', 미 : B-B')를 B'→b'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그림 15] 북한 레토릭의 국제협상적 차원의 원셋 확장에 기여

65) 연합뉴스, 2009. 4. 4일자, “보즈워스, 북미대화 문호 언제든 열려”

66) YTN, 2009. 8. 30, “북한인사 4명, 극비리 미국 방문”

V. 결 론

1. 연구 요약

‘북한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의 레토릭은 국내외적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데 기여했다’는 가설은 제 1보조가설인 ‘북한의 레토릭이 국내비준차원의 원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와 제2보조가설인 ‘북한의 레토릭이 국제협상차원의 원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가 검증됨으로써 검증되었다.

즉,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 결과, 실제로는 실패였지만, ‘성공’ 레토릭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이라 선전하여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결속을 강화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UN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비난에 맞서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강조해 미국의 '요격'을 포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및 요격의 압력에 거세지자, 총참모부 성명 발표 등 강경한 위기고조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내부결속 및 군부의 지지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UN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불완전한 동의를 속에서 그 효용성이 의문시 되며, 이 또한 요격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레토릭의 일환'이란 판단하에 어떤 식으로든 북·미 대화쪽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표 5] 북한 레토릭의 평가

구 분	북 한		국제사회(미국)	
	레토릭	결과	레토릭	결과
목 표	인공위성 발사 성공	X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	X

구 분	북 한		국제사회(미국)	
	레토릭	결과	레토릭	결과
핵심 레토릭	인공위성	O	UN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
전술적 레토릭	• 발사전 : 위기고조	O	요 격	X
	• 발사후 : 발사 성공	O	제 제	△

2. 정책적 제언

1)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의 레토릭은 상당한 전략을 가지고 구사된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의 국제적 공조를 파괴하려고 구사되며, 한국내 남남 갈등까지 의도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일본 등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러시아 등 과도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간 로켓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발사 중단 설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 한국의 대처는 매우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4월 3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마지막까지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중국의 답변을 이끌어 낸 대목은 높은 외교 성과로 여겨진다. 이처럼 한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입장에 서기 보다, 이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레토릭 필요

북한이 한반도내 긴장고조를 의도로 강경한 레토릭 구사시 우리는 차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과도하게 대응하는 레토릭을 할 경우 한반도내 긴장고조로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노리는 바이다. 아울러 유의해야 또 하나는 우리의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곧

한국내 이념 분쟁으로 확산되고, 남남갈등을 부추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위 당국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시 최대한 미국, 일본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침착한 대응이 자칫 ‘북한의 위협에 굴복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내 보수적인 국민들과 군대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정 부분 국방부 등을 통해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뜻하는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국내의 정치적 지지와 군대의 사기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이러한 레토릭은 한반도내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반면,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과의 접촉을 취하는 한편,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회도서관, 『북한 장거리 로켓 한눈에 보기』 (서울: 국회, 2009),
김태현·유석진·정진영, 『외교와 정치』 (서울: 오름, 1995)
김필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 국방과학기술플러스, 제38호, 2007. 7.
동아출판사,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6)
오일환, “탈냉전이후 북-일관계와 그 진전을 위한 한국의 대응,” 『쟁점과 연구』, 2007, 제2권 제4호
이상우, 『국제관계 이론』 (서울: 박영사, 1991)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2009)』
최병구, 『외교, 외교관』 (서울: 평민사, 2004)
Bruce Russett, Harvey Starr, David Kinsella, World Politics(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D. A Graber, Verbal Behavior and Politics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76)
Denise M. Bostdorff, The Presidency and the Rhetoric of Foreign Crisis (Columbia: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1994),
George Kennedy, Aristotle on Rhetoric : A Theory of Civic Discourse (Oxford: Oxford Univ. Press, 1997)
James A. Herrick, The History and Theory of Rhetoric (Boston: Allyn and Bacon Press, 2001)
Josheph Wenzel, "Three PeJames of Argument," Perspectives on Argumentation: Essays in Honor of Wayne Brockriede(Prospect Heights IL: Waveland, 1990)
Windt, Presidents and Protestors," Political Rhetoric in the 1960s(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논문]

- 곽중철, 『미국 대통령의 위기수사(레토릭)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윤치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레토릭이 갖는 정치적 의미』,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인터넷]

- 네이버 백과사전 [http : //www. naver. com](http://www.naver.com).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북한동향>북한주요동향>대외관계』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KINU현안분석>주간통일정세』

[신문/방송]

- 경향신문, 2009. 4. 7일자, “북한 로켓 발사 실패인가, 성공인가”
국민일보, 2009. 2. 12일자, “미국 북한 대포동 발사땀 요격, 게이츠 국방 밝혀

- 국민일보, 2009. 2. 12일자, “미국 북한 대포동 발사땀 요격, 게이츠 국방 밝혀”
- 국민일보, 2009. 3. 27일자, “北 로켓 도발에 정교한 대처 필요”
- 노동신문, 2009. 2. 7일자, “평화적인 우주이용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 내일신문, 2009. 3. 12일자, “북미사일, 요격에서 논의대상으로”
- 동아일보, 2009. 3. 14일자, “오바마, 북 미사일 발사계획 위험 첫 경고”
- 동아일보, 2009. 4. 3일자, “북 로켓 발사 초읽기”
- 문화일보, 2009. 3. 13일자, “북 발사체 내달 예고 파문, 인공위성 명분”
- 문화일보, 2009. 4. 7일자, “북, 先民아닌 先軍 대가 멀지 않다”
- 서울신문, 2009. 2. 17일자, “북, 뭐 쏠지 두고 보라, 발사임박 암시” ,
- 서울신문, 2009. 3. 13일자, “북 사전 발사 통보 의도는”
- 서울신문, 2009. 3. 12일자, “미국의 북 미사일 발언 혼란스럽다”
- 세계일보, 2009. 3. 30일자 “미 게이츠 국방, 북한 미사일 요격 않을 것”
- 세계일보, 2009. 4. 6일자, “북,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
- 아시아 투데이 2009. 4. 6일자, “북, 로켓 발사전 마중·러에 통보”
- 연합뉴스, 2009. 2. 23일자, “북, 특수전, 미사일전력 증강”
- 연합뉴스, 2009. 3. 29일자, “북 로켓발사 뒤 북미관계 어떻게 될까”
- 연합뉴스, 2009. 4. 4일자, “보즈워스, 북미대화 문호 언제든 열려”
- 연합뉴스, 2009. 4. 5일자, “靑, 北로켓 11시 30분 15초 발사 확인”
- 조선일보, 2009. 4. 5일자,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
- 쿠키뉴스, 2009. 4. 5일자, “북 로켓발사 포착에서 발사까지”
- YTN, 2009. 8. 30, “북한인사 4명, 극비리 미국 방문”

<장려>

북한의 위기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

- 2009년 위기 상황과 「전국선동원대회」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김미연

《 목 차 》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북한 선전선동원대회의 개최 사례 분석
- III. 2009년 전국선동원대회 내용 분석9
- IV. 위기의 2009년
- V. 결 론 : 우리의 대응 전략

【참고문헌】

[요약문]

북한의 위기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

- 2009년 위기 상황과 「전국선동원대회」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북한은 과거 위기시마다 선전선동원 대회를 개최하여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였다. 북한의 선전선동원은 당 정책을 인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최전선의 성원들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들을 통하여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동원한다. 북한의 선전선동원대회는 1971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대회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소집되었다. 소수의 고위 간부가 아닌 다수의 현장밀착형·대중형 선전선동원을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 독보회, 총화 등 일반 수준의 선전선동사업이 진행되었거나 평상시와 같은 위계라인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다.

북한이 최초로 소집한 1971년 제1차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 대회는 대외적으로는 중·소 대립으로 인한 원조 감소, 베트남 전쟁의 격화, 반공정책을 표방하는 남한 정권교체 등의 위기 요인에 의해 개최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제1차7개년계획이 실패한 것과 노력동원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대회 소집을 필요로 했다. 1985년에 진행된 제2차 전국선동원대회는 대외 개방·개혁 물질 차단에 대한 필요성과 남북한 간 교류 및 접촉 확대에 따른 경쟁 구도가 조성된 대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대내적으로는 6개년계획과 이후 제2차7개년계획, 그리고 외자유치 전략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결속시켜야 할 필요성에 의해 대회가 소집되었다. 아울러 김정일 후계

구도가 구축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위한 선동원대회는 필수적이었다. 2000년의 제3차 전국선동원대회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하고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 장악과 중소동맹 해체로 인한 안보 불균형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 의해 개최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사망, 경제난 등 총체적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 전략인 ‘선군’에 대한 선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08년 북한 경제 성장률은 3.7%를 기록, 북한 경제가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고 있는 조짐이 아니냐는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2009년에 북한은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를 개최했다. 2000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대회이다. 이는 외부의 관측과는 달리 북한 당국이 2009년을 위기의 해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극도로 비난을 해오던 미국 및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 스스로가 먼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 때마다 소집되는 전국선동원대회가 개최된 2009년, 북한은 실제로 정치·경제·외교 부문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열강의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정책, 남측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새로운 대북 정책 추진 전략 속에서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얻기 위한 북한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북한에서는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몇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는 계획 경제의 틀을 고수하며 경제난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주민들을 결속시켜야 하는 과제가 북한 지도부에 남겨져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속도전’ 방식의 노력총동원운동인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에 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150일전투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을 반증한다.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북한이 소집하였던 선전동원대회의 개최 목적과 배경을 고찰한 결과 북한은 일련의 위기 상황 시 대회를 개최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9년 북한은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를 열었다. 북한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지표이다. 글로벌 위기에서 막 벗어나려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의한 위기 확산은 우리 남측 정부의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9년 현재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측불허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원칙에는 철저, 접근에는 유연”의 방식에 대한 고수가 필요하다. 원칙에 기반 한 정책 운용은 북한의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만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있어서도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은 대결 국면에 대비한 전투력의 증강이나 상대에 대한 완전한 차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경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타당성 높은 예측에 기반 한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적 사례에 기초하여 북한 내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북한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향후 조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I. 서론

북한은 과거 위기 때마다 선전선동원 대회를 개최하여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였다. 북한의 선전선동원은 당 정책을 인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최전선의 성원들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들을 통하여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동원한다. 북한의 선전선동원대회는 1971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대회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소집되었다. 소수의 고위 간부가 아닌 다수의 현장밀착형·대중형 선전선동원을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 독보회, 총화 등 일반 수준의 선전선동사업이 진행되었거나 평상시와 같은 위계라인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199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2006년과 2007년에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다. 2008년 북한 경제 성장률은 3.7%를 기록, 북한 경제가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고 있는 조짐이 아니냐는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2009년에 북한은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를 개최했다. 2000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대회이다. 이는 외부의 관측과는 달리 북한 당국이 2009년을 위기의 해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150일 전투’의 개시 역시 위기의 반증이며, 지금까지 극도로 비난을 해오던 미국 및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 스스로가 먼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통한 5개합의 사항 도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조의 표명을 위한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특별조문단 파

견, 북한 조선노동당 김기남 비서의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험구 사용의 중지 등이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과거에 개최되었던 선전선동원대회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2009년 북한은 위기를 인식,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북한에서 개최된 선전선동원대회 분석을 통해 북한이 대내외적인 도전 상황에 대응하여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 나갔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나아가 2009년 위기 국면에 들어선 북한의 내부 변화를 대회를 통해 관찰함으로써 북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회는 구성의 특성 상 한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는 의식적 행사이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북한이 대회 개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은 변화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 환기시키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통제 기제를 마련하는 것 역시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대회는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 있는 신념과 사상에 대해 강조, 재생산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기능을 지닌다.¹⁾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대내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위기 발생 시 사회통합을 도모할 것이다.

1) 오재환, “권력지배의 정당화와 국가의례”, 『사회조사연구』 제17권, 2002, pp.50-57.

북한은 대내외적 변화와 위기에 극복하고 대응해 왔으며, 북한의 선전선동원대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기별 위기 상황마다 개최되었다. 따라서 북한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환적 의미를 지니는 특정 시기의 주요 의제와 북한이 위기 시마다 개최한 선전선동원대회의 내용 변화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과정은 북한 정치 지도부가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에서 각급 기관, 단체가 개최한 대회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있으나(충남대학교 보운지 편집실, 1989; 권완, 1989; 정대규, 1995; 이계희, 1996; 정상용, 2001; 김창순, 2003; 강석윤, 2006; 이수석, 2006) 대회 참여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대회 내용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나 분석이 대부분이다.²⁾ 따라서 대회 개최와 위기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부분적으로 분야별 대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으나(박가연, 2003; 이준석, 2003; 차문석, 2004) 이들 연구 역시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대회를 통해 고찰·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비정례적으로 개최된 선전선동원대

- 2) 충남대학교 보운편집실, “조선로동당대회 연구 II”, 『북한사회연구』, 1989; 권완, “역대전당대회 그 노선과 전망”, 『북한』, 북한연구소, 1989; 정대규, “최근 북한 주요 동향”, 『한국통일연구』, Vol.2, 1995; 이계희, “북한정치체제의 형성과 변화”, 『한국통일연구』, Vol.2 No.1, 1996; 정상용, “남북관계 소강상태 지속, 분단 후 최초로 남북농민대회 개최”, 『북한』, 북한연구소, 2001; 김창순, “북한의 ‘전국어머니대회’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강석윤, “지금 북한에서는…, ‘전국계획일꾼열성자대회’ 개최 동향”, 『북한』, 북한연구소, 2006; 강석윤,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60돌 보고대회’ 동향”, 『북한』, 북한연구소, 2006; 강석윤, “지금 북한에서는…, ‘전국농업대회’ 개최 동향”, 『북한』, 북한연구소, 2006; 강석윤, “지금 북한에서는…, ‘핵실험 성공 환영 군민대회’ 개최 동향”, 『북한』, 북한연구소, 2006; 이수석, “북한은 군(軍) 중시사상을 내부적으로 확산시키고 경제난 약화 해소에 주력”, 『북한』, 북한연구소, 2006.
- 3) 박가연, “북한의 인테리 정책 연구: 인테리의 체제유지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준석, “북한의 인텔리정책: 과학기술중시정책과 사상교화의 이중성”, 『북한연구』, Vol.6, 2003; 차문석, “북한의 노동 영웅에 관한 연구: 영웅 탄생의 정치 경제적 메커니즘”, 『사회과학연구』, 제12권 1호, 2004.

회의 내용과 변화, 위기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대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개최하는 선전선동원대회가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정치 선전선동으로서의 대회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 국가들은 체제를 수립하고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선전선동을 정치의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⁴⁾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선전선동을 활용한 사례는 다음 [표 I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 -1] 선전선동의 정치적 목적과 활용 사례

	목적	선전선동의 활용 사례
레닌	소련공산주의 체제수립위한 공산당 정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접촉 위해 최대한 인적자원 이용 • 구두선동을 통한 여론 및 태도 형성
스탈린	독재권의 확립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숭배, 공개재판, 고백, 협박 통한 동원 • 매스미디어 집중적으로 활용
모택동	사상 통제, 대중을 일정한 방향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중심리 활용한 대규모 군중 모임, 연설
히틀러	군중 지배를 위한 감정적 일체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당대회 • 혈통과 대지 중심적 상징 사용

가)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북한 대회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선전선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정치 지도부의 의사

4) 조승섭, "대중선전선동에 관한 연구 - 소련공산체제와 나치체제 비교"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23.

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문, 방송, 통신 그리고 출판물 등의 각종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 왔다.⁵⁾ 이러한 미디어는 정치지도부가 대중에게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⁶⁾ 그런데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외부세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정의하게 만든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정치지도부와 대중 간의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대중 속에 이슈를 확산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대중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대회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그래서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정치지도부와 대중이 소통하는 선전선동 수단으로 작동한다.

나) 상징의 정치적 기능과 북한 대회

정치적 상징(political symbol)이란, 정치적 실행을 이루거나 변경 또는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정치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상징을 의미한다. 특히 권력의 실행에 있어서 중대한 정도로 작용하는 것이 정치적 상징이다.⁷⁾ 정치적 상징은 특정 정치행위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없애고, 체제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믿음을 보증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정부의 의도에 동조하도록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⁸⁾ 따라서 정치적 상징이 지닌 기능은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에서 상징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든다.⁹⁾ 정치적 상징에는 헌법, 헌장, 법

5) 북한은 비서국 내의 전문 부서 중 최고 실무기구로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 선전선동부는 영화·예술·음악 등 모든 문화 활동, 신문·출판·방송을 관장하고, 김일성 사적 및 대남·대외 선전을 지도한다. 정우곤, “조선노동당의 위상·기능·조직”, 『북한의 정치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155.

6) 리프먼(Walter Lippmann)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현실을 수용자에게 대신 표상하여 줌으로써 현실에 대한 그림을 제공해 주는 정보제공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N.Y.: Macmillan, 1954), pp.3-32.

7) H. D. Lasswell, & A.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 Yale Univ. Press, 1950), pp. 162-171.

8) M. Edelman,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p.17.

9) 정치적 상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i)정치질서 유지, ii)집단응집력 강화, iii)국민적 일체감 형성, iv)정치쟁점화, v)정치적 동원, vi)정치적 정당성, vii)사회적 분화, viii)갈등 규정. 유영옥,

를, 조약과 같은 권위적인 것과 당의 강령, 논쟁, 슬로건, 연설, 사설, 정치이론 등을 포함시키며 기념일, 음악과 노래, 장식, 치밀한 절차를 갖춘 의식, 행렬과 연설, 대중시위 등도 정치적 상징 범주에 넣는다.¹⁰⁾

대중의 설득과 동조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조작의 한 형태인 선전(propaganda)의 목적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 있다. 선전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닌다.¹¹⁾ 라스웰(H.D.Lasswell)의 선전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따르면 선전이란, “상징 또는 사회적 암시의 직접적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정치에서의 선전은 지지 대중을 확보하여 정치권력의 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으로 평가한다.¹³⁾

북한에서는 선전(宣傳)을 ‘①일정한 사상, 이론, 정책 등을 대중에게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해설해줌으로써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게 하는 사상사업의 한 형식, ②널리 말하며 퍼뜨리고 알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상사업은 정치영역에서 최우선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중을 대상으로 사상을 주입하는 과정인 선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선동(煽動)은 ‘①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대중에게 호소하여 그들의 혁

『상징과 기호의 정치행정론』(서울: 학문사, 1997), pp.276-284 참조.

10) C. E. Merriam, Political Power(N.Y. : Collier Books, 1934), pp.104-105.

11) T. H. Qualter, “The Techniques of Propaganda” in A. Wells(ed), Mass Media and Society(California : National Press Books, 1972), p.27.

12) H. D. Lasswell, & A.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 Yale Univ. Press, 1950), p.172.

13) 정치적 선전은 주로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하여 방법을 구사한다. 첫 번째 원리는 확대·왜곡·반복의 원리에 의한 정치선전이다. 이 원리에 따른 정치 선전은 주제는 고정시키되 표현 방법을 다양화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습관화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동조를 얻는 방식이다. 히틀러가 반복을 이용했던 것 역시 이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이입·감염·동일시의 원리이다. 대중이 지닌 호의적 태도를 다양한 상징물을 수단으로 하여 자극, 환기함으로써 연대의식을 갖게 하고 집단소속감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전당대회, 대중 집회 등이 이 방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 번째 원리는 단순화이다. 선전내용과 방법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선전내용을 직감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방식이다. 유영옥, 『상징과 기호의 정치행정론』(서울: 학문사, 1997), p.316.

명적 기세를 돋구어주며 당 정책 관철에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상사업의 한 형태, ②어떤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겨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선전과 마찬가지로 선동 역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상사업의 형태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발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선동이다.¹⁴⁾

북한이 정치 지도부와 대중을 연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선전선동 수단에는 연설·구호·영화·소설·가극 등의 언어와 예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 등의 현장학습, 대 기념비·동상·탑 등의 조형물, 기념일·신화 등이 있다.¹⁵⁾ 이러한 선전선동 수단들은 상징 조작을 통해 정치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한자리에 회동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이 아니다. 반면에 대회는 정치 지도부와 대중이 한 장소에 모여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의제를 전달, 수용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2) 북한 선전선동원의 역할

북한에서 선동원은 '사회적분공으로 선전활동을 하는 초급선전일꾼'으로 정의된다. 김정일은 선동원의 역할에 대해 "강사나 선동원은 실지로 학습을 조직 운영하고 강연이나 선동에 출연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동원하여야 할 초급선전일군입니다"라고 설명한다.¹⁶⁾

북한의 선전·선동원은 주요 산업별 생산 단위 현장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강연, 해설한다. 게다가 이들은 선전선동사업의 사회적 분공을 담당하고 있을 뿐 기업소, 협동농장 및 직장 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생산 일꾼 또는 근로자의 한 사람이다. 이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사상교양사업을 언제, 어디서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중들은 이들에 대한 거

14)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784, p.787.

15)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27.

16) 김정일선집 6권, p.197.

부감이 적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전선동원들이 대중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는 이들을 사상교양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II. 북한 선전선동원대회의 개최 사례 분석

1.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대회

1) 개최 배경

1970년대의 북한 경제는 1960년대에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구조적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떠안고 출발했다. 북한이 1960년대에 추진한 제 1차 7개년계획의 주요 기본 목표를 살펴보면 중공업의 우선 발전, 전국적 기술혁명이 눈에 띈다. 본격적인 공업화 추진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¹⁷⁾ 북한은 공업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동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투입해야 했고 기술 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했다. 게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어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과 노력동원을 경제에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 1950년대 말부터 추진된 이공계 대학과 공장대학 육성의 가속화는 기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⁸⁾ 동시에 북한은 물질적 자극 대신 ‘생산력 발전의 결정적 추동력인 사람의 혁명적 열의’를 동원하여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유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¹⁹⁾

17) 조동호 외,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pp.229~230.

18) 1960년 78개이던 대학의 수가 1970년에 129개로 증가하고 376개의 고등기술학교가 신설되어 기사와 전문가의 숫자는 497,000명으로 증가하기에 이른다. 조동호 외(2002), p.77.

결과적으로 경제개발계획 종료 시점인 1970년에는 북한의 공업총생산이 3.3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업생산 자체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전후복구기(1954-56년)와 5개년계획(1957-60년) 기간에 대단히 높은 성장을 이룩한 뒤 1960년대에는 성장이 매우 둔화되었다.²⁰⁾ 계획 기간 중 북한의 계획목표인 연평균 성장률 18%에 크게 미달한 수치는 제1차 7개년계획의 순차적인 진행을 위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가 급감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노력동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식은 경제적·물질적 동기를 결합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과학과 기술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의 창의력을 계속해서 확보하지 못하여 세계경제와 점차 유리되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되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²¹⁾

1970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결정서에 따르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의 하나인 문화혁명 추진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²²⁾ 경제계획에 힘입어 1960년대 북한의 경제는 기계공업의 성과, 즉 대형화와 종합화는 상당히 이룩했지만 질적인 발전에 해당하는 자동화와 화학화의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은 공업건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이를 위한 기술자·전문가의 육성 정책에서 더욱 힘을 쏟았다. 북한은 특히 6개년계획 기간 중 60만 명에 이르는 기술자·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전문기술관료 40만 명과 합하면 100만

19) 김일성은 1969년 3월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황의각 외,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pp.204~205.

20) 5개년계획(1957-60년) 기간 동안 공업총생산은 36.6%, 국민소득은 20.9%였다. 반면 7개년계획(1961-70년) 기간 동안 공업총생산은 12.8%, 국민소득은 8.1%로 추정되고 있다. 황의각 외 (1995), pp.106~107.

21) 강만길 외, 『한국사21』 (서울: 한길사, 1994), pp.233~234.

22)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이 강화되어 민족간부의 대렬이 튼튼히 꾸러졌으며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제5권 경제발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515~516.

명이라는 많은 숫자이다. 이는 1970년대 북한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실무적인 기술관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관료 계층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개혁운동은 기존의 경제 전략과는 다른 변화의 움직임으로 주민들에게 비추어질 우려가 있었다.²³⁾ 북한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변화된 경제 전략에 적응시키고 안심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시 제5차 당 대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울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며 사상혁명이 우선적으로 강조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것이 사상혁명의 목표였다.²⁴⁾

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 과정에서 신흥 테크노크라트 층을 양성해야 하는 필요와 경제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상적 동요를 전면적으로 차단해야만 하는 정치적 필요가 공존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1950년대 말부터 강조된 사상혁명은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상혁명을 강조하는 것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경제건설을 이루는 데에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한편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²⁵⁾

북한이 노동에 대해 밝히고 있는 공산주의적 태도의 의미는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노동에 참가하는 고상한 태도”이다. 이러한 노동동원의 이데올로기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각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로 여기게끔 만든다.²⁶⁾

23) 강만길 외(1994), pp.272~273.

24)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365~366. 당 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하며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 세우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당 중앙은 이로부터 사상사업에서 고질로 되어 있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었습니다”, 김정일선집, 제3권, p.453.

25) 강만길 외(1994), p.222.

26) 강만길 외(1994), pp.226~227.

1960년대 경제 발전을 위해 고안된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노동동원의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치사상사업을 벌여 사람중심, 대중노동력 중심의 경제건설을 이룩하는 것이 ‘대중노선’의 특징이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 아래 북한은 1960년대부터 우선적으로 사상혁명을 통한 인간개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한편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자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북한의 경제 전략은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 상황이 걸림돌이 되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²⁷⁾ 구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이 감소되고 반공정책을 표방하는 남한의 정권 교체, 중·소간의 대립, 베트남전쟁의 격화 등의 대외적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와 국방의 동시 발전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고 군사비의 과잉지출에 따른 자원 배분의 악화로 이어진다.²⁸⁾ 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생필품에 대한 부족을 초래하여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 개최 목적과 내용

당시의 북한 지도부의 고민은 1971년 3월에 개최된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대회’에 반영되어 있다. 1971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대회’는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선전선동원을 대상으로 열린 최초의 대회이다.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대회의 목적은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의 2년분 과제를 4·15 전에 완수하기 위하여 전 부문

27) 실제로 전후복구기(1954-56년) 41.8%, 5개년계획(1957-60년) 시기 36.6%의 공업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에 비하면 7개년계획 기간 동안의 12.8% 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평균 국민소득 성장률 측면에서도 30.1%→20.9%→8.1%로 감소 추이를 보인다. 황의각 외,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pp.204~205.

28) 구평화·문병집, 『북한경제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포럼, 1996), pp.45~48.

에서 노력을 총동원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²⁹⁾ 대회에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를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은 근로자들을 김일성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을 무장시킴으로써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고 북한 문헌은 밝히고 있다.³⁰⁾

북한은 현대적이고 선진화된 산업설비 및 기술도입 등의 기술혁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정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주요 기업소 및 협동농장 등 각 생산 단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지도부는 대중을 교양시키고 감화시켜야 하는 사회적 분공을 부여 받은 선전선동원을 한 자리에 모아야 할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은 결과적으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지난 1960년대에 전개된 지나친 군사주의적 대외 정책에서 탈피하여 내부의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가의 자본과 인민들의 노동을 결합하여 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 목표 달성 방식을 버릴 수 없었다. 즉 북한의 주요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균중노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단위 현장에서 선동원, 선전원의 역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한 6개년 계획의 기본과업 중 공업부문 과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³¹⁾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아직

29)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p.290.

30)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p.291.

31) 서대숙 편(2004), pp.517~518.

우리나라에 없거나 적은 자원을 찾아내고 공업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수입 원료를 적게 쓰거나 그것을 국내원료로 대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모든 공업부문들을 적어도 원료의 60~70% 이상을 자체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부문들로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이 공업 부문에 지시한 과업의 핵심은 ‘주체’와 ‘절약’을 통한 증산임을 알 수 있다. 공업부문 뿐만이 아니라 기본건설 부문에서도 노력과 자재를 절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건설부문에서도 유사시에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여 예비를 마련할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차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대회에서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에 대한 보고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발휘를 통해 생산에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다.³²⁾ 1차 7개년계획의 목표로 내세웠던 기술혁명의 성과가 미약했으며, 성장률도 저조, 결과적으로 계획도 실패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할 경제계획의 핵심도 결국은 노력 동원과 절약과 내부 예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대중들을 설득하고, 감화·교양시키는 선전선동원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으리라 판단된다.

2. 제2차 전국선동원대회

1) 개최 배경

1970년대 북한은 ‘주체화’와 ‘자력갱생’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민족적 자립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경제 부문에 새롭게 내세운 ‘현대화’와 ‘과학화’의 성과는 저조한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질적인 성장은 향후 달성해야만 하는

32)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 로농통신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선동사업을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개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극복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고무추동하여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2), p.290.

과제로 남겨졌다. 국방우선 경제정책과 계획경제에 대한 강조 등은 경제의 효율성과 자발성을 저해하여 결국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극복은 1980년대로 넘어간 과제 중의 하나였다.³³⁾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6개년계획은 제1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거울삼아 추진된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차 7개년계획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구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원조 감소에 있었다. 따라서 6개년계획에는 북한의 외자유치에 대한 정책변화가 엿보인다. 북한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서방으로부터 자본도입을 추진하여 공업화 과정을 지속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는 동유럽권 국가들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에 동·서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서방으로부터 자본도입을 추진한 것에 힘입은 결과이다.³⁴⁾ 그러나 생산부문 간의 불균형, 과학기술의 부진, 자원의 낭비에 따른 부족한 자원의 고갈 등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6개년계획은 1975년 8월 사실상 중단되었다.

1년간의 완충기 이후 북한은 1978년부터 제2차 7개년계획에 착수한다. 북한이 제2차 7개년계획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는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낭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⁵⁾ 절약에 대한 강조는 1970년대에 외자유치의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새로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설비투자 없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이루겠다는 것은 이미 제2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예견하는 것이었다. 물론

33) 강만길 외(1994), p.283.

34) 조동호 외(2002), p.232.

35) 서대숙 편(2004), pp.555~619.

새로운 설비 건설을 위해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1980년 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발표하여 ‘4대 자연개조사업’ 전개 및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기념비적 건축물의 신설’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여 추진된 자연개조 및 건축물 축성 사업은 조성 도중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완성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생산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³⁶⁾ 계획의 성과가 저조하자 김정일은 1982년 6월 8일에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발단이 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한다. 이때부터 북한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구호 아래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북한은 80년대속도 창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의 일환으로 전국청년열성자회의,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³⁷⁾ 대중적 열의가 발휘된 노력동원운동의 결실 덕분인지 1982~1983년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12.2%로 증가한다.³⁸⁾

한편 1984년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대외무역의 발전을 재차 강조하였다. 대외무역 확대는 대외개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목할 부분이다.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은 외국 기업 유치에 위한 적극적인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시작을 의미한다.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북한 지도부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1984년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다시 2.7%로 하락했으며 전체적으로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추진된 제2차 7개년계획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북한은 세부 계획 목표로 제시한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곡물수확고 1,000만 톤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6개년계획 시기에 비해 공업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12.1%로 감소하였고,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 성

36) 조동호 외(2002), p.238.

37)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456~457.

38) 황의각 외(1995), p.17.

장률은 다시 한 자리 수인 8.8%로 하락했다.³⁹⁾

2) 개최 목적과 내용

계속된 경제 계획의 실패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좌절감과 회의감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대중들로부터의 노력동원과 극력절약을 강조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은 가증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 번 사상적으로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계기가 필요함을 의미했다. 제2차 전국선동원 대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4월 11일 다시금 소집되었다. 김일성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조국해방 40주년과 당 창건 40주년을 대축전으로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제2차 전국선동원대회는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근로단체 주요 책임일꾼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범선동원, 5호당 당선전원들의 참석 가운데 11일부터 13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는 한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의 모범 사례를 소개, 선전함으로써 대중들의 자각적 열의를 고취시키고 있다.⁴⁰⁾ 또한 대회에서 김정일은 선동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대담하게 전개하고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방송선동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널리 활용하여 선동의 위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 선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선동에 대한 과업이 구체화 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 투쟁 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 선열들이 발휘했던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사상적 단결과

39) 황의각 외(1995), p.106.

40) 노동신문, 1985년 4월 12일 3면 “위력한 선동사업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자”에 게재.

결속을 의미하는 한편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본보기로 김정일을 높이 받들고 충실성을 함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⁴¹⁾ 아울러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선동사업 및 해설·선전사업을 전개할 것을 대회에 참가한 선동원들의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 관점과 노동계급적 관점을 확립하고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에 대한 반감을 형성, 사회주의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대회의 목적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2차 전국선동원대회는 경제개발계획 성과의 실패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기 의욕 저하 및 사상적 이완을 단속하기 위한 대대적인 결속 작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대한 여전한 강조, 채취공업, 철도운수, 철강재 생산 정상화를 통산 생산성 증대, ‘80년대속도창조’ 투쟁,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과 같은 경제부문 선동에 대한 과업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7개년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1983년 동안 잠깐의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적 성과가 ‘80년대속도창조’라는 대중적 노력동원운동을 통해 얻은 결실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회에서는 어려운 시기 선동원과 선전원들이 근로자들과 대중 속에 들어가 선동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경험들에 대해 소개하며 토론한다. 대회에 참가한 선동원들은 모범적인 성과를 토대로 자신이 속한 직장 및 일터에서도 생산성 증대를 위한 부문별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 이는 각 선동원들이 자신이 속한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소위 ‘잘 어르고 달래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끔 해야 함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계획 실패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계속해서

41)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442.

대중운동 방식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2차 전국 선동원대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제3차 전국선동원대회

1) 개최 배경

불충분한 자본 상태에서 노력동원의 방식만을 앞세웠던 제2차 7개년 계획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2년간의 조정기(완충기)를 설정하였다.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은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 회의에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제3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을 확정·보고한다. 1984년에 제정한 합영법에 보조를 맞추어 제3차 7개년계획은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를 기본과업으로 채택한다. 계획기간 동안 합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988년 11월에는 정무원 산하에 합영공업부를 설치하기도 한다.⁴²⁾ 그러나 1980년대 북한 경제는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해 기본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재 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기술혁신을 표방한 과학기술 발전은 지체되고 있었으며 대외무역의 성과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다.⁴³⁾ 결국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계획 성과 발표 사상 처음으로 목표 미달을 시인하였다.⁴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동안 10대 전망목표를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률 역시 9.6~25.9%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⁴⁵⁾ 게다가 7개년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2.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⁴⁶⁾

42) 강만길 외(1994), pp.320~321.

43) 실제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전체 합영사업 유치 총 79건 중에서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사업이 67건을 차지하였으며 그나마 이루어진 투자규모는 대부분 1백만 달러 내외의 소규모에 불과하였다. 전홍택·박진, “북한경제의 역사적 평가”, 차동세·김광석(편),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p.723.

44) 조동호 외(2002), p.239.

45) 신용수, 『북한경제론』(서울: 답게출판사, 2000), p.145.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는 사회주의 사상 및 노선의 위기감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북한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IAEA 핵사찰 및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을 거듭하는 외교적 난항도 겪고 있었다.

한편, 제3차 7개년계획 실패 이후 북한은 3년간의 완충기(1994~96년)를 설정하였다. 1990년대부터 지속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완충기 동안의 주요 과업을 제시한다.⁴⁷⁾ 3대제일주의,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와 같은 과업은 점차 심화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수출 촉진 전략과 경제무역지대의 설정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3년간의 완충기 경제개발계획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근본적인 경제개발전략이 아닌 부분적 개방과 절약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실패를 거듭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었다.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계획과 시도는 계속된다. 1996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분조관리제, 1998년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론’ 등은 북한이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더 이상 ‘계획’에 의해 조정 또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였다.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는 외침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⁴⁸⁾ 이는 아직도 경제 문제는 북한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1999년부터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계획 경제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 계획 경제 운용의 두 축

46) 황의각 외(1995), p.106.

47) 제시된 과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공업-무역의 3대제일주의 둘째, 농업의 공업화현대화 셋째,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넷째, 수출 촉진 및 대외경제 협력 관계 확대 다섯째,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투자 적극 유치 등이다. 통일부, 『북한개요』, 1998, pp.307~308.

48) “지금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강성대국건설의 마지막요새인 경제강국의 목표만 달성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당당히 달수 있다.” 노동신문, 2009년 6월 9일 1면 사설, “<모든 것을 대고조의 승리를 위하여!>,이 구호를 높이 들고 총돌격하자”

인 배급제 및 국영사업이 마비된 채 비공식부문의 확산을 통해 진입한 플러스 성장이기 때문이다.⁴⁹⁾

[표 II-1] 북한 경제성장률(1990~2009년)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1.3	3.7	1.2	1.8	2.2	3.8	-1.1	-2.3	3.7	·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 잇따른 경제 계획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에 더해진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은 체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했다. 경제·정치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북한이었다.

2) 개최 목적과 내용

2000년 3월 24일부터 평양에서 2일간 진행된 제3차 전국선동원대회는 이전 두 차례의 대회의 목적과 성격에서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은 제3차 전국선동원대회 개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때와 같은 격동적인 시기에 살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은 들끓는 전투적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려면 선전선동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당 창건 55주년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단위에서 선전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림으로써 천리마대고조의 불길 속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전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⁵⁰⁾

49)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장사 행위가 계획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계획경제란 생산에서 소비까지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를 뜻한다. 그런데 장사란 국가의 계획 밖에서 벌어진다. 계획할 수도 없다. 결국 공식적인 계획 부문은 줄어들고 통제 불가능한 사적 부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9년 7월 22일자 사설, ‘성장하며 붕괴하는 북한경제’

제3차 전국선동원대회에서 선동원들에게 제시한 과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가 사상중시, 둘째가 총대중시, 셋째가 과학기술중시 노선 확립을 위한 선동의 화력 집중이 선동사업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대회는 선동원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역경 속에서도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신념을 간직하게 하고 혁명성, 계급의식을 높여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떨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¹⁾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강화와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기 위한 전면적인 사상사업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중 “당의 군사중시, 총대중시사상을 선전선동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은 1990년대의 새로운 슬로건인 ‘선군사상’이 선전선동사업에서도 구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기풍을 조성하는 것도 선동원들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에서 ‘선군’을 강조한 까닭은 김일성의 사망 및 자연재해로 인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대외적 위기가 집중됨으로써 강도가 증폭된 ‘총체적 위기’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북한 지도부는 거의 유일한 가용 자원이었던 ‘군사적 수단’을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정책분야의 국정 운영 도구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⁵²⁾ 새로운 정책 슬로건에 대한 확산과 사상적 단결도모를 위한 대규모의 장이 또 다시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2000년 전국선동원대회는 소집되었다.

4. 소결 : 위기 돌파책으로서의 선전선동원대회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북한은 세 차례의 선전선동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북한이 당시에 처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과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선전선동원을 활용하여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

50) 노동신문, 2000년 3월 24일 1면 사설, “선전선동의 위력을 떨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높이 자”

51) 노동신문, 2000년 3월 25일 1면 “축하문-제3차 전국선동원대회 참가자들에게”

52) 서훈, 『북한의 선군외교』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p.66-67.

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위기 때마다 개최된 선전선동원대회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내적으로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표 II-2]는 시기별로 북한이 처한 위기에 따라 대회가 개최된 현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II-2] 시기별 북한 위기 양상과 선전선동원대회 개최 현황

대회 개최 현황	위기 양상	
	대외적	대내적
제1차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 대회 (1971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대립으로 인한 원조 감소 • 베트남전쟁의 격화 • 반공정책을 표방하는 남한 정권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7개년계획(1961-70년) 실패 • 중공업우선정책으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 초래, 생필품부족 절감한 주민들의 불만 가중 • 노력동원에 의한 경제운용 방식의 한계 표면화
제2차 전국선동원대회 (1985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영법 채택에 따른 대외개방·개혁 물결 차단 필요성 대두 • 남북한 간 교류 및 접촉 확대에 따른 경쟁 구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6개년계획(1971-76년)/제2차7개년계획(1978-84년) 실패 • 외자유치 전략 실패로 인한 외화난 • 절약과 노력동원에 따른 주민들의 희생, 불만 가중 •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 문제 대두
제3차 전국선동원대회 (2000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노선 수정, 붕괴 •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 장악과 중소동맹 해체로 인한 안보 불균형 •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난항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사망, 경제난 등 총체적 위기 • 새로운 통치 전략 제시 : 선군 표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선전선동원대회의 소집을 통해 계속해서 실패한 경제 계획의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제 활성화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에서 노력동원을 강조해야 하는 필요성과 더욱 악화되는 경제난은 사상교양사업의 강화를 필요로 하였다. 즉, 위기의 돌파구로 북한은 선전선동원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Ⅲ. 2009년 전국선동원대회 내용 분석

2009년 2월 2000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개최된 전국선동원대회는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6일부터 2일간 진행된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는 대내적 결속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대회와 유사하다. 그러나 2009년 전국선동원대회는 기존 대회와 몇 가지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대회 보고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태천의 기상을 재현하여 경제강국으로 거듭날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동원들에게 제시한 과업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되고 있다. 전반적 경제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연길폭탄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고상한 집단주의정신, 사회적 미풍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국주의사상문화와 이색적 생활풍조가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일단 인민경제부터 회생시키고 보자는 북한 당국의 생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대회가 개막되기 전에 각지 선동원들이 혁명적으로 선전선동활동을 벌여 생산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모범 사례를 노동신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선동원 스스로가 먼저 일하며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해 생산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이룩한 사례, 처녀

의 몸으로 각종 기계를 다루며 막힘없이 일을 모범적으로 해내어 생산에서의 혁신을 이룬 경험,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농업과 경공업에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사례 등이 신문 보도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들이다.⁵³⁾ 이는 선동선동사업이 지닌 위력과 효과를 대회 개막 전부터 선전하는 것을 통해 소집될 대회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북한이 대회에 기대하는 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김정일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도 다음 [표Ⅲ-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체화 되고 많아진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전국선동원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음을 보여준다.

[표Ⅲ-1]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하는 김정일 말씀 내용⁵⁴⁾

제1차 (1971)	-
제2차 (1985)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3차 (2000)	대중을 발동하고 불러 일으키는데서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 우리는 모든 선동을 더욱 격조 높게 함으로써 대중을 노력적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제4차 (2009)	당사상사업이 어떻게 인민들 속에 깊이 발을 붙이고 어떤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은 당초급선전일군들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지로 활발히 움직이며 책임성도 높고 능력도 있는 강사와 선동원이 필요합니다. 선동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벽찬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선동사업을 격동적으로 벌려 사람들을 적극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상사업부문에서는 선동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53) 노동신문 2009년 2월 26일 3면 “선동원들은 강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자” ; 노동신문 2009년 2월 26일 4면 “새 기록창조는 곧 위력한 선동”

54) 해당 연도별 노동신문 대회 연설문 참고하여 재구성.

IV. 위기의 2009년

위기 시마다 소집되는 전국선동원대회가 개최된 2009년, 북한은 실제로 정치·경제·외교 부문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열강의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정책, 남측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새로운 대북 정책 추진 전략 속에서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얻기 위한 북한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북한에서는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몇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는 계획 경제의 틀을 고수하며 경제난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주민들을 결속시켜야 하는 과제가 북한 지도부에 남겨져 있다. 식량난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2012년 강성대국을 달성하자’는 선언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속도전’ 방식의 노력충동원운동인 70일전투, 100일전투, 200일전투에 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150일전투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을 반증한다.

지난 2008년 금강산 남측 관광객 피살 사건, 단거리 미사일 발사, 12·1조치에 이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제2차 핵실험 등 일련의 사건들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는 북한이 직면할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1. 정치적 차원

1) 대외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2009년 미국 오바마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핵실험 강행, 미사일 등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초부터 초강수를 두었다. 2008년 1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먼저 되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나흘 만에 “정상화가 되어도 미국이 핵 위협이 있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강했다. 과거의 사례처럼 북한이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6자회담이 개최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북한의 희망적 사고에서였다.⁵⁵⁾

북한의 협박 전략은 실 틈이 없었다. 2008년 3월에는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8월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불능화 이행을 중단할 것에 대해 선포하였다. 10월에는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하였다.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 개최 직전인 2009년 2월 24일에는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서 ‘광명성 2호’ 발사 준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⁵⁶⁾ 국제 사회를 향한 북한의 위협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강경입장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 속에 정치·경제적 위기를 경험, 외교적 필요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2009년 대외 정치적으로 처한 위기를 사안별로 정리한 것은 다음에 제시된 [표IV-1]과 같다.

55) 중앙일보 2009년 1월 19일자 사설 “벼랑 끝 전술에 매달리는 북한의 무모함”

56) NK데이터베이스>연표, <http://www.nkchosun.com>

[표 IV-1] 2009년 북한이 처한 위기 사안에 대한 태도 및 국제적 대응(대외정치)57

위기사안	북한의 태도		국제적 대응	
1. 핵문제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북한의 시료채취 거부로 검증합의서 채택 무산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	NPT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
	2009년 1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핵보유국간 핵군축 △핵포기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남 핵우산이 제거될 때 가능 △검증은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	2009년 1월 13일 미국무부 정레브리핑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6자회담 과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2009년 1월 15일 노동신문	“한반도 평화보장 선결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 요구	2009년 2월 13일 미국무장관 Asia Society 연설	“북한이 진정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 언급
	2009년 1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핵무기 對 북한의 핵무기 △미국의 핵위협이 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되더라도 핵보유국 지위 불변, 핵억제력 강화	2009년 5월 26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2009년 6월 12일	북핵 실험 규탄 및 대북 제재 조치 논의 착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 채택
2. 미사일 발사 문제	2009년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	인공위성발사라 주장 “무엇이 날아 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발전의 요구이다.”	2009년 2월 3일 美 국무부·국 방부 브리핑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미 동북아의 우려가 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임”
			미·일·중·러 등 주요국,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	

57) 통일부, 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2009년 2월 19일; 한미정상회담 결과 설명 자료, 2009년 6월 16일. 참조, 재구성.

위기사안	북한의 태도		국제적 대응	
			2009년 2월 11일 美 국방장관 기자회견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한 다면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 것”

2) 대내

작년 11월부터 붉어져 나오기 시작한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함께 2009년 북한은 후계 구축 정지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이후 북한 정치 체제를 이끌어 갈 후계 구도를 암시하는 조짐들이 체제 구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북한의 상황을 보여준다. 북한 관영매체를 통한 보도에서 ‘백두혈통 및 만경대 혁명 일가’ 관련 표현이 2009년에 접어들어 강조되고 그 빈도수가 증가한 점과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를 암시하는 ‘해와 별’ 표현이 등장한 점은 북한의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선전·선동전이 시작,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⁵⁸⁾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개정 헌법 규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을 신설하여 국방위원장이 각 분야의 최고 지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화 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주석직이 폐지되기 이전에 김일성이 주석으로서 행사했던 것과 같은 식의 권한이 국방위원장직에 부여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후계 체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2009년 4월 중순부터 시작된 150일전투는 김정일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정운의 정치적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에서 선전 업무를 맡고 있는 김기남과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이 김정일 현지도 시 수행 횡수에서 1, 2위를 차지한 것에서도 북한 후계 구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58) 중앙SUNDAY 스페셜 리포트 2009년 8월 9일자 “3대 권력의 길” 참조.

해석도 있다. 당 차원에서 선전선동사업을 강화하여 사상적으로 대중을 결속시키고 지도부가 의도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 해석의 주된 내용이다.⁵⁹⁾

이와 같이 북한은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후계 구축을 위한 정치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 지도부는 사상에서의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경제난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고민거리이자 위기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경제적 차원

1) 대외

2006년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경제 제재 조치는 강약을 반복하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2008년 6월 26일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계속 동결, 북한으로 이체·지불·수출·철회되지 못하도록 했다. 2008년 9월, 재임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⁶⁰⁾ 2008년 10월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적잖은 제재를 계속 적용받게 되었다.⁶¹⁾

2009년에도 미국의 대북 압박은 계속된다. 2009년 1월에 공개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의 한반도 관련 구상 내용은 “방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강온 양면의 입장이었다.⁶²⁾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

59) 위의 자료.

60) 연합뉴스 2008년 9월 32일, “부시 유엔, 北 이란에 제재 가해야

61) 연합뉴스 2008년 10월 12일, “테러지원국 해제 - 北, 어떤 제재 남아 있나”

62) 연합뉴스 2009년 1월 14일, “힐러리, 北에 새제재 경고-FTA재협상 시사”

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무역제재가 성공하려면 제재를 받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위협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제재대상을 더 광범위하게 정하고 제재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놀랜드는 이명박 정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정권이 바뀐 만큼 한국 정부의 행동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⁶³⁾ 결국 대북 경제 제재 수위가 낮으니 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경제 체제 속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금지되고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기만 하는 상황에서 외자 유치, 국제적 지원의 통로는 좁아지기만 했다. 경제성장률 자체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북한은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증언들은 계속되었다.⁶⁴⁾

[표 IV-2] 2009년 북한이 처한 위기 사안에 대한 북한의 태도 및 국제적 대응(대외경제)⁶⁵⁾

위기사안	북한의 태도		국제적 대응	
제재 이행	6월 20일 노동신문	“우리에 대하여 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벽적 고아대는 적대 세력들이 어리석고 가소롭다”	6월 16일 오바마 美 대통령 입장 표명	“우리는 북한이 이웃 국가들과 평화 공존하기를 원하겠지만, 만일 도발행위를 계속한다면 심각한 제재 이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6월 22일 노동신문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북한) 책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	7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원회 ‘5.5.2 제재’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명의 인물과 5개 기업과 기관, 2개 물자에 대한 제재 확정

63)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 『Asia Policy』, 2009, 1월호.

64) “얼마 전 북한에 있는 엄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대학생 조카는 못 먹어 얼굴에 눈 밖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언니는 우리 아이 몸무게도 안 되고 ... 내가 북한에 있었던 1998년 보다 식량난이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애를 낳은 산모가 배고픔을 못 이겨 농장에 가서 덜 익은 옥수수를 뜯어 먹는 것이 북한의 현실”, 연합뉴스 2008년 6월 16일, “北 식량난 1990년대보다 심각 ... 탈북자들 눈물”

2) 대내

북한은 올해를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의 해’로 규정, 국가적 노력을 총동원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사상, 군사 부문에서의 강국이 되었으므로 경제강국건설의 목표만 달성하면 강성대국의 웅대한 목표는 실현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 대한 강조는 북한 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경제의 비공식 부문이 활성화 되고 계획 경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붕괴 상태에 이른 2009년 북한 인민생활 경제는 회생을 위한 목표 수립보다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마지막 점령 단계인 경제강국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악화된 경제 상황을 타진하고자 진행된 150일전투는 북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력동원운동이 또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암시장 등 비공식 부문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 그나마 ‘굶어 죽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또 다시 진행되는 노력동원운동이나 시장에 대한 단속 강화는 불만을 가중시키는 요소일 뿐이다. 경제 영역의 침식은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다. 2009년 북한의 대내적 경제 상황은 체제 기반이 흔들릴 만큼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표 IV-3] 2009년 북한이 처한 위기 특징(대내경제)⁶⁶⁾

위기특징	내 용
1. 만성적 공급부족과 대외경제환경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경제정책의 보수화 심화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시장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계획경제 강화 경향
	산업분야에서는 금속공업 및 전력부문의 증산을 통한 경제제건을 강조하는 한편, 식량문제의 자체해결 독려

65) 연합뉴스 일자별 기사 자료 참고, 재구성.

66) 통일부, 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2009년 2월 19일.

위기특징	내 용
	2009년 식량 수급 전망 : 수요량 548만톤 - 전년도 생산량 431만톤 = 부족량 117만톤
2. 사회통제 강화 및 과거 회귀적 국정운영 강조	2008년 하반기부터 사회주의 고수,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선전선동 증가 신년공동사설에서 사상 통제, 천리마 운동의 노력동원과 자력갱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강조 등 보수적 정책방향 제시

3. 대남 자원

2008년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목표를 ‘실용·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였다.⁶⁷⁾ 원칙과 합리적 이행에 기초한 정책이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화적인 정책노선과는 차별화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변화된 대북 정책은 남북관계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 북한은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대화와 협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었다. 2008년 4월부터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금강산에서 북한군 초병에 의해 남측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뒤이어 10월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에 참가한 북측대표단이 대북전단 살포가 개성공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경고한다. 육로를 통한 북한 방문이 제한되고, 개성관광 및 경의선 운행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2008년은 그야말로 남북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은 해였다.

2009년에도 남북한 관계의 악화 상태는 그대로 이어진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출입 제한 때에 이어 올해 1월 군부인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남북한 사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67) 통일부 대변인, “2008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참고. <http://www.unikoria.go.kr>

모든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고,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 위협을 가했다.⁶⁸⁾ 우리 정부가 대결적 정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만 남북합의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선언의 요지이다. 최근에 석방된 개성공단 직원은 체제 비난 혐의로 3월에 체포되는 사태도 2009년에 발생한 일이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안 또는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던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도 위기의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표 IV-4] 2009년 남북관계에서의 위기 양상(남북관계)⁶⁹⁾

위기사안	일자	내용
1.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억류	3.30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의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에 정면 위배
2.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	3.5	조평통 대변인 성명, “우리의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
	3.9	인민군 총사령부 보도,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겠다”고 위협
	4.16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 “서울이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라”고 엄중 경고
	5.27	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성명,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지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
3. 이산가족 상봉 중단	2007. 10.~	이산가족 상봉 중단
	2009.5.	北 적십자 중앙위 대변인 담화, 이산가족 초청 위원회 행사를 “대북 적대감 고취, 대결책동 합리화”라고 비난
4. 개성공단 사업 위협	3.9/13/20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
	5.15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 일방적으로 선언

68) 통일부 남북관계현황 참고자료, “2008 남북관계 어떻게 추진되었나”, (2008.12.18)

V. 결론 : 우리의 대응 전략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북한이 소집하였던 선전동원대회의 개최 목적과 배경을 고찰한 결과 북한은 일련의 위기 상황 시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의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선전선동원대회는 일상적이고 주기적으로 소집되는 대회가 아닌 긴급한 상황적 요구에 의해 개최되는 대회였다. 따라서 북한의 선전선동원대회가 ‘언제 개최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북한은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를 열었다. 북한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지표이다. 글로벌 위기에서 막 벗어나려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의한 위기 확산은 우리 남측 정부의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9년 현재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에 이어 5월에는 2차 핵 실험을 감행하여 더욱더 강도 높은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대외적 경제봉쇄로 인한 북한 경제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여 북한은 미국 여기자 2명과 남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은 몇 달간이나 북한에 억류시키며 이른바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제재의 강도를 낮추지 않았다. 남측 정부 역시 “원칙과 합의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변함없는 방식으로 북한을 응대하였다. 북한으로서는 국제 사회를 향해 더 위협적인 카드를 내 놓거나 한 발짝 물러서야 했다.

북한은 후자를 택했다. 미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억류된 여기자 2명은 석방되었다. 북·미 관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한이 집요하게 펼치고 있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실현되는 듯했다. 그

69) 통일부, 최근남북관계의 이해 관련 참고 자료,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2009.6.2)

러나 북한은 남측 정부에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몇 차례나 방북 기간 연장 신청을 한 끝에 김정일과의 면담에 성공, 억류된 개성공단 근로자 1명을 석방조치토록 하였다. 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북한은 고위급 인물로 구성된 특사조의방문단을 남측에 보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태도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모색하겠다는 의지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바라는 내심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의 위협과 협박 전략이 더 이상 국제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결과일 수 있다. 게다가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는 불량 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으로서 남북관계의 악화는 ‘득(得)’이 아닌 ‘실(失)’이었다. 금번 조문단 파견의 성과는 일관된 대북정책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불허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원칙에는 철저, 접근에는 유연”의 방식에 대한 고수가 필요하다.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라는 소신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에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때 쓰기’와 ‘위협’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 원칙에 기반 한 정책 운용은 북한의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만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있어서도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최근 조성되고 있는 화해·해빙 무드에서는 적극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거부한 것은 남측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화에 응하면 타협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한 간의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은 대결 국면에 대비한 전투력의 증강이나 상대에 대한 완전한 차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경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타당성 높은 예측에 기반 한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적 사례에 기초하여 북한 내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찾

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북한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향후 조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북한원전자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정일 (1995). 『김정일선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 (1972).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노동신문. 1985년 4월
노동신문. 2000년 3월
노동신문. 2009년 2월

[연구 논문]

- 가. 국내논문
강석윤 (2006).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60돌 보고대회’ 동향.” 『북한』. 북한연구소.
——— (2006). “지금 북한에서는… ‘전국계획일꾼열성자대회’ 개최 동향.” 『북한』. 북한연구소.
——— (2006). “지금 북한에서는… ‘전국농업대회’ 개최 동향.” 『북한』. 북한연구소.
——— (2006). “지금 북한에서는… ‘핵실험 성공 환영군민대회’ 개최 동향.” 『북한』. 북한연구소.
권 완 (1989). “역대전당대회 그 노선과 전망.” 『북한』. 북한연구소.
김창순 (2003). “북한의 ‘전국어머니대회’ 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커스 놀랜드 (2009).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 『Asia Policy』. 1월호.
박가연 (2003). “북한의 인테리 정책 연구: 인테리의 체제유지 기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석 (2006). “북한은 군(軍) 중시사상을 내부적으로 확산시키고 경제난 악화 해소에 주력.” 『북한』. 북한연구소.
이준석 (2003). “북한의 인텔리정책: 과학기술중시정책과 사상교화의 이중성.” 『북한 연구』. Vol.6.
정대규 (1995). “최근 북한 주요 동향.” 『한국통일연구』. Vol.2.
정상용 (2001). “남북관계 소강상태 지속, 분단 후 최초로 남북농민대회 개최.” 『북한』. 북한연구소.
정우곤 (2006). “조선로동당의 위상·기능·조직.” 『북한의 정치2』. 서울: 경인문화사.
조승섭 (2004). “대중선전선동에 관한 연구-소련공산체제와 나치체제 비교.”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희 (2007).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차문석 (2004). “북한의 노동 영웅에 관한 연구: 영웅 탄생의 정치 경제적 메커니즘.” 『사회과학연구』. 제12권 1호.
충남대학교 보운편집실 (1989). “조선로동당대회 연구 II.” 『북한사회연구』.

나. 외국논문

T. H. Qualter (1972). "The Techniques of Propaganda" in A. Wells(ed), Mass Media and Society, California : National Press Books.

[단행본]

가. 국내단행본

강만길 (1994). 『한국사21』. 서울: 한길사.

구평희·문병집 (1996). 『북한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포럼.

서 훈 (2008). 『북한의 선군외교』. 서울: 명인문화사.

서대숙 편 (200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제5권 경제발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신용수 (2000). 『북한경제론』. 서울: 답게출판사.

유영옥 (1997). 『상징과 기호의 정치행정론』. 서울: 학문사.

조동호 외 (2002).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차동세·김광석 공저 (1995). 『한국경제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통일부 (1998). 『북한개요』.

황의각 외 (1995).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나. 외국단행본

C. E. Merriam (1934). Political Power N.Y.: Colier Books.

H. D. Lasswell, & A. Kaplan (1950). Power and Society New Haven: Yale Univ. Press.

M. Edelman (1985).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Walter Lippmann (1954). Public Opinion, N.Y.: Macmillan.

[기타]

통일부 남북관계현황 참고자료. "2008 남북관계 어떻게 추진되었나." (2008.12.18)

통일부 대변인. "2008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http://www.unikoria.go.kr>.

통일부 외교통상위원회보고자료. (2009.2.19)

통일부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관련 참고 자료.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2009.6.2)

통일부 한미정상회담 결과 설명 자료. (2009.6.16)

NK데이터베이스>연표. <http://www.nkchosun.com>.

연합뉴스 2008년 10월 12일. "테러지원국 해제-北, 어떤 제재 남아 있나"

연합뉴스 2008년 9월 32일. "부시, 유엔, 北.이란에 제재 가해야"

연합뉴스 2009년 1월 14일. "힐러리, 北에 새제재 경고-FTA재협상 시사"

중앙일보 사설 2009년 1월 19일. "벼랑 끝 전술에 매달리는 북한의 무모함"

중앙일보 사설. 2009년 7월 22일. "성장하며 붕괴하는 북한경제"

중앙SUNDAY 스페셜 리포트, 2009년 8월 9일 “3代 권력의 길”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 결과.” <http://www.kosis.kr>.

<장려>

사회자본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미경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장안지

《목 차》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모형 및 가설
- IV. 조사설계
- V. 실증분석
-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요약문]

사회자본이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외식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통일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자본 요인과 통일외식 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사회자본 요인과 평화외식과 공동체 의식 등을 포함하는 통일외식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이 통일외식(평화외식,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민 800명(유효표본 4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7개의 가설 중 1개의 가설은 기각되고 나머지 6개 가설은 채택되었다. 첫째, 신뢰의 경우 평화외식과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또한 평화외식과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경우 평화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체 의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화외식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 등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소와 상대적 영향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민의 통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자본 특성을 규명하고, 각각의 통일의식에 적합한 사회자본이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식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뢰는 평화의식과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민들 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통일의식 향상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들 간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식적·비공식적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 역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뢰를 통해 국민들 간의 네트워크도 한층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규범이 형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범은 통일의식인 평화의식,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 간의 통일에 대한 행동양식이 국민들 간의 공유된 인식으로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공유된 통일인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학습기회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주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통일의식 중 공동체의

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연결망을 통해 분단에 따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상호 의사소통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민 간의 지속적인 연결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이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평화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화의식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두터운 연계를 구축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북한주민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목적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자 반드시 이룩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희생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인해 상호 격리된 채 대립과 갈등,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남북통일을 통해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주민들이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 복지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함으로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통일은 주변 국가와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에서 민족이 힘을 모은다면 평화로운 일류 국가를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¹⁾

분단이후 남북한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서 대립해 왔으며, 그 결과 민족정체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훼손된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국가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민족통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보의식, 평화통일의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북한의 이해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사회와 통일 환경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개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의식은 북한의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고, 전쟁가능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는 것이다. 평화통일의식

1) 통일부 통일교육원, 『자주 묻는 통일이야기』, (2008)

은 남북 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행요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식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통일의식과 관련된 주요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통일에 대한 취약한 의식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서 평화의식과 공동체의식 등의 통일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의식 수준 향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통일의식 향상은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자본의 구축이 필요하다. 통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사회자본이 통일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의식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사회자본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의식 향상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 결과』, (1995),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보고서 : 전환기의 남북경제관계』, (1998), 중앙일보, 『통일의식 조사』, (2008)

첫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국민들의 사회자본과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기간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본 연구의 초점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내용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써 사회자본의 내용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통일의식과 관련된 각종 문헌과 논문, 정부간행물, 정책연구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사회자본과 통일의식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자본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자본과 통일의식에 관한 내용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기초통계와 집단간 차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자본과 통일의식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통일의식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자본

1) 사회자본 개념

사회자본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의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Tocqueville은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한 개인적 책무와 소속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인지적 관계, 지속적인 연결망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 또는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Putnam(1993)은 사회자본이 상호 간에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신뢰·규범·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자본은 유형 자원과 같이 사용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원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소하는 자원으로 개인재산이라기 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Fukuyama(1999)는 사회자본을 신뢰로 구체화하고, 특정사회의 특정 부문에서 신뢰의 확산을 통해 생기는 능력을 사회자본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가장 규모가 작으면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인 가족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가장 규모가 큰 국가와 여러 집단들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회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결망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협동을 촉진하는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조직 구성원인 각 개인들의 행동을 야기하는 기제(mechanism)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신뢰관계와 상호규범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Putnam(1993)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있으며, Fukuyama(1993)은 신뢰만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자본 연구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Putnam(1993)의 견해를 수용하여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분하고자 한다.

신뢰는 지식 및 정보의 교환과 공유, 의사소통의 원활화, 각종 활동에 참여를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간의 관계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 되지 않으면 지식의 전환과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신뢰가 없는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의 관계에 있어 정보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 및 역 선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³⁾

규범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의미하며 조직의 질서와 규칙, 시민의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규범은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바탕이 되는 것이며, 조직 구성원과 각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조직의 자산으로 결합되고 축적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규범이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박희봉, 2002; 배병룡, 2005; 김태룡, 2006; 이숙중 외, 2008). 이러한 규범의 존재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기준이 되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조직 구성원간의 유기적 활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조직의 안

3) 김옥진,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와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7)

정성에 도움을 주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게 해준다.⁴⁾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연계형태를 의미하며,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관계구조이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특정 목적의식이 보다 강하게 개입될 수 있고, 보다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 관계가 일정 유형을 띄게 될 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통일의식

통일의식이란 개념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개념이다(장경모, 1985). 이에 따라 통일의식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개념논의를 통해 통일의식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이란 민족, 영토, 국가를 통합하여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통합, 즉 이질화 된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의 통합을 포함한다.⁵⁾ 다시 말해 분단전의 국토, 생활권영역으로 통일은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왔던 제도를 하나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이질화된 문화를 다시 하나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의식은 남북한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 이라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든 부분에서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의식은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4) 김상욱, 『조직문화가 조직 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2007)

5) 김호진, 『한국 정치 체제론』 (1996)

6) 최영철, 『전남지역 고등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2001)

평화의식은 통일을 위한 평화공존에 관한 의식을 의미하며, 이는 점진적으로 달성된다.⁷⁾ 분단 이후 지속적인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과 대립은 상호불신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민족 간 화해와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도 분단경험 세대와 전후세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고,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통일의식과 방법에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형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와 협력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남북한 간의 불신과 이질화가 해소 될 것이다.⁸⁾

공동체 의식은 공동 생활권을 형성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의미한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인 신념체계와 가치관으로서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현실적 목적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뜻한다.⁹⁾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창조는 단지 남북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정체성(different identities)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포용하고 변형시킴으로써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은 민족주의 이념을 토대로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발전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자본과 통일외식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며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

7)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2001)

8)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08)

9) 한홍수,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1985)

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통일외식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신뢰는 상호관계에서의 위험감수를 통해 협력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Mayer et al., 1995). 신뢰구축은 국민들 간의 협력적 창조적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평화외식과 공동체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범은 언어와 행동양식, 국민들 간에 공유된 인식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범은 통일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환에 참여하는 국민들 간에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한다. 국민들 간의 공유된 규범은 평화외식과 공동체외식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결합·축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는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Coleman, 1998)으로 평화외식·공동체외식 등 통일외식 향상을 위한 기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통일외식 형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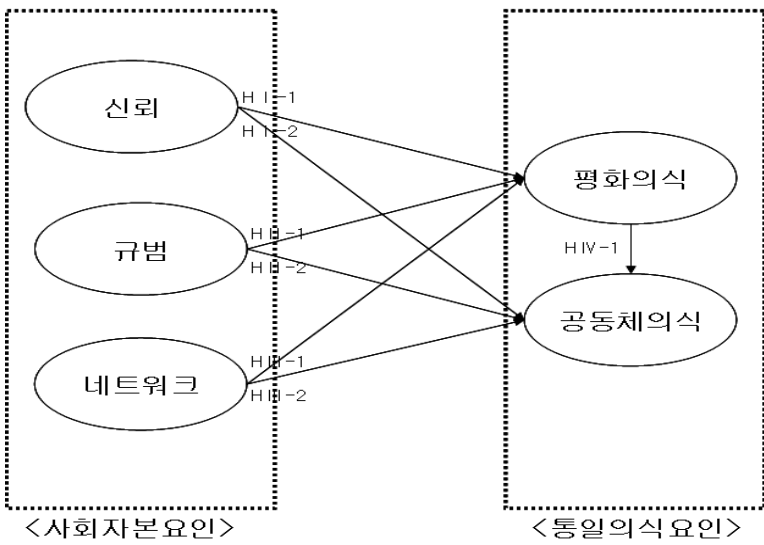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요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통일외식 요인인 평화외식, 공동체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사회자본과 통일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요인과 통일외식 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그림 1]

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크게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사회자본 요인과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 등을 포함하는 통일의식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설정

1) 신뢰와 통일의식

신뢰는 상호관계에서의 위험감수를 통해 협력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Mayer et al., 1995). 즉 국민들 간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창조적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평화의식·공동체의식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신뢰는 통일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1: 신뢰는 평화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2: 신뢰는 공동체 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규범과 통일의식

규범은 언어와 행동양식, 국민들 간에 공유된 인식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범은 통일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환에 참여하는 국민들 간에 동일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한다. 인식의 공유는 평화의식·공동체의식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결합·축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범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 규범은 통일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1: 규범은 평화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2: 규범은 공동체 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네트워크와 통일의식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Coleman, 1998)으로 평화의식·공동체의식 등 통일의식 향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망이 조성되면 국민 간에는 보다 쉽게 통일의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가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I: 네트워크는 통일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1: 네트워크는 평화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2: 네트워크는 공동체의식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한 간의 불신과 이질화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되고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요컨대 평화의식은 공동체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화의식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V: 평화의식은 공동체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조사설계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통일의식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각 지역별로 할당표본 추출을 실시하여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총 506부로 나타났으나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한 491부(유효회수율: 61.4%)만이 실제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빈도분석과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한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변수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내적 일관성분석,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자본과 통일의식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과 통일의식(평화의식,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평화의식, 공동체 의식에 관한 측정문항(18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6개) 등 총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자본과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①:매우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별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수

구분	변수	측정항목	선행연구
독립 변수	신뢰	신뢰1: 가족에 대한 신뢰정도	이숙종 외(2008) 박희봉 외(2003) 박희봉 · 김명환 (2002)
		신뢰2: 친구들에 대한 신뢰정도	
		신뢰3: 이웃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	
		신뢰4: 국민들에 대한 신뢰정도	
		신뢰5: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	
	규범	규범1: 우리나라 규범과 규칙의 확립여부	박희봉(2002) 박희봉 외(2003) 배병룡(2005)
		규범2: 국민 성숙 의식에 대한 정도	
		규범3: 규범 준수 여부	
		규범4: 규범 청렴도 정도	
	네트 워크	네트워크1: 자원봉사단체 참여정도	박희봉(2005) 김태룡(2006) 송정현(2004) 박희봉 외(2003)
		네트워크2: 사회활동 참여 정도	
		네트워크3: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정도	
네트워크4: 출신학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정도			

구분	변수	측정항목	선행연구
종속 변수	평화 의식	평화의식1: 평화적 통일방법에 대한 정도	추정호(2004) 장영현(2005)
		평화의식2: 통일 후 지역갈등의 정도	
		평화의식3: 통일 후 남북갈등의 정도	
		평화의식4: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 필요성 여부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1: 북한 사람과의 친밀도 여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2007/2009) 장영현(2005) 서용석(2005) 정용택 · 김태완 (2005)
		공동체의식2: 북한 사람에 대한 포용 여부	
		공동체의식3: 북한 식량부족 소식에 반응하는 정도	
		공동체의식4: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여부	
		공동체의식5: 같은 민족에 대한 여부	
		공동체의식6: 통일의 중요도 여부	
공동체의식7: 통일 시기의 여부			

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43.2%, 여성 56.8%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36.0%로 가장 많은 것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2.2%, 10대 20.0%, 40대 11.2%이며 50대 이상 10.6%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의 주거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중 경기도

40.3%로 가장 높으며, 서울특별시 30.5%, 인천광역시 28.9%로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 4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회사원 22.2%, 주부 8.6%, 자영업 7.9%, 전문직 6.7%, 공무원 3.1%, 교직 2.2%, 금융업 1.2% 법조인 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 응답자의 학력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중 고졸 이하는 전체의 37.5%로 나타났으며, 대졸 학력자는 전체의 27.9%, 중졸이하 18.5%, 전문대졸 9.0%, 대학원 졸업 이상 6.3%, 초졸 이하 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소득 분포의 경우,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2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9.3%,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9.1%, 100만 원 이하 18.1%, 400만 원 이상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자	212	43.2	직업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주부 학생 공무원 법조인 금융업 교직	109 39 33 42 233 15 3 6 11	22.2 7.9 6.7 8.6 47.5 3.1 0.6 1.2 2.2
	여 자	279	56.8				
	계	491	100.0				
연령	10대	98	20.0				
	20대	177	36.0				
	30대	109	22.2				
	40대	55	11.2				
	50대 이상	52	10.6				
	계	491	100.0				
주거지	서울특별시	151	30.8				
	인천광역시	142	28.9				
	경기도	198	40.3				
	계	491	100.0				
소득	100만 원 이하	89	18.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0.8
					중학교 졸업	91	18.5
					고등학교 졸업	184	37.5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95	19.3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44 137 31	9.0 27.9 6.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94	19.1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40	28.5				
	400만 원 이상	73	14.9				
	계	491	100.0		계	491	100.0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신뢰도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과 통일의식(평화의식, 공동체 의식) 등 5개의 변수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내적 일관성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5개 요인변수들의 신뢰도는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¹⁰⁾

[표 3] 신뢰성 분석

변	수	측정항목	최종항목	Cronbach's
신	뢰	5	4	.736
규	범	4	2	.699
네	트	4	2	.786
평	화	4	3	.740
공	동	7	7	.873

10) Cronbach's 계수의 기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내적일관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Carmines & Zeller, 1979).

2) 타당도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요인(신뢰, 규범, 네트워크)과 종속변수인 통일의식 요인(평화의회식,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적용하였고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과 총분산의 60%이상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종속변수인 평화의회식, 공동체 의식, 독립변수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측정문항들은 모두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각각의 변수를 잘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 [표 5]과 같다.

[표 4]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구 분	요인1	요인2
	공동체의식	평화의회식
공동체의식1	.789	.100
공동체의식2	.836	.000
공동체의식3	.733	.074
공동체의식4	.814	-.082
공동체의식5	.735	.170
공동체의식6	.721	.166
공동체의식7	.601	.270
평화의회식1	.256	.810
평화의회식2	-.140	.827
평화의회식3	.183	.761

구 분	요인1	요인2
	공동체의식	평화의식
고유치	4.285	1.846
분산설명율(%)	42.850	18.456

[표 5]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구 분	요인1	요인2	요인3
	신뢰	규범	네트워크
신뢰1	.569	-.015	-.051
신뢰2	.857	.097	.004
신뢰3	.822	.128	.158
신뢰4	.681	.147	.129
규범1	.009	.092	.872
규범2	.118	.005	.867
네트워크1	.099	.897	.045
네트워크2	.127	.897	.055
고유치	2.647	1.444	1.374
분산설명율(%)	33.083	18.054	17.172

3. 상관관계 분석

사회자본과 통일의식 5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요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볼 때 통일의식 중 평화의식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공동체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 중에서는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각각의 통일의식(평화의식, 공동체 의식)과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

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모든 사회자본 요인이 평화의식 보다는 공동체 의식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6] 사회자본과 통일의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신뢰	규범	네트워크	평화의식	공동체 의식
신뢰	3.3579	.667	1.000				
규범	3.3299	.783	.163**	1.000			
네트워크	3.1303	.895	.250**	.123**	1.000		
평화의식	3.7895	.786	.123**	.102*	.094*	1.000	
공동체 의식	3.1833	.760	.208**	.197**	.222**	.251**	1.000

*p<.05; **p<0.01

4. 사회자본과 통일의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1) 통일의식에 대한 성별 간 차이

통일의식에 대한 성별 간 차이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평화의식(F=6.630, p<.05), 공동체의식(F=3.181, p<.1) 등 모든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평균들은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의식에 대한 성별 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여자(3.79), 남자(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에 대한 성별 간 평균값 또한 여자(3.20), 남자(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통일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표 7] 통일의식에 대한 성별 간 차이검증 결과

항목	남		여		T-값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화의식	3.78	0.84285	3.79	0.74085	6.630**	.010
공동체 의식	3.14	0.81192	3.20	0.71836	3.181*	.075

*p<.1; **p<.05; ***p<.01

2) 통일의식에 대한 연령별 차이

통일의식에 대한 연령별 간 차이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공동체 의식의 경우 F값은 0.310이고, p<.1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의식(F=3.786, p<.1)은 연령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의식에 대한 연령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20대(3.9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3.81), 30대(3.76), 40대(3.64), 50대 이상(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평화의식의 경우 연령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통일의식에 대한 연령별 차이검증 결과

항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F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화의식	3.81	0.818	3.92	0.747	3.76	0.837	3.64	0.621	3.48	0.809	3.786*	.005
공동체 의식	3.21	0.847	3.15	0.822	3.20	0.639	3.23	0.614	3.11	0.753	.310	.871

*p<.1; **p<.05; ***p<.01

3) 통일의식에 대한 지역별 차이

통일의식에 대한 지역별 간 차이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공동체의식의 경우 F값은 1.073이고, $p < .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의식은 F값은 2.813이고, $p <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의식의 지역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3.8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3.84), 경기도(3.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평화의식의 경우 지역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통일의식에 대한 지역별 차이검증 결과

항목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F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화의식	3.87	0.752	3.68	0.728	3.84	0.881	2.513*	0.61
공동체의식	3.21	0.846	3.21	0.719	3.10	0.715	1.073	.343

* $p < .1$; ** $p < .05$; *** $p < .01$

4) 통일의식에 대한 학력수준별 차이

통일의식에 대한 학력수준별 간 차이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평화의식의 경우 F값은 0.538이고, $p < .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의식은 F값은 3.269이고, $p <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학력수준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3.7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이상(3.46), 대학교 졸업(3.26), 중학교 졸업(3.19), 고등학교 졸업(3.12), 전문대학 졸업(2.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동체의식의 경우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통일의식에 대한 학력수준별 차이검증 결과

항목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이상		F	Sig.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화 의식	3.91	0.917	3.83	0.817	3.82	0.761	3.76	0.713	3.76	0.791	3.60	0.912	.538	.747
공동 체 의식	3.75	1.151	3.19	0.829	3.12	0.766	2.88	0.737	3.26	0.655	3.46	0.785	3.269 *	.006

*p<.1; **p<.05; ***p<.01

5. 가설검증 : 사회자본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자본과 통일의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평화의식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9%로 나타나고 있으며(Adj R2=.019), 독립변수들 중 신뢰($t=2.028$, $p<.05$)와 규범($t=1.741$, $p<.1$)은 평화의식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화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신뢰(=.095), 규범(=.0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규범보다 평화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네트워크는 평화의식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회자본과 평화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Sig.
	B	표준오차			
상수	2.983***	.229	-	13.006	.000
신뢰	.111**	.055	.095	2.028	.043
규범	.080*	.046	.079	1.741	.082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Sig.
	B	표준오차			
네트워크	.054	.041	.061	1.314	.189
F=4.237*** R2=.025 Adj R2=.019					
*p<.1; **p<.05; ***p<.01					

[표 12]는 사회자본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9.1%로 나타나고 있으며(Adj R2=.091), 독립변수들 중에서 신뢰($t=3.152$, $p<.05$), 규범($t=3.497$, $p<.05$), 네트워크($t=4.767$, $p<.01$) 모두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네트워크(=.168), 규범(=.153), 신뢰(=.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수준이 규범과 신뢰보다 공동체 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2]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Sig
	B	표준오차			
상수	1.669***	.214	-	7.956	.000
신뢰	.161**	.051	.142	3.152	.002
규범	.149**	.043	.153	3.497	.001
네트워크	.143***	.038	.168	4.767	.000
F=17.455*** R2=.097 Adj R2=.091					
*p<.1; **p<.05 ***p<.01					

[표 13]은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평화의식이 공동체의식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6.1%로 나타났고 있으며(Adj R2=.061), 독립변수인 평화의식($t=5.736$, $p<.01$)이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구성원들의 평화의식 수준이 공동체 의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Sig.
	B	표준오차			
상수	2.263***	.164	-	13.810	.000
평화의식	.243	.042	.251	5.736	.000
F=32.904 *** R2=.063 Adj R2=.061					
*p<.1; **p<.05 ***p<.01					

사회자본과 통일의식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먼저, 신뢰와 통일의식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가설 I-1>, <가설 I-2>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규범과 통일의식 간의 영향관계에서도 <가설 II-1>, <가설 II-2>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구성원들의 규범 공유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의식인 평화의식, 공동체 의식이 증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와 통일의식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가설 III-2>만 채택되었으며, <가설 III-1>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 간의 영향관계를 의미하는 <가설 IV>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평화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가설검증 결과

대가설	내용	소가설	내용	방향	결과
가설 I	신뢰 → 통일의식	가설 I-1	신뢰 → 평화의식	+	채택
		가설 I-2	신뢰 → 공동체의식	+	채택
가설 II	규범 → 통일의식	가설 II-1	규범 → 평화의식	+	채택
		가설 II-2	규범 → 공동체의식	+	채택
가설 III	네트워크 → 통일의식	가설 III-1	네트워크 → 평화의식	+	기각
		가설 III-2	네트워크 → 공동체의식	+	채택
가설 IV	통일의식 → 공동체의식	가설 IV	평화의식 → 공동체의식	+	채택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자본과 통일의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통일의식에 대한 성별의 경우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평균들은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화의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의식에 대한 연령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화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의식의 지

역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의 경우 평화의식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체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학력수준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이상, 대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사회자본 요인과 통일외식(평화의식, 공동체의식)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7개의 가설 중 1개의 가설은 기각되고 나머지 6개 가설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신뢰의 경우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또한 평화의식과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경우 평화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체 의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화의식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 등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소와 상대적 영향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민의 통일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자본 특성을 규명하고, 각각의 통일외식에 적합한 사회자본이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일외식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외식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뢰는 평화의식과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민들 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통일외식 향상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들 간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식적·비공식적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 역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뢰를 통해 국민들 간의 네트워크도 한층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외식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규범이 형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규범은 통일외식인 평화외식, 공동체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 간의 통일에 대한 행동양식이 국민들 간의 공유된 인식으로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공유된 통일인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학습기회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주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통일외식 중 공동체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연결망을 통해 분단에 따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상호 의사소통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민 간의 지속적인 연결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이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평화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화외식은 공동체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두터운 연계를 구축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북한주민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상. (2007). 통일 한국의 안보전략에 관한 연구
- 김상옥. (2007). 조직문화가 조직 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 김옥진. (2007).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와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김태선. (2007). 학교공동체를 위한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 및 적용
- 김호진. (1996). 한국 정치 체제론
- 민주평화화자문회의. (2008) 국민평화통일 여론조사 보고서
- 민족통일연구원. (1995).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 결론
- 박희봉·김명환. (2000). 인터넷 활용과 사회자본: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 _____.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구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박희봉·강제상·김상묵. (2003). 조직내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의 형성 및 조직성과 관리에 대한 효과, 『한국행정연구』
- 박희봉. (2002).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한국 행정학회 세미나 발표 논문집』
- _____. (2005).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 배병룡. (2005). 공공조직 사회자본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서용석. (2005). 21세기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정현. (2004). 사회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이용필. (1994).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민족 공동체의 개념과 기능
- 장영현. (2005). 접경지역 고등학생들의 통일의식 조사연구
- 중앙일보. (2008). 통일의식 조사
- 추정호. (2004). 초등학생 통일의식 조사연구
- 최영철. (2001). 전남지역 고등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통일교육지침서
- _____. (2008). 자주 묻는 통일이야기
- _____. (2008).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 한국개발연구원. (1998). KDI 연구보고서 『전환기의 남북경제관계』
- 한만길. (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한홍수. (1985).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95-120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 Free Press).
- Mayer, R. C. J. H. Davis, and F. D. Schoorman.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 709-734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장려>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투표참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양효원

《목 차》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의 설계
- IV.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
- V.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투표참여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새터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의식의 형성과 향후 통일한국에서의 정치참여 행태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는 유권자의 선거 행태 연구를 설명하는 중요한 연구로서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새터민은 인격형성과 정치의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참여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새터민들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 형성된 선거의식과 정치정향, 그리고 이를 통한 투표참여행태를 살펴본다. 기존의 투표행태에 대한 조사들이 인지적 차원에만 국한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비하여 인지적 차원은 물론, 감정적, 평가적 차원까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제적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새터민들의 정치정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당시 선거를 경험했던 새터민 가운데,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측정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 인지적 정향,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이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성, 연령, 소득, 직업, 북한과 남한에서의 교육수준, 그리고 새터민 특성을 고려하여 남한거주년수를 조사했다. 인지적 정향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선거에 대한 정보로 측정했다. 정서적 정향은 정당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으로 측정했다. 평가적 정향은 선거 당선자에 대한 평가로 측정했다.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

변수로는 지난 선거 투표여부와 앞으로 투표의향을 물었다.

연구결과 새터민들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남한주민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의 정치문화적 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또한 선거 후보자들을 선택시 정책과 공약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을 고려할 때에는 경제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며, 다음으로 대북정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들의 탈북 이유, 그리고 남한에서의 겪게 되는 어려움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 클 것이다. 새터민들은 현재 선거 당선자인 대통령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약간 더 많았다. 좋아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이 제일 많았으며, 싫어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많았다.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투표여부는 연령 변수만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투표참여의향은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투표참여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정치정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투표참여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향은 선거관심, 투표의 정치적 중요성, 선거정보인지, 대통령 평가정향이었으며, 이 외에도 각각의 정치정향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변수들이 각각 투표참여행태에 대하여 독립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선형식을 통한 예측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을 때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는 선거관심이었으며, 다음으로 남한거주년수, 싫어하는 정당유무, 선거정보인지, 대통령평가정향이였다. 그리고 약한 유의미성을 보이는 변수는 남한교육경험, 연령, 투표효능감, 정치에 대한 이해로 나왔다.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에는 인지적 정향,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 모두 영향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력있는 것은 인지적 정향이였다. 새터민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행태는 남한거주년수가 얼마 안 될수록, 싫어하는 정당이 없을수록,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새터민들이 북한에서의 신민형적 정치문화경험으로 인해 동원투표와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약하게나마 남한에서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를 통해 새터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며, 지속적인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예컨대 선거기간 중 선거참여캠페인이나 TV, 인터넷 등에서의 지속적인 홍보,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새터민들이 단순히 동원투표적 행태에서 벗어나 높은 정치정향과 정치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여 남한주민들과 함께 배움의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올바른 정치의식의 형성과 선거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¹⁾들의 선거의식과 그들의 투표참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새터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의 형성과 향후 통일한국에서의 정치참여 행태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는 유권자의 선거 행태 연구를 설명하는 중요한 연구로서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새터민은 인격형성과 정치의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민주적인 투표참여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참여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치를 지니고 있다.

Almond & Verba(1972)의 정치문화 유형에²⁾ 따르면 북한의 정치문화는 전형적인 신민형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신민형 정치문화는 성기중·홍현상(2003, 14-18)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듯이 일반적으로 정치체제와 산출만 존재하고 투입과 정치적 자아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라 할 수 있다³⁾.

1)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주민에 대한 개념 규정은 그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초기에는 '귀순자', '귀순용사'라고 불렸으며, 법적으로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대한 법률>를 제정함으로써 '탈북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탈북자'라는 용어가 거부감이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통일부는 여론수렴을 통해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이 또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탈북한 북한 주민의 이미지보다는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정향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Almond & Verba(1972)는 민주주의 시민문화가 정치체제 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체제 구성원의 정치심리적 정향을 유형화하여 5개 국가의 정치문화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지방형 정치문화(parochial political culture), 신민형 정치문화(subject political culture), 참여형 정치문화(participant political culture)의 3가지 정치문화유형을 도출하였다.

3) 이 연구는 2002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20세 이상 새터민 남녀 4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을 통하여 조사한 것으로 북한에서 실시되는 선거가 민주주의 사회와 달리 강제적 동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투표행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선거가 민주적 절차를 의미하기보다는 요식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

북한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와 수령제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아래에서 민주주의적 투표형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도 민주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대중의 지지로부터 구하고 정치적 참여구조로서 형식적인 선거 제도를 갖추고 있다. 다원적 정치질서나 실질적인 다당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당체제하의 정당과 이러한 체제하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동원에 의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고 엘리트 충원과 정치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선거는 주민들의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선거가 갖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사회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정치체제는 짧은 시일 내에 변화가 가능하고 개인 역시 이러한 정치체제에 변화와 적응이 가능하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문화체계는 단시일 내에 변화되기가 어렵다(김영수 1992, 140; Jowitt 1974, 1171-1172). 그로 인해 새터민들은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 간 문화접변으로⁴⁾ 일종의 태도변용을 보이게 된다(윤여상 2002, 171)⁵⁾. 즉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투표행태는 자신이 경험한 독특한 문화적 속성 속에서 일종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정치문화로 변형된다.

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정치적 의식과 선거의식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통제 사회에 순응하여 생활하고 있다.

- 4) 문화접변이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사회가 직접, 간접으로 접촉함으로써 문화변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 5)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적응적 변동까지 포함하는 문화접변은 문화수용, 동화, 변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수용은 두 개인상의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을 하면서도 각각 자체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 내에 공존하는 문화현상을 의미한다. 동화는 다양한 하위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문화와 유사해지거나 지배문화권속으로 흡수되어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속성에 일종의 변화를 가져오는 문화현상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민 집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화변형은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가 오랜 기간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적 특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문화현상이다. 따라서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큰 틀에서 본다면 동화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터민들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 정치체제의 변화를 통하여 겪게 되는 정치적 정향의 변화와 이를 통한 정치참여 의식의 측정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통일한국에서 북한사람들의 정치적 의식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사회·문화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단초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소수계층인 새터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남한사회 적용에만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새터민 연구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새터민들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 형성된 선거의식과 이를 통한 투표참여행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기존에 연구된 투표참여에 대한 일반적 이론들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참여에 대한 기존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들이 인지적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인지적 차원은 물론 감정적, 평가적 차원까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실제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치정향의 구성요소인 인지적 정향과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을 각각 측정함으로써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되고 있는 유권자 선거의식 조사 질문지를 바탕으로 새터민들의 선거의식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기존연구검토와 실증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는 투표참여행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기존의 연구자료 및 국내외 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새터민들의 정치정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당시 선거를 경험했던 새터민 가운데,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새터민들의 모집단의 수가 적고 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스노우볼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새터민들의 특성상 집단적으로 각 집단에서 요구하는 정

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방법은 집단조사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집단의 특성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기존에 새터민들에 대해 연구된 문헌들을 2차자료로써 활용하였다. 분석은 통계 패키지프로그램인 SPSS 12.0을 사용하여 먼저 성별, 연령, 소득, 탈북·입국일, 탈북지역, 직업, 교육수준 별로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새터민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정향에 대한 기본적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카이검정 분석(chi-square), 그리고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투표행태는 유권자가 선거에 임하여 투표를 할 것인가? 기권할 것인가? 투표를 한다면 후보자 중에서 어느 후보를 찍을 것인가? 정당 중에서는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가의 최종선택에 이르는 표심의 변화 형성 결정의 동태적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투표행태란 유권자가 선거에 있어서 투표로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기권하는 의사결정 양태를 의미한다(전재섭 2009, 6).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유권자들의 사회적 특성, 정당 일체감 등 심리적 요인, 합리적·경제적 요인, 가치관, 인지역량, 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회고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쟁점·사건이슈 요인, 지역주의 요인, 후보자 요인, 정당요인, 이념

요인, 후광요인, 여론, 유권자요인이 있을 수 있다.

회고적 요인은 회고적 관정에 따른 투표행태를 말하며, 회고적 관정은 전 정부, 현 정부, 집권 정당 등에 대한 평가가 주요요소가 된다. 유권자가 투표선택을 할 때 전 정부, 현 정부, 현 집권 정당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현 정부와 정당에 대하여 표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후보와 정당을 찍을 것이다. 특히 과거 지향적인 유권자는 전망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적을 보고 회고투표를 한다고 하였다 (Fiorina 1981).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투표행태를 말한다. 유권자는 이익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나 정당을 선택한다는 전망투표, 합리적 투표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향후 선택정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은 정당의 과거 실적이나 미래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수혜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당간의 차별성을 따져보고 자기에게 최대의 수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에 투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망투표를 전형적인 합리적 투표라고도 한다(Downs 1957). 오늘날의 선거에서는 이를 경제투표, 이익투표라고도 하며 그 의미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정책쟁점·사건이슈 요인은 주요정책 및 선거기간 중 돌발된 사건에 대한 후보자 및 정당의 견해, 이를 포함한 주요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탄핵이슈는 정책쟁점 투표로서 위력을 발휘하였으며 다른 모든 요인을 압도하여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주의 요인은 지역정당일체감에 따른 투표행태감을 말한다. 투표의 심리학적 이론을 주장한 미시간학과들은 콜롬비아학과들의 주장과 다르게 소속된 사회집단의 특성이 투표선택을 즉각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심리 성향에 의해 투표결과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이란 특정한 유형의 당파적 태도로서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

착심 또는 귀속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귀속의식은 선거의 안정성과 정당의 제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남한의 지역주의 선거행태로 발현된 지역정당일체감에 따른 투표행태는 그 정도가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후보자 요인은 후보자의 이미지에 의한 투표를 말하는데 후보자의 이미지 형성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후보자의 학력, 경력, 출신지역 등 사회적 속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외모, 언변, 지적 능력, 신뢰성, 정치경륜, 사생활 등에 따라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후보자의 이미지에 의한 투표를 이미지투표하고 부르기도 한다. 정당요인은 정당의 연합, 분당, 통합, 그리고 정당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정당의 연합, 분당, 통합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념요인은 유권자의 이념, 즉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투표행태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보수적인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보수정당 및 보수성향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적인 유권자는 진보정당 및 진보성향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후광요인은 행정학의 후광효과(Halo effect)에서 가져온 용어로서 특정인의 후광에 의해 결정되는 투표행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의 후광효과로서 그의 소속정당후보, 그를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표가 쏠리는 형상이다. 여론은 투표의사 결정에 있어 유권자와 각종 요인 간의 매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는 투표행태 결정요인, 즉 여론 형성 요인으로는 언론 방송 등 매스컴, 선거 마케팅, 선관위 활동,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있다. 특히 후보자가 누구를 찍을 것인지,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유권자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유권자가 일반적으로 후보자를 접할 수 없고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매스컴, 선거마케팅, 시민운동 등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요인은 유권자의 특성,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여기서 유권자의 특성을 결정한 요소는 지역, 학력, 직업, 종교, 이념, 가치체계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는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이론이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 행태를 결정할 때 본인이 소속해 있는 계급, 지역, 종교 등 사회적 속성에 따라 투표선택 행위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동일하게 분류된 구성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여 투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학적 변수를 찾아내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컬럼비아학과⁶⁾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사회집단의 특성이 개인의 투표선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종교라는 세 가지 변수가 투표선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둘째,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미시간대학을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⁷⁾, 투표를 개인의 내면화된 정치적 태도의 결과로 본다. 따라서 투표참여 여부 및 투표선택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은 개별 투표자의 정치적 태도라는 것으로, 이들은 정당일체감 또는 정당소속감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집단에의 소속이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며, 이 정당선호도가 다시 투표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투표행위는 정당에 대한 충성심, 후보자에 대한 태도, 현재의 선거쟁점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Cambell et al. 1954).

셋째, 경제학적 이론⁸⁾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도 불리며 정책적

6) 대표적으로 Berelson et al.(1954)의 "Voting", Lazarsfeld et al.(1968)의 "The People's choice"가 있다. 이 학파는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미시간 학파의 '정치심리학적 접근법'에 비판을 받지만, 사회계층적 특성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투표행태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고, 사회심리학과 정치사회학적 관점에 많은 발전을 제공하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7)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의 선거연구를 주도한 미시간학파는 1960년에 출간된 "The American Voter"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를 통해 그 입장이 집약되었다. 이후 정당일체감의 역할은 감소하고 정치적 이념과 쟁점에 대한 태도와 일관성은 증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면서 쇠퇴하다가 1980년대 정당의 부활과 함께 다시 주목을 받았다.

8) 경제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Downs(1957), Key(1966), Fiorina(1981), Green & Shapiro(1994)가 대표적이다. Downs(1957)는 경제학적 논리를 정치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Key(1966)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경제적 요인에 따른 투표행태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 발전시

쟁점을 가장 중요한 투표결정요인으로 본다. Downs(1957)가 경제학에 영향을 받아 이를 선거연구에 경제학적 의미의 합리적 인간을 분석에 응용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분석은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각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행할 수 있는 대표를 선택하는 행위이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적 대안을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견해와 견주어 평가한 후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견해와 가까운 정당에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를 전형적인 합리적 투표라고 보았다.

넷째, 인지심리학적 이론은⁹⁾ 유권자 개인이 투표를 결정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생각의 과정에 주목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선택결과에 대한 비용과 혜택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유권자는 개인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속성 등에 따라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외부적 상황이 변하여도 이에 반응하여 모든 유권자가 일률적인 변화는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투표선택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본다(조기숙 1996, 38-40).

이러한 요인들과 이론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의 이론을 채택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것은 어떤 새터민들이 투표하느냐에 관한 것이므로 유권자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사회경제적

켰다. Fiorina(1981)은 회고적 투표행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Green & Shapiro(1994)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주요 논리와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9) 자세한 내용은 Delli et al.(1996); Lodge et al.(1995); Sniderman et al.(1991); Zaller(1992)을 참조. Delli et al.(1996)은 포괄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해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과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적 분배가 정치적 태도와 선택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Lodge et al.(1995)는 정보의 온라인프로세싱을 설명하는 대표적 논문이다. Sniderman et al.(1991)은 제한된 정보와 지식을 가진 개인이 휴리스틱스를 사용해 정보와 인지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인지적 접근을 통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Zaller(1992)는 기억구조 속에 다양한 정보를 가진 개인이 정치적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배경을 통한 사회학적 접근법에 의한 이론과 개인의 정치정향, 심리를 통한 사회심리학적 이론이 되겠다. 이러한 이론들이 설명하는 변수들, 즉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들과 심리적 정치정향 변수들이 남한에서 투표참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이후 한국의 투표율은 계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왔다. 대통령선거같은 경우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89.2%를 기록했으나,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81.9%,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80.7%,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70.8%, 그리고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역대 최저인 63%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율은 75.8%를 기록했으나, 1992년 제14대에서는 71.9%, 1996년 제15대에서는 63.9%, 급기야 2000년 제16대에서는 57%에 머물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이 60%로 반등했으나,¹⁰ 다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46.3%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누가 투표하고 누가 기권하는지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도저촌고현상, 동원투표 개념이 있다. 공동체생활과 위계질서가 약하고 사회질서가 분화된 도시와는 달리 공동체생활과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는 농촌사회에서는 관권·금권에 의한 압력이나 가족·마을 등의 집단압력에 의해 지역주민이 동원되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화로 인해 과거 농촌사회에 귀속되었던 지역이 빠른 속도로 도시화됨에 따라 농촌사회에서 작용했던 동원 압력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고 최근에는 거의 작용되지 않고 있다(조성대 2009, 239-243).

다음으로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투표참여가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회학적 접근법을 적용해 한국 사회의 투표참여유형을 검증하려는 시도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투표참여행태를 보면 남한은 처음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율이 더 높은 다른 나라에 유례없는 현

10) 이는 국회의 대통령탄핵이라는 쟁점이 불러일으킨 국민적 관심과 참여 의지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으로 봐야 할 것이다.

상이 나타났다. 한배호·어수영(198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표동원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이고 선거는 국민의 의무라는 사고가 더 깊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표동원화에 의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점점 감소되어 여성의 투표율은 저하되고 남성의 투표율은 증가하여 이후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남성이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되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5.3% 높았으나,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8%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c, 15)

연령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bell-shape) 모양의 참여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투표참여율이 낮으나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참여율이 증가하다가 중년층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 후 노년층에 이르면 하락한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서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형과는 다르게 20대의 투표참여는 대단히 낮으나 30대 이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0대가 되어도 하락하지 않는다(한배호·어수영 1987; 어수영·곽진영 2001). 남한에서 연령은 사회경제적 변수 중 투표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이다. 어떤 학자는 노년층의 높은 투표참여행태를 세대별 요인으로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정부와 촌로들에 의한 동원투표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김광수 1986, 12-13).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정회옥 2002, 51)

교육은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하나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이론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중매체에 자주 노출되며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능력이 뛰어나다. 교육은 정치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어 정치세계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제들을 다룰만한 능력을 증대시켜 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정치적 관심과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며, 결국 사회경제

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지게 되며, 바로 이러한 정치정향 요인으로 인해 투표행위를 비롯한 정치참여 확률이 높아진다(Milbraith & Goel 1977. 90-96). 그러나 남한의 경우 교육수준과 정치참여는 오히려 반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국민전체 평균보다 떨어지며,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떨어진다(한배호·어수영 1987; 이남영 1993; 조성대 2009).

소득에 따른 투표참여행태 역시 교육수준처럼 사회경제적 지위를 말해주는 변수로써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과정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많다.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생계유지를 위해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그러나 남한은 이러한 설명들이 유의미하지 않다. 1980년대에는 김광수(1989)가 중간소득 계층의 기권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3.8%밖에 나지 않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도 일관된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수준에 따라서 보면 일반적으로 직업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참여율이 낮은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보다 높다. 직업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 이슈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정책상 정치적 관계에 직접 연루될 수도 있다. 반면 농업이나 단순노동 등 수준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에 노출되기 어려운 직업환경을 가지고 있다(Lipset 1981. 196-207).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이론이나 서구사회에서는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도 증가한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한배호·어수영(1987)의 연구에서는 직업수준이 낮은 농민층이 투표율이 가장 낮게 높게 나왔으며, 전문직업인의 경우 투표율이 아주 저조하였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농업이나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사무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왔다(이남영 1992). 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통계적 유의

미성은 약했으나 교육수준은 부정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다(김욱 2002). 이러한 이유를 한배호·어수영(1987)은 남한의 경우 선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시민은 선거를 의미 없는 연례행사로 간주하고 투표에 기권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남영(1992)은 남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동원투표현상에 의해 직업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동원투표의 대상이 되어 이러한 역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정향에 대해 살펴보면 민주사회에서 일반유권자의 높은 정치적 관심도와 인지능력은 참여행위를 위한 요건으로서 투표참여 행태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기존연구를 보면 정치적 관심이나 정치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실제로 투표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서구의 경우나 남한의 경우를 막론하고 경험적으로 확인된다(Almond & Verba 1963; Millbrath & Goel 1977; 이남영 1993; 길승흠·김광수·안병만 1987). 또한 정치적 소외와 투표참여 등의 정치행태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들도 있다. 정치적 소외는 정치적 무력감, 정부·정당·정치제도·정치인·정치체제에 대하여 갖는 불신 및 냉소주의를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공동체의식의 상실도 여기에 속한다. 정치적 소외개념은 복합적인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치효능감에 대한 정의와 측정은 미시간대학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정치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그럴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시민적 의무를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지하는 것”이다(Campbell & Gurin & Miller 1954. 187-194). 미시간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질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정치효능감은 개인이 정치과정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내면적인 것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반응을 보이리라고 느끼게 되는 외부지향적인 것으로 다시 구분된다. 내면적인 것은 정치적 자기 불신과 정치에 대한 이해 부재로 나눌 수 있고, 외면적인 것은 정치인의 무관심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나뉜다(Lane 1959. 149; 김광수 1986. 39). 이러

한 효능감이 서구나 남한에서 투표참여에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박찬욱 1993. 167). 한편 투표효능감도 마찬가지로 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박찬욱 1992; 이재철 2007).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나 선호정당 유무도 투표참여를 이끌어낸다.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강한 일체감을 가지며 선거에 적극 참여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호 정당의 유무는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 직접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이현출(2001)은 정치적 무당파층 사이에서 정치효능감이 낮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연구들은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신뢰나 선호 정당의 유무 등이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밝히고 있는데 제14대 국회의원선거(박찬욱 1993),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이현출 2001), 제15대 대통령선거(김욱 1998; 황아란 1998) 등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후보자나 정당이 사회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서 느끼는 효용이 높아야 한다. 유권자가 지지했던 정당이 불만족스럽고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유권자는 다른 후보자나 정당을 찾아나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대안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나 정당이 과연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대안으로 선택한 후보자나 정당이 매우 만족하다면 유권자는 계속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유권자는 투표에 기권할 것이다. 이처럼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느끼는 효용, 평가의 정도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김재한(1993)은 기대효용을 유권자가 느끼는 후보자 간 차별감과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거리감으로 측정해 후보자 간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한 바 있다. 김욱(1998)은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이념 성향을 기대효용향으로 이용해 여야 성향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참여도가 높았음을 보였다. 선거과정에서 정당이 제기해 이목을 끄는 쟁점도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느끼는 효용과 직결되어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기숙·김선웅(2002)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을 고양해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했다. 이준한(2006)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탄핵’ 쟁점이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의 참여의식을 증대해 투표율을 진작시켰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남한에서 나타나는 투표참여행태는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정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은 서구사회와 달리 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 소득, 직업 등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향, 즉 선거에 대한 인지, 관심, 정치에 대한 내적, 외적 효능감, 투표효능감, 정당일체감 등은 투표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정향들이 새터민들에게는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lmond & Verba(1963)는 정치정향들을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지적 가치와, 정치적 대상에 대한 느낌이라는 정의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며 어떠한 견해를 가지느냐는 평가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즉, 대상과 상호 관계하는 내면화된 부분에 관련된 구성요소에 따라 인지적·감정적·평가적 정향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인지적 정향에만 국한되어 있던 기존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인지적 차원은 물론 감정적, 평가적 차원까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실제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Ⅲ. 연구의 설계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투표참여행태 연구를 토대로 연구설계를 하고자 한다. 설계는 가설의 설정, 변수의 정의, 설문문의 구성, 분석

의 틀,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투표참여행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행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남한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투표행태이론을 바탕으로 새터민들도 이러한 행태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는 남한주민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가설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소득별 분포는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새터민들 또한 이러한 배경 변수들에 따라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새터민들의 인지적 정향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지적 정향 혹은 인식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s)은 이해, 지식, 신념으로 구성된다. 정치체계와 그 역할담당자, 투입-산출과정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인지적 정향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정치체제나 집권세력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 한국의 정치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지적 정향에서 구성원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집단이 정치적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그 구성원 개개인이나 집단의 신념 문제이며 이것이 곧 정치적 인식의 내용을 형성한다. 인지적 정향은 인식의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다. 선거관심과 자신의 정치적 능력감을 나타내는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신념으로서 정치적 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안형기, 최병대, 강인호 1999; Hughes & Conway 1997; Timpono 1998).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도 관련이 있다(Verba & Nie 1972).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적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는 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확률이 높다.

즉 정치에 대한 지식이 높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와 관련된 일에 관여하기 좋아하고 높은 정치참여 지향성을 보인다. 또한 자기 자신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투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사람이며, 능동적인 사람들은 정치행위에 있어 피동적인 사람들보다 참여의 정도가 더 높다(Bone & Ranny 1976). 선거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유권자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나 정당을 미리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향이 높은 유권자는 참여에 적극적이다(박찬욱 1993; Almond & Verba 1963).

셋째, 새터민들의 정서적 정향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서적 정향 혹은 정의적, 감정적 정향(affective orientations)은 정치체제나 구성원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느낌 혹은 감정적 반응을 말한다. 정치체제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 정부나 정치제도에 대한 긍지, 정치를 잘한다 혹은 잘못한다 하는 느낌,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감정 등을 의미한다. 인지적 정향이 개인의 신념이나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정서적 정향은 주로 감정과 느낌을 내용으로 한다. 유권자들에 있어 정당에 대한 정서적 정향은 중요한 변수이다(황아란 1998). 정당태도에 대한 개념은 정당에 대하여 감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한다(Campbell et al. 1960). 정당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는 유권자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인이 없다.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정당이나 싫어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황아란 1998).

넷째, 새터민들의 평가적 정향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평가적 정향(evaluative orientations)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보나 감정뿐만 아니라 가치기준을 포함한 판단과 의견을 말한다. 평가적 정향에는 판단자의 가치기준이 작용하게 된다. 어떤 정치가 바람직하다거나, 어떤 대통령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와 같이 일정한 가치판단 기

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김창희 2005, 100-101). 평가적 정향은 정치적 대상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의미하고 기대를 포함한다. 평가적 정향이 높은 유권자들은 정치행위에도 더욱 적극적이다. 예컨대 선거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하여 개별적 혹은 집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평가적 정향이 높고 후보자에 대하여 상이나 벌을 주겠다는 생각이 강한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투표에 참여한다(이재철 2007, 99).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측정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 인지적 정향,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이다. 이 외 유권자 선거의식을 추가적으로 설문하였다. 선거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선거의식 조사에서 쓰이는 문항을 차용하여 ‘앞으로 투표여부’, ‘투표 안하는 이유’, ‘후보자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 ‘후보자 정책 고려시 주요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을 구성했다.

설문 문항은 남한에서 널리 쓰이는 문항을 차용하되 새터민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에 대한 간단한 수정을 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성, 연령¹¹⁾, 소득¹²⁾, 직업¹³⁾, 교육수준¹⁴⁾, 그리고 새터민 특성을 고려하여 탈북일, 입국일¹⁵⁾과 탈북지역을 조사했다¹⁶⁾.

실제 본 연구에 응답한 새터민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전체 새터

-
- 11) 새터민들의 연령은 대부분 최근 10년 동안 탈북하여 입국한 분이므로 50대 이상이 거의 없다. 따라서 20대, 30대, 40대이상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 12) 가구소득에 대한 측정도 남한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야 하나 대부분의 새터민이 50-99만원 사이의 저소득층이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50만원 미만’, ‘50-99만원’, ‘100만원 이상’으로 나누었다.
 - 13) 새터민들의 직업을 크게 사무직, 기술직, 자영업, 서비스·영업직, 학생, 무직, 기타로 나누었다. 그러나 직업별로 소득에 큰 차이가 없었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반면, 구직자와 학생이 많았다. 따라서 ‘직업인’, ‘학생’, ‘무직·기타’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 14) 교육수준은 북한에서의 학력과 남한에서의 학력을 물었으며 북한학력은 ‘고등중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으로 코딩했다. 남한에서의 학력은 남한에서 정규교육(대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남한에서 교육경험이 있다(2)’고 보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남한에서 교육경험이 없다(1)’로 코딩했다.
 - 15) 입국한 날짜를 통해 남한거주년수를 산출하여 2년 미만(1), 3-4년(2), 5-6년(3), 7년이상(4)으로 나눠 코딩하였다.
 - 16) 탈북일과 탈북지역은 새터민들의 투표행태에 큰 의미를 찾지 못해 향후 코딩에서 제외하였다.

민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새터민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응답한 새터민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남한입국 전체 새터민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모집단		표본집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5057	100%	80	100%
성별	남	5107	44%	30	37.5%
	여	9950	66%	50	62.5%
연령별	20대	4066	33%	24	30.0%
	30대	4838	39%	30	37.5%
	40대이상	3372	27%	22	27.5%
북한학력	고등중이하	11552	82%	50	69.4%
	전문대이상	2442	18%	22	30.6%

*출처 : 통일부('08년 10월 기준)

정치적 정향에 대한 변수로 먼저 인지적 정향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선거에 대한 정보로 측정했다. 선거 관심도는 ‘나는 선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였으며,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는 다시 투표의 정치적 중요성, 정치인의 관심, 정치인에 대한 신뢰, 정치적 자기신뢰, 정치에 대한 이해, 투표효능감으로 나누었다. 투표의 정치적 중요성은 ‘나에게는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며, 정치인의 관심은 ‘정치인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당선된 후 선거 때 행동과는 상당히 다르다’로 하였다. 정치적 자기신뢰는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이해는 ‘나는 정치나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되 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로 하였다. 투표효능감은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물었다. 선거에 대한 정보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으로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나 정당을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네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선거관심도와 투표의 정치적 중요성, 선거정보인지는 순서대로 코딩하였고, 정치인의 관심, 정치인에 대한 신뢰, 정치적 자기 신뢰, 정치에 대한 이해, 투표효능감은 정의 관계를 쉽게 보기 위해 역순으로 코딩하였다.

정서적 정향은 정당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으로 측정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정당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정당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싫어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이를 다시 좋아하는 정당 유무, 싫어하는 정당 유무로 구분하였다.

평가적 정향은 선거 당선자에 대한 평가로 측정했다. "현재 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지방선거 당선자¹⁷⁾, 대통령 당선자,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게 했으며, 이를 다시 리코딩하여 평가의 정도가 강한 "매우 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는 2로 코딩했고, 강도가 약한 "약간 만족한다"와 "약간 불만족한다"는 1로 코딩했다¹⁸⁾.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수로는 지난 선거 투표여부와 앞으로 투표의향¹⁹⁾을 물었다. 지난 선거는 2006. 5.31 지방선거, 2007. 12.17 대통령선거, 2008. 4.8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물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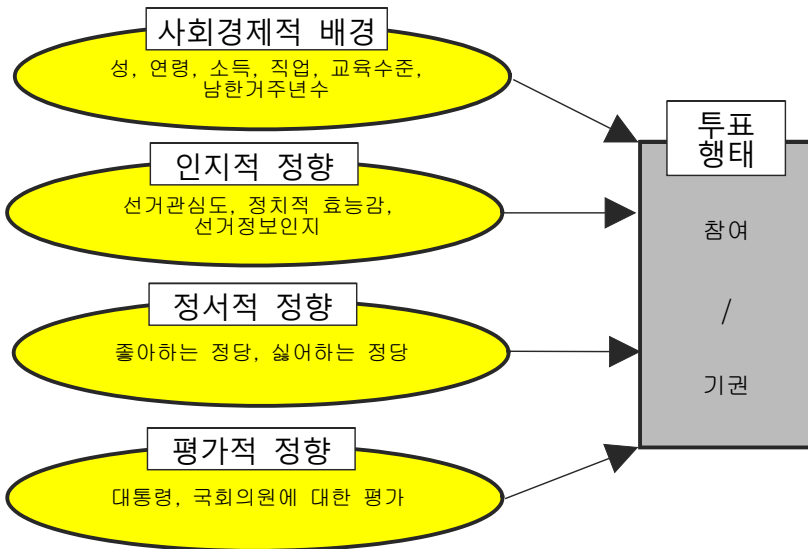
17)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오래되었고, 새터민들은 최근에 입국하여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지방선거당선자에 대한 평가적 정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8) 이 외 총선 당시 선호정당과 지금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년 전에는 어느 정당을 가장 좋아하셨습니까?'라는 질문과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 '진보·보수 성향을 말할 때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구성하였으나 결측값이 많고, 진보·보수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9) 가장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선거가 끝난 직후 투표여부를 물어야 하나 연구기간 중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의 투표의향'을 물어볼 수 밖에 없었다.

나 분석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8.4.8 총선 투표여부만 쓰였다. 이 또한 현재 새터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정향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표의향’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투표함’은 2로, ‘투표안함’은 1로 코딩했으며,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는 4,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는 3,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2,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1로 코딩했다.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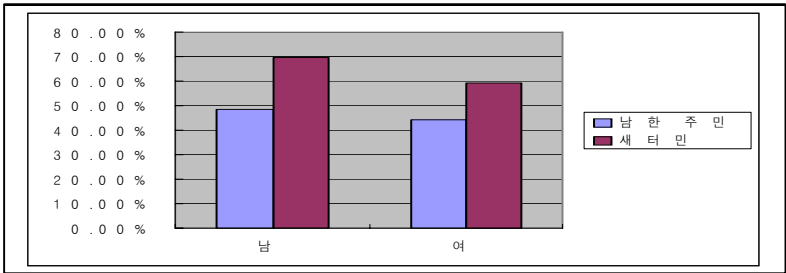
[그림 1] 새터민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틀

IV.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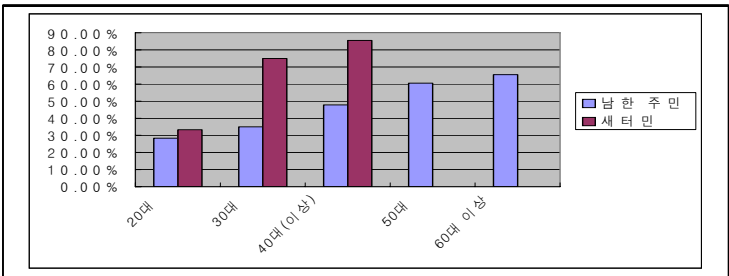
1. 새터민들의 선거의식에 대한 남한주민과의 비교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새터민들의 투표율과

선거의식을 남한 주민과 간단히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투표율을 살펴보면 남한주민은 46.1%였으며, 새터민은 64.0%로 새터민들의 투표율이 남한 주민보다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터민들이 북한에서의 정치문화 경험으로 인해 선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대별 정치문화 경험에 따른 투표행태를 연구한 어수영(2006)의 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성별과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남한 주민과 새터민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게 나왔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즉 새터민들의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에 조금 더 적극적이라든지, 젊은 층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나이가 들수록 참여적인 모습들은 남한 사회와 다르지 않았다([그림 2],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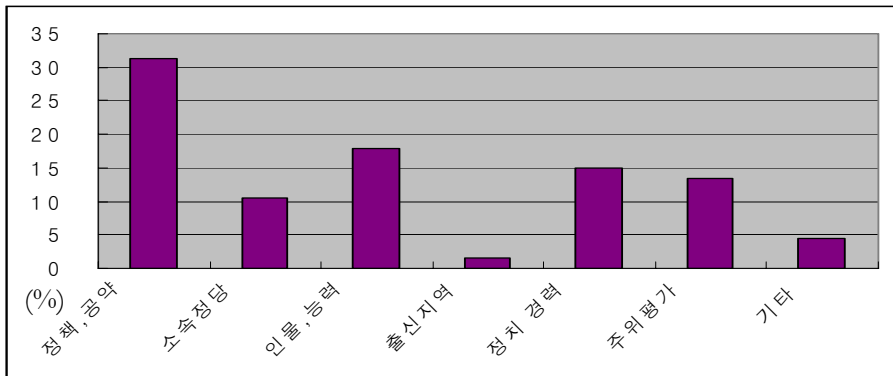


[그림 2]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제 18대 총선 성별 투표율 비교



[그림 3] 새터민과 남한 주민의 제 18대 총선 연령별 투표율 비교

새터민들의 지지후보 고려시 주요 선택사항은 정책·공약(3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물·능력(18%), 정치경력(15%), 주위평가(13%), 소속 정당(10%) 순이었다. 새터민들의 특성상 출신 지역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그림 4). 남한 주민들이 인물과 능력을 가장 고려한다고 답한데 비해²⁰⁾ 새터민들은 남한에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치경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후보자들이 선거 유세시 하는 말을 통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선거 당선 후 공약 실천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남한의 선거가 정책선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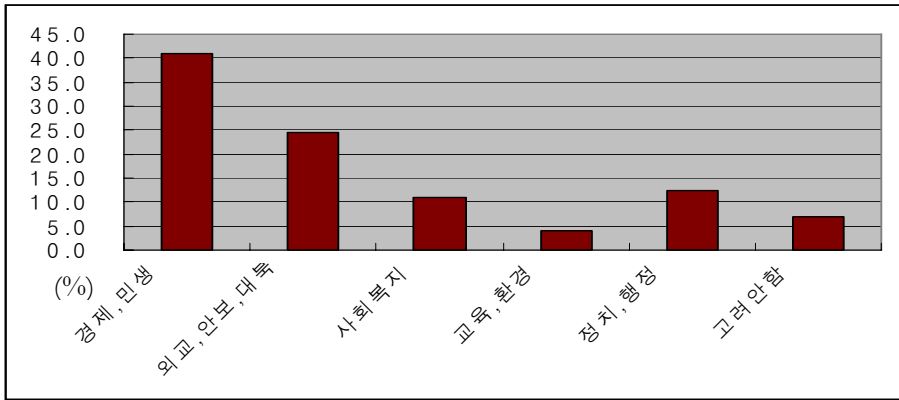


[그림 4] 새터민들의 지지후보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

새터민들의 후보자 정책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을 보면 경제·민생(41.1%)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이 외교·안보·대북정책(24.7%)이었다(그림 5). 즉, 새터민들은 후보자 선택시 정책과 공약을 가장 우선하여 보며, 이 중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는 것이 외교와 안보, 대북정책이었다. 이로 볼 때 새터민들은 경제정책이 비슷할 경우 북한에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d)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주민들의 지지후보 고려시 주요 선택사항으로 인물·능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점점 감소추세에 있었고, 반면에 정책·공약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었다.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새터민들이 북한을 탈북하여 남한에 온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볼 때, 마찬가지로 투표행태 또한 남북한을 배경으로 한 이념적 차이보다는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있는 경제적 요인이 더 큰 것이다.



[그림 5] 새터민들의 후보자 정책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

한편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지만 새터민들이 투표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비교적 다양한 이유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한과 비교하여 봤을 때²¹⁾ ‘남한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5%정도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새터민들은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표 2]). 이로 볼 때 남한주민들은 투표기권 이유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것이 크지만, 새터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보다는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저조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d)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실시한 조사자료로써 비교대상으로 삼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참고만 하였다.

[표 2] 새터민들의 투표 안하는 이유

연령	투표 안하는 이유					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것 같아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기타	
계	2 / 12.5%	5 / 31.3%	4 / 25.0%	2 / 12.5%	3 / 18.8%	16 / 100%

2.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투표여부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투표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투표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 중 성별에 따른 투표행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오지만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고 있다(어수영, 광진영 2001). 새터민들의 성별 투표여부를 보면 남성의 69.6%, 여성의 59.3%가 투표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10% 정도 높았으나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요인 중 연령에 따른 변수는 남한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수 중 하나이다.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다는 경험적 증거는 제 14대 국회의원선거(박찬욱 1993), 제 15대 대통령 선거(김욱 1998),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조성대 2006)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바가 있다. 새터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소득 역시 투표행태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남한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동원투표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이남영 1993, 36). 하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참여가 약간 높게 나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어(장원호 2003. 25) 남한에 있어서 소득별 변수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새터민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별 수준에 따라 투표행태가 큰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정도가 투표참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유권자들의 직업별 요인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남영(1993)의 연구에서는 이 변수가 가장 판별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 나왔다. 서구에서는 직업이 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할수록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데 반해 남한에서는 이와 반대로 농업, 노동직 등에 종사할수록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시민은 선거를 의미없는 의례적인 행사로 간주하고 투표에 기권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한배호·어수영 1987. 168-174).

새터민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인의 경우 86.7%의 높은 투표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47.6%, 무직·기타의 경우 66.7%의 투표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직업인, 무직·기타, 학생 순으로 투표참여율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의 투표의향을 보면 직업인과 학생은 높고 무직·기타는 비교적 낮다. 직업인과 학생은 정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무직·기타 계층은 동원투표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새터민들의 직업별 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차분석을 봐도 알 수 있다. 새터민들은 무직·기타 계층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학생, 직업인 계층은 비교적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이론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은 높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심한 역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터민의 경우 일반적 서구사회의 경우처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이 고등중학교 이하의 경우 투표율이 55%인데 반해,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투표율이 76.5%가 나왔다. 이는 남한에서의 교육경험에 따른 투표여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에서 교육경험이 없는 새터민들은 투표율이 낮은 데 비해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새터민들은 투표율이 78.4%에 이르렀다. 비록 교육수준에 따른 투표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준다. 남한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반해 새터민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적극적이고 선거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남한에서의 교육수준과 선거관심도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²²⁾. 이는 새터민들이 기존의 남한에서의 투표행태에 따라가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 이유는 앞의 ‘투표 안 하는 이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남한에서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로 인해 남한주민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반면 새터민들은 남한의 정치적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며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이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관심도 많고 적극적이다. 앞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터민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라 ‘정치에 대한 이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즉 북한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이해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이 남한에 온 이후 정치의식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며 북한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사회에서 정치적인 지식이나 의식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22) 남한교육경험에 따른 선거관심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4.478, 유의확률이 0.038이었으며 신뢰수준 9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23)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른 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 1, F값은 13.048, 유의확률은 0.001로 신뢰수준 99%에서 유의미하였다.

새터민들의 경우 특별히 남한거주년수에 따라 투표행태나 정치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터민들은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체제와 정치제도 하에서 정치의식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남한에 들어오면서 정치제도나 기타 다른 사회제도 등 모든 면에서 새로이 적응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주년수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거주년수에 따른 제 18대 총선투표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2년 이내인 새터민의 경우 선거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거주년수를 ‘4년 이내’와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5년 이상’ 거주한 새터민이 ‘4년 이내’ 거주한 새터민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은 나타내지 못하였다.

[표 3]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투표 여부

		제 18대 총선		계	비고
		투표	기권		
성별	남	16 / 69.6%	7 / 30.4%	23 / 100%	Chi-Square=0.573, df=1, p=0.449
	여	16 / 59.3%	11 / 40.7%	27 / 100%	
계		32 / 64.0%	18 / 36.0%	50 / 100%	
연령별	20대	5 / 33.3%	10 / 66.7%	15 / 100%	Chi-Square=10.171, df=2, p=0.006
	30대	15 / 75%	5 / 25%	20 / 100%	
	40대 이상	12 / 85.7%	2 / 14.3%	14 / 100%	
계		32 / 62.3%	17 / 34.7%	49 / 100%	
소득별	50만원 미만	14 / 63.6%	8 / 36.4%	22 / 100%	Chi-Square=0.435, df=2, p=0.805
	50-99만원	5 / 55.6%	4 / 44.4%	9 / 100%	
	100만원 이상	11 / 68.8%	5 / 31.3%	16 / 100%	
계		30 / 63.8%	17 / 36.2%	47 / 100%	

		제 18대 총선		계	비고
		투표	기권		
직업별	직업인	13 / 86.7%	2 / 13.3%	15 / 100%	Chi-Square=5.863, df=2, p=0.053
	학생	10 / 47.6%	11 / 52.4%	21 / 100%	
	무직. 기타	8 / 66.7%	4 / 33.3%	12 / 100%	
계		31 / 64.6%	17 / 35.4%	48 / 100%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고등중학교 이하	16 / 55.2%	13 / 44.8%	29 / 100%	Chi-Square=2.087, df=1, p=0.149
	전문대학 이상	13 / 76.5%	4 / 23.5%	17 / 100%	
	계	29 / 63.0%	17 / 37.0%	46 / 100%	
남한거주 년수별	4년이내	4 / 21.1%	15 / 78.9%	19 / 100%	Chi-Square=2.690, df=1, p=0.101
	5년이상	12 / 44.4%	15 / 55.6%	27 / 100%	
	계	16 / 34.8%	30 / 65.2%	46 / 100%	

3. 새터민들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지, 정서, 평가의 정치정향들이 투표참여행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양변수분석이었다. 여기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나 예견이 가능하고, 다른 독립변수의 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행사하는 독립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와 인지적 정향,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이 각각 동일한 경우 투표참여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설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모든 변수는 투표참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리코딩되었다. 이 때 직업별 요인은 직업인여부, 학생여부, 무직·기타여부로 나누어 더미변

수 0과 1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변수의 베타(β)값이 +이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이고, 반대로 -이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이다. 회귀분석 모형은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모형1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만을 고려하였고, 다음 모형2에서는 여기에 인지적 정향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모형3에서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모든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식을 도출하고 나서 중요도가 낮은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회귀식을 도출하는 제거(backward)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었다.

추정될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 모형 :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beta_{12} X_{12} + \beta_{13} X_{13} + \beta_{14} X_{14} + \beta_{15} X_{15} + \beta_{16} X_{16} + \beta_{17} X_{17} + \beta_{18} X_{18} + \beta_{19} X_{19} + \beta_{20} X_{20} + \beta_{21} X_{21} + \varepsilon$$

여기서,

Y : 투표에 참여할 확률, α : 상수항, $\beta_i(i=1, \dots, 21)$: 회귀계수,

ε : 오차항

X_1 : 성별, X_2 : 연령, X_3 : 소득, X_4 : 남한거주년수,

X_5 : 직업인여부, X_6 : 학생여부, X_7 : 무직·기타여부, X_8 : 북한학력,

X_9 : 남한교육경험, X_{10} : 선거관심, X_{11} : 투표의 정치적 중요성,

X_{12} : 정치인의 관심, X_{13} : 정치인에 대한 신뢰,

X_{14} : 정치적 자기 신뢰, X_{15} : 정치에 대한 이해, X_{16} : 투표효능감,

X_{17} : 선거정보 인지, X_{18} : 대통령에 대한 평가적 정향,

X_{19} :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적 정향, X_{20} : 좋아하는 정당 유무,

X21 : 싫어하는 정당유무

[표 4]는 모형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4] 새터민들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1

모형 1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94	0.376	
연령	0.287**	0.112	0.381
학생여부	0.334*	0.174	0.279
남한교육경험	0.462**	0.179	0.320
R2=0.167(adjusted R2=0.124) *p<0.1, **p<0.05, ***p<0.01			

모형1에 대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도 90%에서 유의미한 변수들로 추정되는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²⁴⁾.

모형1에 대한 추정된 회귀방정식 :

$$Y = 1.994 + 0.287 * X_2 + 0.334 * X_6 + 0.462 * X_9 + \epsilon$$

또한 [표 4-5-1]에서 보는 것처럼 도입된 변수 중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는 연령(0.381)이었고, 다음으로 남한교육경험(0.320), 학생여부(0.279) 순이었다. 연령과 남한교육경험은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했으며, 학생여부는 신뢰수준 90%에서 다소 약한 유의미성을 보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만을 봤을 때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이 영향을

24) 모형1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대상으로 각 변수들을 통제하고 회귀식을 도출하여 adjusted R2값을 기준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식을 나타낸 것이다. 모형2와 모형3도 마찬가지로 인지지적 정향과 모든 변수들을 고려, 통제된 후 나타낸 결과이다.

미치고 있었으며, 학생여부도 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만 놓고 봤을 때의 투표참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대한 변수는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중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였다. 그리고 남한에서 교육 경험이 영향력있게 나온 것은 새터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사회경제적 지위이론을 지지해준다. 학생 변수는 앞서 연구결과로 볼 때 투표의향이 낮지만 교육변수와 상관성이 높아 약한 유의미성을 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djusted R2값이 0.124로 결과적으로 이 모형은 설명력이 약했다.

[표 5]는 모형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표 5] 새터민들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2

모형 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14	0.437	
연령	0.174*	0.094	0.200
남한거주년수	-0.159**	0.070	-0.276
선거관심	0.545***	0.085	0.667
정치에대한이해	-0.168*	0.087	-0.231
투표효능감	0.165*	0.087	0.214
선거정보인지	0.251**	0.094	0.304
R2=0.610(adjusted R2=0.550) *p<0.1, **p<0.05, ***p<0.01			

모형2에 대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도 90%에서 유의미한 변수들로 추정되는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2에 대한 추정된 회귀방정식 :

$$Y = 1.114 + 0.174 * X_2 - 0.159 * X_4 + 0.545 * X_{10} - 0.168 * X_{15} + 0.165 * X_{16} + 0.251 * X_{17} + \varepsilon$$

모형2에서 도입된 변수 중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는 선거관심(0.667)이었으며, 다음으로 선거정보 인지(0.304), 남한거주년수(-0.276), 정치에 대한 이해(-0.231), 투표효능감(0.214), 연령(0.200) 순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지적 정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봤을 때 선거에 대한 관심이 투표참여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였고, 그 다음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느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배경 중 유의미한 변수는 남한거주년수와 연령이었다. 남한거주년수가 모형1에서는 제거되었는데 모형2에서 나온 이유는 남한거주년수가 투표참여행태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남한에 오래 거주하면서 여러 정치정향들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정치정향들이 투표참여행태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령은 남한사회에서나 새터민에게서나 마찬가지로 영향력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남한거주년수가 얼마 안 될수록,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적을수록 투표참여행태가 높다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은 새터민들의 투표행태가 북한에서의 정치문화경험, 즉 신민형적인 정치문화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케 한다. 서론에 언급되었듯이 북한에서는 100% 선거참여를 강요하며, 어떠한 정치정향이나 동기유발없이 동원투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투표는 무조건 참여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해 남한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될수록,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적을수록,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형의 adjusted R2 값은 0.550으로 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확연히 높아졌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투표행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정향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형성된 새터민들의 정치정향이 투표참여행태를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은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지적 정향,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의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새터민들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3

모형 3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588	0.552	
성별	0.254	0.142	0.193
연령	0.224*	0.113	0.240
남한거주년수	-0.285***	0.098	-0.450
직업인여부	-0.310	0.187	-0.217
남한교육경험	0.390*	0.198	0.257
선거관심	0.458***	0.087	0.553
정치인에대한신뢰	-0.164	0.136	-0.138
정치에대한이해	-0.175*	0.088	-0.218
투표효능감	0.192*	0.087	0.237
선거정보	0.373***	0.107	0.434
대통령평가정향	0.399**	0.156	0.297
싫어하는정당유무	-0.586***	0.189	-0.436
R2=0.800(adjusted R2=0.700) *p<0.1, **p<0.05, ***p<0.01			

모형3에 대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도 90%에서 유의미한 변수들로 추정되는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3에 대한 추정된 회귀방정식 :

$$Y = 0.588 + 0.224*X_2 - 0.285*X_4 + 0.390*X_9 + 0.458*X_{10} - \\ 0.175*X_{15} + 0.192*X_{16} + 0.373*X_{17} + 0.399*X_{18} - \\ 0.586*X_{21} + \varepsilon$$

모형3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모형2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 관심(0.553)이었으며, 다음으로 남한거주년수(-0.450), 싫어하는 정당유무(-0.436), 선거정보(0.434), 대통령평가정향(0.297)이었다. 그리고 약한 유의미성을 보이는 변수는 남한교육경험(0.257), 연령(0.240), 투표효능감(0.237), 정치에 대한 이해(-0.218)으로 나왔다. 평가적 정향과 정서적 정향을 추가했을 때 adjusted R2값은 0.700으로 높아져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에는 인지적 정향,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 모두 영향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력있는 것은 인지적 정향이었다. 모든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새터민들은 선거에 관심이 많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외 남한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선거 정보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그리고 대통령에 대하여 평가적 정향이 강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새터민들에게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남한거주년수와 싫어하는 정당유무, 정치에 대한 이해가 투표참여행태에 음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한거주년수가 얼마 안 될수록, 싫어하는 정당이 없을수록,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모형2에서도 설명했듯이 새터민들의 북한에서의 신민형적 정치문화경험으로 인해 동원투표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새터민들은 남한에 오래 거주할수록 정치적 정향들이 형성됨을 앞의 각 변수별 분석에서 확인하였다. 즉, 새터민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처음에는 북한에서의 정치문화적 경험으로 인하여 정치적 정향과 상관없이 투표에 참여하다가 남한에 거주한지 오래될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 정향도 싫어하는 정당이 있을수록 정서적 정향이 높다. 그러나 싫어하는 정당이 없을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정서적 정향이 낮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지만 새터민들은 정치에 대한 이해가 낮을수록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동원투표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약하게나마 남한에서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한다는 사회경제적 지위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남한에서는 독립 후 친일파의 집권과 유신독재, 군사정부의 등장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 무관심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새터민들의 경우 남한에서의 그러한 정치적 역사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의 투표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에서 선거를 경험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투표참여행태를 살펴보았다.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들이 만 오천명을 넘어서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효율적인 적응방안 마련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시급한 가운데 새터민들이 남한의 당당한 유권자로서 정치참여를 신장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며, 또한 통일 후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 정치제도 경험행태를 예

측하기 위해서라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정치정향,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나타나는 행태들과 변수들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터민들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남한주민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의 정치문화적 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거 후보자들을 선택시 정책과 공약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을 고려할 때에는 경제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며, 다음으로 대북정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들의 탈북 이유, 그리고 남한에서의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새터민들은 현재 선거 당선자인 대통령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약간 더 많았다.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투표여부는 연령 변수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는 투표참여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정치정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투표참여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향은 선거관심, 투표의 정치적 중요성, 선거정보인지, 대통령 평가정향이었으며, 이 외에도 각각의 정치정향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변수들이 각각 투표참여행태에 대하여 독립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선형식을 통한 예측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는 선거관심이었으며, 다음으로 남한거주년수, 싫어하는 정당유무, 선거정보인지, 대통령평가정향 순이었다. 그 밖에도 남한교육경험, 연령, 투표효능감, 정치에 대한 이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의 투표참여행태에는 인지적 정향,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가장 영향력있는 것은 인지적 정향이였다. 새터민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행태는 남한거주년수가 얼마 안 될수록, 싫어하는 정당이

없을수록,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새터민들이 북한에서의 신민형적 정치문화경험으로 인해 동원투표와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약하게나마 남한에서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새터민들의 동원투표적 행태를 없애고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며, 지속적인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예컨대 선거기간 중 선거참여캠페인이나 TV, 인터넷 등에서의 지속적인 홍보,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새터민들이 단순히 동원투표적 행태에서 벗어나 높은 정치정향과 정치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여 남한주민들과 함께 배움의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올바른 정치의식의 형성과 선거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새터민 모집단에 대한 표본 수의 부족이다. 현재 새터민들의 특성상 남한 주민들과 달리 설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겠다. 둘째는 투표참여행태에 대한 종속변수가 실제 선거에서의 투표/기권이 아닌 ‘앞으로의 투표의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사례들을 보면 실제 투표/기권 여부와 ‘앞으로의 투표의향’ 응답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연구조사 기간 중 진행된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선거가 실시된 이후 이에 대한 투표참여행태를 조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새터민들의 선

거의식, 정치정향과 투표참여행태이기 때문에 이를 과거 새터민의 투표행태와 연계하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현재 집권당과 대통령이 아닌 새로운 정당과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연구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남한주민들이 아닌 남한의 정치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선거의식과 정치정향을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연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정치정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선거의식과 투표행태를 일반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질서 확립과 발전, 나아가 남·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길승흠, 김광수, 안병만. 1987. 한국선거론. 서울: 다산출판사
- 김광수. 1989. “누가, 왜 투표를 안하는가?: 기권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기권사유.” 호남정치학회보, 1, 1-32
- 김영수. 1992. “북한의 정치문화: 주제문화와 전통정치문화.” 한국정치학회보, 26(2), 139-157
- 김 옥.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199-246
- _____. 2002.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통합적 연구방향의 모색.”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373-401
- _____. 2006.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지방선거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5(1), 99-118
- 김재한. 1993. “양당제하에서의 선거: 중간투표자 정리.”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368-378
- 김창희. 2005. 비교정치론. 서울: 삼우사.
- 박찬욱. 1993.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자 인지능력과 투표 참여 의사 결정: 제14대 총선 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3), 153-174
- 성기중, 윤여상. 2003. “북한의 선거제도와 투표 행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6, 155-174
- 안형기, 최병대, 강인호. 1999. “친환경 정치행동화: 사회, 심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의 관점.” 한국행정학회보, 33(4), 393-409
- 어수영, 박진영. 2001.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남성과 여성의 참여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4), 165-190
- 윤여상. 2002. 통일시대 북한주민의 남한생활: 이론과 실제. 대구: 세명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21-47
- 이승희. 1981.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 Almond-Verba의 「시민문화」이론의 재구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철. 2007. “정치문화와 투표행위: 5.31지방선거에 나타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정향과 투표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3(2), 93-121.
- 이준한. 2006. “17대 총선과 유권자의 투표참여.”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서울: 오름, 135-154
- 이현출. 2001.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4), 137-160
- 장원호. 2003. “교육수준이 선거기권에 미치는 영향: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4(2), 23-45
- 전재섭. 2009.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정당선호, 후보자 선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욱. 2002. “투표기권과 정치정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기숙, 김선웅. 2002.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16대 총선 투표율을 낮추었나?” 한국

- 정치학회보, 36(1), 163-184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36(1), 51-76
- _____. 2009. "투표참여와 기권." 전용주 외 편.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222-25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a.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_____. 2008b.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_____. 2008c. 제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 _____. 2008d. 제 17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한배호, 어수영. 1987. 한국정치문화. 서울: 법문사
- 황아란. 1998. "정당태도와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II. 서울: 푸른길, 257-313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erelson, Bernard, Paul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ne, Hugh and Austin Ranney. 1976. *Politics and Voter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Fiorina, Morris p.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reen, Donald p,and Ian Shapiro. 1994. *Pathologies of Rational Choice Theory: A Critique of Appl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ughes, John and Margaret Conway. 1997.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arbara Norrander & Clyde Wilcox, eds.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Washington D.C: CQ Press.
- Jowitt, Kenneth. 1974. "An Organiza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in Marxist-Leninist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1171-1191
- Key,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ne, Robert E. 1954. *Political Life*. Glencoe: Free Press.
- Lazarsfeld, Paul F., Berna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6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3e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문 1. 지난 선거에 투표하셨습니다까?

	투표함	투표 안 함	모르겠음
2006년 5.31 지방선거 (시장, 시의회의원 등)			
2007년 12.17 대통령선거			
2008년 4.9 국회의원총선거			

▶문 2. 앞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투표하실 생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 1)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2) 가능하면 투표 할 것이다
3)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4)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문 3. ‘(별로, 전혀) 투표하실 생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에 2)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것 같아서
3)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4) 귀찮아서
5)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6)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7)기타

▶문 4. 선생님께서는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시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십니까?

- 1) 정책·공약 2) 소속 정당 3) 인물·능력 4) 출신지역
5) 정치 경력 6) 개인적 연고(학연·지연 등) 7) 주위 평가
8) 기타

▶문 5. 선생님께서는 후보자 정책 고려 시 어떤 정책을 가장 크게 고려하십니까?

- 1) 경제/민생 2) 외교/안보/대북 3) 사회복지
4) 교육/환경 5) 정치/행정 6) 고려 안 함

▶문 6. 선생님께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나는 선거에 관심이 많다.”				
“나에게는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인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당선된 후 선거 때 행동과는 상당히 다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는 정치나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되 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나 정당을 고르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				

▶문 7. 현재 선거 당선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2006. 5.31 지방선거 당선자 (시장, 시의원, 구의원)				
2007. 12.17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대통령)				
2008. 4.8 국회의원 당선자 (해당 지역구 의원)				

▶문 8.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정당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민주노동당 4) 진보신당
5) 창조한국당 6) 자유선진당 7) 기타정당 8) 없다

▶문 9.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정당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민주노동당 4) 진보신당
5) 창조한국당 6) 자유선진당 7) 기타정당 8) 없다

▶문 10. 1년전에는 어느 정당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 1) 한나라당 2) 대통합민주신당 3) 민주노동당 4) 민주당
5) 창조한국당 6) 자유선진당 7) 기타정당 8) 없다

- ▶문 11. 진보·보수 성향을 말할 때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상당히 보수적이다 | 2) 약간 보수적이다 | 3) 중도적이다. |
| 4) 약간 진보적이다 | 5) 상당히 진보적이다.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장려>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성림

《목 차》

【요약문】

【본 문】

- I. 서 론
- II.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
- III.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정보시스템 설계
- IV.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가족동반 탈북 및 국내 입국이 이어지면서 탈북 청소년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한편 한반도 정세는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머지않아 남과 북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며 통일에 대해 논의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하지만 60여 년 이상 왕래가 없이 살아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과 생활수준의 차이, 그리고 이로부터 산생되는 지역갈등과 경제 및 사회관계의 불평등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의 지역갈등을 해결하려면 남한과 북한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는 중재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탈북 청소년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및 교육사업은 한반도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탈북 청소년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체계는 아직까지도 부재하며 특히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앞으로 탈북 청소년의 국내 입국이 증가할 경우 탈북 청소년들의 방황과 부적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탈북 청소년 개인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실 기회의 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무원칙한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엄밀히 말해서 “기회의 균등”이란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도 기회의 균등 원칙을 적용하여 그들이 비합리적인 진로선택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 무제한한 선택의 자유를 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목표와 적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진로선택 능력이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선택의 기회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러워한다. 즉 선택의 기회를 주기 전에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논문은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탈북 청소년 정착지원의 핵심인 진로지도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능력을 분석하였다. 합리적인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과 함께 진로선택 능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을 둘러싼 진로 및 교육환경과 그들의 적응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 지원 담당자들과 대학입학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여러 부류의 탈북 청소년(정규학교, 대안학교, 대학교, 취직준비, 무직 등)들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 주변의 각이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탈북 청소년의 진로결정 양상을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논문은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 능력을 높이고, 그들에게 진로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하였다.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이라고 명명한 이 행정정보시스템은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및 담당자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정부의 탈북자 지원예산도 절약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목적을 분명히 하

고 타당성을 검토하며 시스템의 대략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단계를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단계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능력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전략 기획(ISP)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앞으로 정부가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선다면 이 보고서가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서론

1. 연구 목적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1만 6천명이 넘으면서¹⁾ 탈북자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더욱이 통일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최근 행보²⁾는 북한이탈주민, 특히 탈북 청소년문제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실 북한에서 태어나고 남한에서 성장한 탈북 청소년들의 특수한 경력은 차후 남북 통합시대에 가서 각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즉 시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아니면 최소한 경제공동체로서의 남북통합의 형태가 되던 한반도의 상황은 분명히 변화 할 것이며, 남과 북 주민들 간의 교류는 활성화 될 것이다. 하지만 60여 년 이상 왕래가 없이 살아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과 생활수준의 차이, 그리고 이로부터 산생되는 지역갈등과 경제 및 사회관계의 불평등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의 지역갈등을 해결하려면 남한과 북한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는 중재자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책임자는 탈북 청소년들이다. 비록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은 남한에서 교육을 받고, 인간관계를 맺고, 직업 활동을 하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과정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화된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한편 탈북 청소년들의 고향은 북한이며,

-
- 1)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1만6천명을 넘었고 올해 3천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년 6월 8일).
 - 2)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탈북 청소년 배움터인 한누리학교'를 방문했다(연합뉴스, 2009년 7월 31일). 또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 여명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매일경제 TV, 2009년 7월 16일).

북한에는 가족 또는 친척, 친구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향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남과 북의 중재자로서 활약할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탈북 청소년에 대한 특성화 된 지원체계는 아직까지도 부재하며,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은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전반에 대한 정착 지원의 한 부분으로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문가들과 탈북 청소년 지원 단체 및 교육기관들에서 탈북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³⁾에 힘입어 탈북 청소년 정착지원의 핵심인 진로지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정부 역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지금까지 탈북자 지원을 위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비합리적인 진로선택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왔다고는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초기정착단계에서는 그들의 진로결정에 누군가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 이들의 진로선택 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진로선택 능력은 1차 진로결정의 합리성, 현실성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

3)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에서는 『2009년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안)』에서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센터(가칭)” 신설에 대해 제안했다. 이는 중앙 단위의 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종합적·상시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만, 탈북 청소년이 하나원⁴⁾을 나온 직후의 선택 즉, 1차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을 둘러싼 진로 및 교육환경과 그들의 적응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탈북 청소년 매 개인별 특성과 수준, 그들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특성화된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인력과 비용, 시간을 동시에 절약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며 시스템의 대략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단계를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단계라고 부른다. ISP 과정은 모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서 핵심적인 단계가 된다(안문석, 2004).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능력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전략기획(ISP)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연구 방법

먼저 탈북 청소년 적응현황 즉, 중도탈락률, 학교적응문제, 심리적 문제 및 가족과 인간관계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 단행본, 선행 연구논문, 정기 간행물,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교육지원을 비롯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및 관련 법령은 통일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설계의 이론적 기초를 위해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관련 단행본, 연구 논문, 정기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4) 원래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임. 이 논문에서는 “하나원”으로 표기함.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진로 및 교육환경을 탐색하고 탈북 청소년들의 부적응 원인과 진로선택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화인터뷰, 심층면접, 사례분석 등의 정성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탈북 청소년 지원정책과 교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탈북 청소년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탈북 청소년의 진로환경 조사를 위해 20곳의 주요 대학 입학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 대학의 북한이탈주민 입학기준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와 함께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양상과 그들의 진로선택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학교(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및 방과 후 학교에서 공부하는 탈북 청소년,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무직 청소년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자 주변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사례를 수집하여 그를 통하여 탈북 청소년 부적응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돕는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설계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비롯한 여러 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와 심층면접, 사례분석 등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단계와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 지원 기관, 단체 및 담당자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공급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연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또는 탈북 청소년 지원 담당자의 입장에서 연구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연구의 특징은 수혜자 집단에 속한 연구자가 수혜자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탈북 청소년 진로 및 교육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 역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진

로와 관련한 심각한 갈등을 여러 번 경험했고, 주변의 탈북 청소년들로부터도 진로선택과 관련한 고충을 자주 듣고 있다. 동료 및 후배들의 진로선택을 돕기 위해 그들과 상담을 하고 함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본 연구자는 탈북 청소년들의 욕구와 희망에 대해 깊이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또는 진로코칭)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II.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

1. 탈북 청소년 문제의 배경

탈북 청소년 문제는 탈북자의 대량 탈북과 함께 발생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의 탈북 이유는 대체로 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하게 전개된 북한 식량난과 관계가 있다(이정우, 2007).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탈북 한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부모를 따라 혹은 단독으로 탈북한 후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한편 표 1에 의하면 10세~29세 사이의 탈북 청소년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40%에 달한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입국시점 기준, 2009. 3 현재, 출처: 통일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계(명)	604	1,896	4,394	5,222	2,282	695	743	15,836
비율(%)	4	12	28	33	14	4	5	100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탈북 청소년의 연령을 어디까지로 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청소년의 연령은 시대마다, 학자들마다, 또 관련 법규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하지만 김활수(2006)는 탈북 청소년의 연령은 남한의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정신적·신체적인 발육에 지장이 있으며 대체로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자신보다 2~3세, 또는 그 이상 낮은 연령의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에 한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므로⁵⁾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일반 청소년 연령층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진로결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는 “10세 이상 30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을 탈북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신체발달에 있어 남한청소년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 이향규(2006)에 따르면 16세 전후의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키 차이는 평균 15cm나 된다고 한다. 성장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신체발육부진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조영아(2009)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남한 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이들은 남한의 학습 풍토에도 익숙지 못하며, 탈북과정에서 생긴 심리적 외상, 기초 학습 능력의 부족, 문화 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 형편, 부족한 지원 체계 등의 이유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탈북 청소년들의 가정환경도 낙관적이지 않다. 장혜경(2008)에 따르면 탈북자 가정은 대체로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탈북이후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족갈등, 가족해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5) 2009년 7월 31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정부는 4년제 대학(교육대 포함)에 입학 또는 편입하여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한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함께 탈북 청소년들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불안감은 남한 사회적응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취약한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진로선택의 어려움이다. 진로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탈북 청소년들로서는 이러한 진로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진로스트레스로 나타나며 이것이 심한 경우 극심한 우울증 혹은 자포자기로 표현된다.

2. 탈북 청소년의 진로 및 교육환경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화와 함께 탈북 청소년의 진로 및 교육환경도 많은 면에서 개선되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 탈북 청소년 정착지원은 초기 적응과 학습능력의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8월 15일 탈북청소년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에 참가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탈북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초기적응 강화, 방과 후 학교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⁶⁾ 현 장관은 지난 7월 31일에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탈북 청소년 배움터인 한누리학교를 방문하여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⁷⁾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⁸⁾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⁹⁾ 지원예산 확대, 1대 1 멘토링과 방과 후 특별교육 등 탈북 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데일리NK, 2009년 8월 16일, 『탈북청소년 후원 기금 마련 콘서트 열려』

7) 연합뉴스, 2009년 7월 31일, 『현 통일부장관, 탈북 청소년 배움터 방문』

8) 매일경제, 2009년 7월 16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탈북 청소년 학교 지원”』

9) 한국정책방송(KTV), 2009년 7월 16일,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09년 1월 30일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년 7월 31일 개정)의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¹⁰⁾, 탈북 청소년 대상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¹¹⁾, 장학사업 확대¹²⁾ 등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도 더욱 활발해졌다. 대안학교, 방과 후 학교, 그룹 홈(공동생활시설), 가정방문교사 등의 형태로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³⁾

이처럼 관련 법 개정,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탈북 청소년 지원 대책 발표, 민간단체의 교육지원 활동의 확대 등 탈북 청소년들을 둘러싼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특히 진로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특히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 기준이 매우 높아졌다. 이전에는 탈북 청소년들이 특례입학을 통해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이나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했다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입 학생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¹⁴⁾ 악순환이 계속되자 일부 대학들에서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10) 2009년 7월 31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통일부장관은 보호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등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1)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2)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0조 1항 3호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사업내용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하였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3) 2009년 7월 16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6개의 민간교육시설(그룹 홈, 대안교육시설, 방과 후 공부방)에서 보호하는 탈북 청소년은 334명으로 집계되었다.

14) 조명숙(2005), 『남한 내 탈북대학생 교육환경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1월 현재,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외국어대학교의 탈북 대학생 입학자 수는 약 116명이며, 휴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 입학에 제한하고 있어 갈수록 탈북청소년들의 대학입학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박운숙, 2007).

아래의 표는 본 연구자가 주요 대학들의 북한이탈주민 입시기준과 절차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이 지원하는 대학으로 선정, 조사방법은 전화로 입학 관계자와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2] 대학별 북한이탈주민 입시 기준 및 절차 (2010년 입학 기준)

No	대 학 명	문 의 처	입시 기준 및 절차
1	서울대학교	02-880-6976	작년까지는 논술 및 수학 필기고사. 올해부터는 수능 성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 면접
2	고려대학교	02-3290-1251	TOEFL 성적 / 수학, 국어 필기고사 / 면접
3	연세대학교	02-2123-4131	국어, 수학 필기고사 (면접 없음)
4	서강대학교	02-705-8621	구술 면접 [영어 자기소개 등 난이도가 높음, 작년 지원자 56명중 17명 합격] (필기고사 없 음)
5	성균관대학교	02-760-0114	영어 필기고사 / 면접
6	한양대학교	02-2220-0114	영어 필기고사 100% (면접 없음)
7	한국외국어 대학교	02-2173-2075	구술 면접 (필기고사 없음)
8	중앙대학교	02-820-6396	논술, 영어(인문계) 필기고사 / 면접 수학, 영어(자연계) 필기고사 / 면접
9	숭실대학교	02-820-0050	국어 필기고사 / 면접
10	이화여자대학교	02-3277-7000	영어, 국어(인문계) 필기고사 / 면접 영어, 수학(자연계) 필기고사 / 면접
11	숙명여자대학교	02-710-9920	국어, 영어(인문계) 필기고사 / 면접 국어, 수학(자연계) 필기고사 / 면접

학 28(24.1%), 제적 33명(28.55%)을 제외한 재학생 수는 55명(47.4%)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행본 박운숙(2007) 재인용)

No	대 학 명	문 의 처	입시 기준 및 절차
12	경희대학교	02-961-0028	남한 정규학교 졸업자 : 수시 모집 [면접만] 북한 고등학교, 검정고시합격자 : 정시모집 [수능]
13	건국대학교	02-450-0007	서류전형 및 면접 (필기고사 없음)
14	동국대학교	02-2260-8861	면접 100% (필기고사 없음)
15	국민대학교	02-910-4114	면접 100% (필기고사 없음)
16	단국대학교	031-8005-2550	면접 100% (필기고사 없음)
17	세종대학교	02-3408-3456	올해부터, 국어 필기고사 (면접 없음)
18	한동대학교	054-260-1083	구술 면접[인성, 영어, 수학 테스트] (필기고사 없음)
19	경북대학교	053-950-5072	구술 면접[1시간 가량 필기테스트] (필기고사 없음)
20	부산대학교	051-510-1202	논술 필기고사 / 면접

*해당 표의 대학 순위는 실제 대학 순위와 상관없음.

한편 탈북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의 경우 전공과목에서 영어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졸업을 위해서는 공인 영어성적이 있어야 한다. 영어실력이 낮은 탈북 청소년들로서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힘들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시장이 침체된 지금의 상황은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환경을 더 어렵게 만든다.

3. 탈북 청소년 적용 현황

2009년 현재 정규학교(초·중·고)에 재학하는 탈북 청소년(1,143명)과 민간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탈북 청소년(170명)은 전체 취학연령 탈북 청소년의 88.8%를 차지한다. 또한 2009년 1학기 현재 대학(전문대 포함, 125개교)에 진학한 탈북 청소년은 610명이다¹⁵⁾. 한편 탈북 청소년

15)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년 7월 16일,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참고.

들의 중도탈락률(초·중·고)은 남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보다 상당히 높으며(조영아, 2009),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탈북 대학생들의 중도탈락률(제적·휴학)도 39%나 되는데¹⁶⁾ 중도탈락의 이유는 크게 학습능력 부진, 연령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표 3] 연도별 중도탈락률 변화¹⁷⁾

구분	초	중	고	계
2007년도	3.5 %	12.9 %	28.1 %	10.8 %
2008년도	1.4 %	9.0 %	14.2 %	6.1 %

한편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학교 내 인간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진실한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황진수·전신욱, 2004). 일부 탈북 청소년들은 교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교사와 친밀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교우관계에서도 중학교 이상 탈북 청소년들이 대체로 덜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심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갈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김미숙, 2006).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기 싫어서 탈북자임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 탈북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들은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친구를 만드는 사이버교제를 선호한다.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부모와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탈북 청소년

16) 2007년까지의 서울·경기 지역 23개 대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입학 302명, 재학 159명(재학율 57.4%), 제적 63명, 휴학 55명, 졸업, 25명으로 나타났다(우양재단, 2008 우양탈북포럼).

17)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안)』,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2009. 5) 참고.

은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가족과의 대화가 적었다. 특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난 가족의 경우 소통이 적었으며, 대체로 남자 형제사이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다. 또한 일부 탈북 청소년의 경우 새 아버지(중국조선족 또는 탈북자)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한 경우 가출로도 이어진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사망하였거나 생존해있더라도 그들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재혼을 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화는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한편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문란한 성문화에 노출된 탈북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외로움 등의 이유로 경솔한 남녀관계를 맺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으며 이는 그들의 정신적 성장을 저해한다.

무연고 탈북 청소년¹⁸⁾들의 방황과 부적응 문제도 뚜렷한 개선이 없다. 비슷한 또래의 탈북 청소년들과 같이 진학교육을 받고 있는 무연고 청소년들은 비교적 적응을 잘 하고 있으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무연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에 빠져 진학 또는 취업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일부 무연고 청소년들은 낮에는 대안학교에서 다른 청소년들처럼 정상생활을 하지만 밤에는 PC방에서 게임에 빠져있거나 친구들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4.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

탈북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바로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들은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한다(장문강, 2008). 심층면접에 의하면 20세 미만 탈북 청소년 중에는 인생목표나 진로계획이 있

1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안효덕 대외협력부장에 의하면 무연고 탈북 청소년은 2008년 5월까지 총 308명 정도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약 15%에 해당된다고 한다.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 <http://rainbowyouth.or.kr>)

는 경우는 드물며, 20세 이상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높여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보다는 “운” 또는 인간관계(타인의 방조)에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1) 탈북 청소년 진로결정 현황

일부 탈북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이 대학에 진학하며 맹목적으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선호한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탈북 대학생들은 재학 기간 치열한 경쟁, 학점관리 등의 문제로 매우 힘겨워하며, 학업부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휴학을 하거나 중퇴하는 경우가 많다(정진경 외, 2006). 또한 학과 위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적성이나 인생목표와는 관계없이 취직이 잘 되거나(실례: 간호학과) 비교적 공부하기 쉬운 학과(실례: 중국어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다고 한다. 반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방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탈북 청소년들도 있다. 이들 중에는 높은 학점을 받으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취학연령이 지났거나 진학에 관심 없는 탈북 청소년들은 대체로 1차 진로로 취업을 선택한다. 요즘은 곧바로 취직을 선택하기보다는 직업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을 하려는 탈북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 습득보다는 기초생활수급비 수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탈북 청소년들도 있으며, 취직을 할 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교 및 대안학교 진학을 포기한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목적 없이 놀거나 취업을 한다 해도 대부분 아

르바이트를 한다. 또한 무연고 청소년 지원시설은 대부분이 진학교육에만 국한되어 있어 취업을 원하는 무연고 청소년들에게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안효덕, 2008년).

2)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낮은 학습능력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중학생의 기초학력은 남한 학생의 84.1% 수준이며, 그중 영어, 국어 등 언어 과목에서는 남한 학생과 더 큰 격차를 보인다고 한다(조영아, 2009). 또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안효덕 대외협력부장은 탈북 대학생 3명 중 1명꼴로 자퇴하고 있다며 “영어나 한자 등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숙·안희수(2004)는 탈북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의 남한 학생들에 비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표현 방식의 차이에 익숙하지 않아 수업내용이나 문제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학습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낮은 학습능력은 심각한 학업 부진을 가져오며 자기효능감을 저하시켜 결국 진로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 가족의 존재여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으며 사회적응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진로문제에 있어서 부모 또는 가족의 합리적인 조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탈북 청소년의 부모 역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면서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욱이 진로문제에 관한 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윤인진 외, 2006; 이수연, 2008; 장문강, 2008). 오히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탈북 청소년은 진로문제에 있어서 무연고 청소년에 비해 간섭과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진로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

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

자녀교육에 있어서 한국민족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탈북자 부모들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공부시키지 못했던 북한현실을 생각하며 자녀들이 남한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조건 상급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윤인진 외(2006)에 의하면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에 관한 질문에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원하는 경우가 92.5%(딸), 90.9%(아들)로 대답해 자녀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그것도 서울의 상위권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일부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는 진로를 결정하는 탈북 청소년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된다.

라. 관습 또는 사회적 분위기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남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탈북 청소년들은 1차 진로를 선택할 때 관습적으로 대학진학을 원한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어디에도 취업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학 졸업생도 취직하기 어려운 요즘의 상황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위기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다. 한편 탈북 청소년들이 진학이나 취직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지 않게 눈높이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탈북 청소년 지원단체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감싸줌으로써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자존감만 내세우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마.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영향

남한 사람들이 탈북 청소년에게 주는 조언의 편파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부 교회나 민간단체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추켜세우면서 통일시대 인재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조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언

은 탈북 청소년들의 현실인식을 결여시키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게 한다. 반면 “탈북자들은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는 관점을 가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관계자들은 대학진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사회정착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탈북 청소년들이 비관주의와 열등감에 빠져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한다. 이와 함께 남한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한 탈북자 출신 선배들의 조언도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다.

Ⅲ.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정보시스템 설계

— 정보전략기획(ISP) 보고서 —

1.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탈북 청소년의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 관리능력과 진로결정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탈북 청소년 지원정책은 이들에게 기회만 주었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에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따라서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탈북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진로선택 능력을 높여주는데 있다.

또한 진로지도 시스템의 필요성은 탈북 청소년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남한의 또래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직업 관련 내용이나 대학 학과 정보들을 탈북 청소년

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수연, 2008). 따라서 진로지도 정보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직업 및 진학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요강으로서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민간단체의 탈북 청소년 지원 사업이 통합적이지 못하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복과 낭비현상이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교육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이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면 반드시 부적응자와 탈락자가 생기게 된다. 즉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의 또 다른 목적은 탈북 청소년 매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방향과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탈북 청소년 지원단체 및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새로 개발하게 될 정보시스템은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진로 선택 능력을 높여주고,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자 선정 및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모든 정보시스템은 설계에 앞서 그 정보시스템의 이용자와 궁극적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¹⁹⁾ 이용자와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보시스템의 목적이 불분명해진다.

19) Ralph M. Stair, George W. Reynolds, 『Principles of Information Systems : A Managerial Approach』 6th ed, (Boston : Course Technology, 2003), p.536-542.

1) 이용자 식별

가. 이용자 집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입안자

통일부 정착지원과 직원

교육과학기술부 탈북 청소년 담당 직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탈북자 담당 직원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단체의 탈북자 담당 직원

정규 교육기관의 탈북 청소년 담당 교사

종교단체, 민간 지원단체 및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담당자

탈북 청소년들이 진학하는 대학교의 입시담당자

탈북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탈북자 관련 연구기관

탈북 청소년의 부모

탈북 청소년 당사자

나. 궁극적 수혜자는 탈북 청소년이다.

2) 이용자 요구사항

가. 정부의 요구사항²⁰⁾

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관심을 돌리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정부는 탈북 청소년들이 사회의 문제야로 전락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탈북 청소년 진로 및 교육에 관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요구한다.

20)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나. 탈북 청소년 지원업무를 담당한 서비스 공급자의 요구사항

탈북 청소년 지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교사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들은 탈북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해당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일치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들은 탈북 청소년 개인별 특성과 수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탈북 청소년들의 신상정보(나이, 학력, 거주지, 학습능력, 심리상태 등)와 그들의 욕구 및 희망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그들에 대한 올바른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및 민간단체의 탈북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과 관련 통계자료 등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다.

다. 수혜자, 즉 탈북 청소년들의 요구사항²¹⁾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합리적인 조언을 해주는 멘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탈북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직접 진학 또는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원한다. 한편 탈북 청소년들을 스스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길 원한다.

3. 타당성 검토

정보시스템 설계에 있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타당성 검토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설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이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실용적이라 해도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정보시스템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방면에 걸쳐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된 정보시스템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는 크게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치적 타당성, 문화적 타당성, 윤리적 타

21) 일반학교(중·고교), 대안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당성 등이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우선 정부 및 통일부의 탈북자 지원 사업은 10여 년이 넘었고, 따라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탈북자 및 탈북 청소년 지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적 기반이 마련되어있다. 이와 함께 탈북 청소년의 심리 및 동태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잘 진행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자료 조사가 용이하다.

하지만 탈북자 관련 정보의 특성, 즉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현실이다. 탈북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Database)도 모두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 경제적 타당성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아 2008년 10월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통일부 전체 예산 1098억 원 중 절반 이상인 553억 원(50.3%)이 탈북자 지원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0억 원은 탈북자의 교육훈련 및 정착금으로 지원됐고, 나머지는 하나원 증축과 행정지원 등에 사용됐다. 특히 탈북자 교육훈련 및 정착금은 2004년 59억 원에서 7.5배 가량 증가했다.²²⁾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원예산 510억 원 중에서 10억 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설치비용 8억 원, 인건비 2억 원) 정도만 지출한다면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시스템을 개발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능력과 자질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 청소년 관련 예산을 지난해 8억 원, 올

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도자료 ; 2008년 10월 15일 문화일보, 『새터민 지원예산 553억 실효성 낮다』

해 30억 원에서 내년에는 45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²³⁾ 또한 정부는 탈북청소년 지원대책에 현재의 3배 규모인 22억 원을 배정하고 계획이 확정되는 2009년 7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²⁴⁾

3) 정치적 타당성

우선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탈북자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참여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북한당국과의 마찰은 있을지라도 적어도 탈북자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²⁵⁾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4년 연장되어 탈북자에 대한 미국과 세계의 관심이 여전히 높으며, 미국NGO의 탈북자지원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탈북 청소년 지원시설 및 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다음 법적 타당성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09년 1월 30일 개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년 7월 31일 개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항을 비롯한 여러 개정 법령은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 개발의 법적근거로 된다.²⁶⁾

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탈북 청소년 신상정보 수집과정에 보안문제와 관련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은 어려서 북한을 떠나왔기 때문에 고향과 부모의 신상정보 같은 특수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만 잘 하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으리라고 본다.

23) 매일경제, 2009년 08월 13일,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24) 한국정책방송(KTV), 2009년 7월 16일,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25) 지난 정부와는 달리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가 탈북자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 탈북자들의 기대가 있다. (탈북자 심층면접)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6항에는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4) 문화적 타당성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심하다. 이와 함께 성인 탈북자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남한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거의 없는 성인 탈북자들에 비해 탈북 청소년들은 사고가 유연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⁷⁾

5) 윤리적 타당성

남과 북의 주민들은 한민족이며, 탈북자들은 북한 독재정치의 희생자들이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을 잘 준비시키면 이들은 남북한 통합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들을 이 땅에 잘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통일의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나, 민족정서의 측면에 있어서나 합당하다고 본다.

4. 비용·효과 분석

1)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및 예상 지출액

[표 4]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설계 예산안(가정)²⁸⁾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비고
하드웨어 구입비용	5억 원	시스템 관리실 및 사무실은 통일부 혹은 관련 정부 부처의 사무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망 관리자, 기계실 요원 등 인원은 기존 시스템의 종사자들을 그대로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programmer 인건비 위주)	1억 5천만 원	
Database 구축비용	1억 원	
네트워크 구축비용	5천만 원	

27) 황진수·전신옥,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지원 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서울 :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p.10.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비 고
기타 예비비	(매년) 5천만 원	하면 될 것이다.
정보시스템 유지비용 (종사자 인건비 위주)	(매년) 2억 원	
합 계 (첫 해 비용)	10억 5천만 원	두 번째 해 부터는 매년 2억 5천만 원씩만 지출.

2) 새로운 정보시스템 개발로 인한 이익과 효과

사실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당장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 정보시스템의 산출물은 경제적 이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 능력제고 및 자질 배양, 이에 따르는 탈북 청소년의 성공적 정착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이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능력을 배양하여 남북한 통합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가서야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탈북 청소년의 방황과 중도탈락 문제로 인한 후유증, 즉 범죄, 중독 및 사회일탈현상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탈북 청소년 정착지원에서의 성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그 성과를 성인 탈북자들의 정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직업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배우자 선택문제, 창업정보 및 자본금 지원 등 다양한 정착지원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역할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5.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의 구조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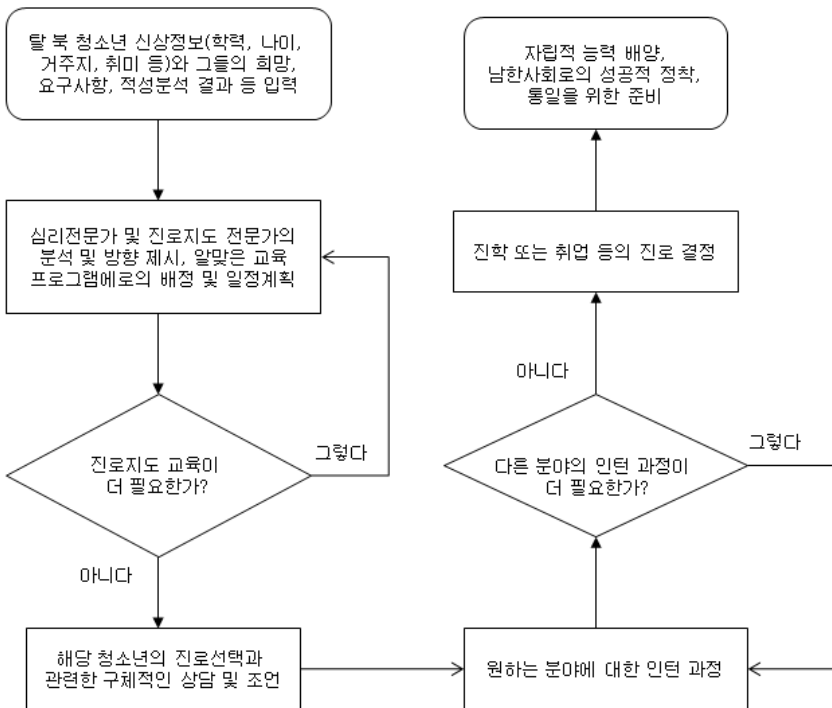
이 단계는 정보전략기획단계, 즉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ing)단계

28) 이 예산안은 세부항목별 지출을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려운 관계로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설계비용에 비추어 대충 추산한 것이다. ISP단계에서의 비용계산은 자세한 분석보다는 거시적이고 사전적인 분석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안문석, 2004, p.230.)

에서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정보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이다. 우선 정보시스템에 사용될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흐름도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 개발 절차를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 자료 항목(data item) 간의 상호관계 및 Database의 구조를 설명하고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및 네트워크(Network)의 규모와 종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1) 기본적인 flow chart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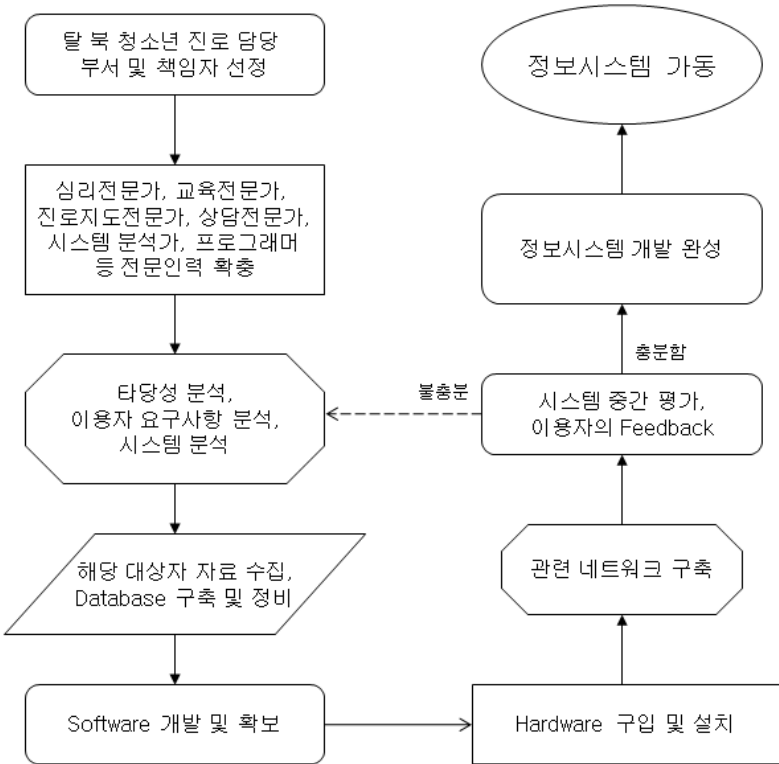
이 단계는 정보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형식의 대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아래의 그림은 진로지도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대략적인 흐름도이다.



[그림 1]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S/W)의 기본적인 흐름도

2) 정보시스템 개발 흐름도

이 단계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기획단계 중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설계단계로서 처리절차를 정하고 각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논리의 순서를 정한다. 아래의 그림은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의 개발과정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 흐름도

3) data item간의 상호관계

탈북 청소년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 항목(data item)에는 나이, 가족 관계, 신체적 특성, 현재 학력 및 소속 학교, 탈북 전 학력, 고향, 현재 거주지, 국내 입국연도, 중국 및 3국 체류기간, 중국에서의 재학여부,

심리검사자료, 적성검사자료, 건강검진자료, 취미, 희망(꿈), 1차 진로결정 여부 등이 있다.

각 데이터 항목들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심리상태 및 가족관계는 꿈과 희망을 가지는데 일정한 영향을 준다. 가족관계가 원만한 청소년들은 비교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있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한다. 다른 한편 성장기의 영양부족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많은 경우 신체적 발달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열등감이 있으며, 이것은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청소년들은 대체로 남한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한다. 한편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차별화 되는 경향도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목표에 대한 확신은 1차 진로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4) Database 구성 및 구조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에서 이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위에서 열거한 자료 항목들을 위주로, 그 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들(예를 들면, 부모의 신상정보, 가계소득 등)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한편 Database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 청소년의 신상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정보시스템의 종사자들이 철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보유출에 대한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탈북 청소년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데 있어서도 검증된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국한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탈북 청소년 관련 자료 사용에 대한 약관(규약)과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5) 필요한 소프트웨어(S/W)의 종류와 범위

우선 통일부에 탈북자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청소년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및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의 프로

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소프트웨어(Software)를 자체개발 하던가 아니면 외부업체에 주문을 하는 방법도 있다.

6) 하드웨어(H/W)의 규모와 종류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탈북 청소년의 정착지원과 진로지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하드웨어 구입에 있어서는 심리전문가, 교육전문가, 시스템전문가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의하여 적합한 모델을 구입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정보시스템은 탈북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잘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크 테스트(Benchmark Test) 방법을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⁹⁾

7) 네트워크(Network)의 규모와 종류

우선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통일부 및 관련 정부 부처들을 중심으로 탈북자 지원 단체, 정규학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등을 망라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탈북 청소년 정착지원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 이것을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하나의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정보시스템)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남북한 통합시대에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 간의 격차를 없애고, 북한 청소년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9) 벤치마크 테스트란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차, 도구 또는 프로그램을 나타내며, 주로 비교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재웅·신석규, 2005, p.37.)

6.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의 의의

우선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정보시스템은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1차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진로선택 능력과 교육수준, 전반적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은 다가올 남북통합시대에 가서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선진문화를 보급하고, 선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이라 규정한 10~29세의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 3월 현재 6천여 명으로서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0%에 해당한다.³⁰⁾ 한편 선행연구와 심층면접에 의하면 10대, 20대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스트레스가 가장 크며 특히 20대의 진로고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20대 탈북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선택의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탈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선택하는 문제이며 선택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기회는 오히려 심리적 안정과 합리적인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대학졸업생도 취업이 어려운 사회현실은 탈북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적성이나 인생목표를 고려함이 없이 맹목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다.

한편 심층면접에 의하면 탈북 청소년의 1차 진로결정(하나원 직후의 선택)은 향후 남한사회 적응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0)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실

하지만 하나원을 수료할 당시의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 진로선택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1차 진로선택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민간단체 또는 교육기관들에서 일부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탈북 청소년들 개인별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하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본 연구논문은 탈북 청소년들을 둘러싼 진로 및 교육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적응현황 및 진로선택 능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초점을 맞춘 정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보시스템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 및 탈북 청소년 관련자료 수집에서의 특수성³¹⁾ 등을 감안할 때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정보시스템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개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탈북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통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능력을 높이고 그들이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대해본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본 연구논문에서는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초단계인 ISP(정보전략기획)단계를 설명하였다. 즉 논문의 III장은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한 “ISP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ISP 보고서에는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정보시스템의 대략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까지 포함된다. 우리 정부가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세분화,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적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진로선택을 도와주는 동시에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복과 낭비

31) 탈북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성공사(탈북자 조사기관)와 하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를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서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정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탈북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관련 연구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윤숙,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적응』,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7)
김충기,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고양 : 한국학술정보, 2002)
이상민 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서울 :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7)
이현림 외, 『진로지도와 상담』, (경산 :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홍후조 외, 『중·고교생을 위한 직업·진로 탐색자료 개발 : 최종보고서』,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2007)
황정덕, 『(유아교육에서 진로선택까지) 일등교육으로 가는 길』, (서울 : 서문당, 1992)
안문석, 『정보체계론』 제5판, (서울 : 학현사, 2004)
Ralph M. Stair, George W. Reynolds, 『Principles of Information Systems : A Managerial Approach』 6th ed, (Boston : Course Technology, 2003)

[논문]

- 금명자 외,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2호, (서울 : 한국심리학회, 2004)
김형태,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1호, (서울 : 한국가족관계학회, 2008)
박명숙·안희수, 『탈북청소년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 『춘계학술 발표회 및 교육심포지엄』, (서울 : 한국지구과학회, 2004)
안효덕, 『무연고 새터민 청소년 현황과 과제』, (서울 : 무지개청소년센터, 2008)
윤인진 외, 『새터민 여성 청소년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6)
이수연,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1호, (서울 : 한국청소년학회, 2008)
이정우,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 성과와 과제』, 『법교육연구』 제2권 1호, (서울 : 한국법교육학회, 2007)
장문강,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VOL. 19, (서울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8)
장해경, 『새터민 가족의 문제와 정책방향』, (서울 : 한반도평화연구원, 2008)
정진경 외,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서울 : 한국심리학회, 2006)
조영아, 『북한이탈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 방향』, (서울 :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 6. 4 칼럼)
황진수·전신욱,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지원 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서울 :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공윤정·김혜숙, 『진로지도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청소년상담연구지』 제4권 1호,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1996)
박선화·박현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제6권 1호, (서울 : 한국심리학회, 2009)
엄영순·최연실,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 적응의

-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4호, (서울 : 한국가족관계학회, 2009)
- 이시연·박은미,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1호, (서울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9)
- 임병웅,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진로교육 개선방안』,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34권 1호, (서울 : 대한공업교육학회, 2009)
- 임병호·정동양, 『국가별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실태 비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일본』, 『한국기술교육학회지』 제7권 2호, (서울 : 한국기술교육학회, 2007)
- 김재웅·신석규, 『소프트웨어 벤치마크테스트(BMT) 현황』, 『정보처리학회지』 제12권 2호, (서울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정기 간행물]

- 김미숙, 『북한이탈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친구』, 『교육비평』 제21호, (서울 : 교육비평사, 2006)
-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적응실태』, 『北韓』 통권 제415호, (서울 : 북한연구소, 2006)
- 윤홍은, 『새터민 아이들은 왜 학교를 떠나나』, 『중등우리교육』 통권 제209호, (서울 : 우리교육, 2007)
- 이향규, 『새터민 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과제』, 『교육비평』 제21호, (서울 : 교육비평사, 2006)
- 교육과학기술부,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대폭 확대』, 보도자료,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7. 5. 1)
- 교육과학기술부,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대폭 강화된다』, 보도자료,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7.16)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안)』,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2009. 5)

[신문 기사]

2009. 6. 8일 연합뉴스, 『경기북부 탈북자 적응지원센터 개소』
2009. 7. 31일 연합뉴스, 『현 통일부장관, 탈북 청소년 배움터 방문』
2009. 7. 31일 한국일보,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
2009. 7. 16일 매일경제, 『안병만 교과부 장관 “탈북 청소년 학교 지원”』
2009. 8. 13일 매일경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2009. 8. 16일 데일리NK, 『탈북청소년 후원 기금 마련 콘서트 열려』
2009. 7. 16일 한국정책방송(KTV),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웹 사이트]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주민 홈페이지(<http://saetermin.mes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한반도평화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reapeace.or.kr>)

2009 통일논문집 <비매품>

인쇄일 2009년 12월 28일

발행일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 소 142-715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전화 (02) 901-7122 / 팩스 02) 901-7024

편집·인쇄 광신종합인쇄

전화 02) 2277-4533 / 팩스 02)2274-2948

통일교육원

이 책자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또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